

2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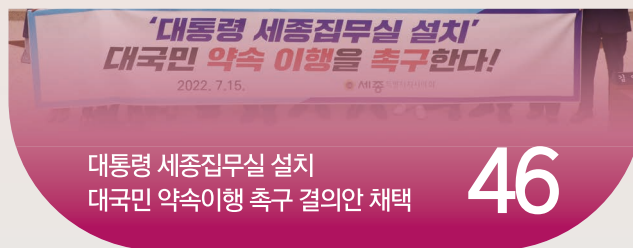
통권 제34호



+ 입법정보

세종시의회 소식

세종시의회 10년
시민의 미래, 세종의 미래



세종 특별자치시의회
SEJONG CITY COUNCIL

존경하는 39만 세종시민 여러분!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최민호 시장님과
최교진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장 상병헌입니다.

먼저, 집중호우와 태풍 피해로 고초를 겪은 이재민 여러분과 유가
족에게 비통한 심정으로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아울러, 태풍 대비와 피해 복구를 위해 헌신하고 계신 전국의 자원
봉사자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UN에서 제정한 세계 민주주의의 날입니다.

전 세계가 민주주의 가치와 의미를 되새기는 날에 제4대 의회의
첫 정례회를 개최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민주주의의 날을 맞아 과거 독재에 맞서 민주화운동을 벌여야 했
던 역사를 기억하는 동시에 민주주의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해 우리 모두가 함께 풀어야 과제가 있습니다.

바로 지방자치제도의 근본적 취지인 자치분권을 강화하는 것입니
다. 특히 대의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지방의회가 인사권 독립에도
불구하고 조직권과 예산권의 부재로 독립기관으로서 독자적인 운
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로 향하는 주민 주권의 헌법적가치를 지키는 길은 주민
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민의를 반영해온 지방의회에 그동안 결여
돼있던 권한을 채워주는 것입니다. 이는 32년 만에 개정된 현행
지방자치법률의 시행 취지에 부합할 뿐 아니라 비대해진 집행부
를 시민의 명령에 따라 견제하고 감시하는 데에 반드시 필요한 요
소입니다. 관련하여 국회 운영에 필요한 사안들을 국회법으로 규
정한 사례와 같이, 조직권과 예산권 등을 포괄하는 지방의회법을
제정하는 데에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국민의 요구와 시대의 변화에 발맞춰 풀뿌리 민주주의가 이 땅에

울곧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우리의 뜻을 모아 의미 있는 변화를 이끌어냅니다.

20여년 전 국민과 약속한 행정수도 건설이 국가 균형 발전이라는 시대적 소명에 발맞춰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정부의 내년 본 예산안에 대통령 세종집무실 기본 설계비 예산 1억원이 반영된 것은 예산 규모를 떠나 대통령 제2집무실 설치를 전제로 한 예산 편성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깊습니다. 더욱이 정부가 이번 달 내로 관계부처인 국무조정실과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행정중심복합 도시건설청 합동으로,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 추진단 발족을 공식화한 만큼,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 로드맵에 따른 실무 협의가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같은 소식은 반길 일이지만, 대통령 세종집무실의 완공 시기에 따른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2027년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시기와 맞물려 완공될 예정인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 이전에 현재 정부세종청사 내 임시 공간으로 마련된 대통령 집무실 활용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합니다. 세종시의회가 시민사회와 함께 외쳐온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내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가 정부 로드맵에 반영되지 않은 만큼 2027년 완공이라는 장밋빛 청사진만이 아닌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 즉, 당장 실행에 옮길 수 있는 대통령 임시집무실 활용 계획을 소상히 밝혀야 할 때입니다.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한 국민과의 약속은 지켜져야 합니다. 당초 윤석열 대통령께서 하신 공언대로, 세종에서 격주로 국무회의를 개최하고 월 1회 중앙지방협력회의가 열리는 모습을 균형발전을 염원하는 세종시민들을 비롯한 많은 국민들께서 고대하고 있습니다.

과감한 결단과 강단 있는 추진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대통령 임기 초반부터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한 강력한 정책 지원책이 펼쳐져야 오랜 시간 고착된 수도권 중심주의에서 차츰 벗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정부에서 미래전략수도로 천명한 세종시를 구심점으로 대한민국이 고루 잘 사는 지방시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더욱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시길 기대합니다.

오늘 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제78회 제1차 정례회가 10월 19일까지 35일간 열립니다. 이번 회기 중에는 2021회계년도 예산결산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예정돼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시 행정 전반에 걸쳐 잘못되었거나 미흡한 점을 바로잡고 행정편의주의에서 벗어나 실효성을 높이는 실무 방안 및 정책 방향을 요구하는 시민의 명령이자 의회 고유의 권한입니다. 우리 의회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의정 역량 강화에 힘써왔으며, 상시 시민제보를 통해 다양한 의견과 요구사항을 수렴했습니다.

지방자치법 개정 취지에 맞는 자치분권 확립을 목표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세종시민들께서 기대하시는 변화의 모습을 충실히 이끌어 내겠습니다. 우리 의회가 먼저 열심히 일 잘하는 의정을 실현한다면, 시민들께서도 앞장서서 의회에 필요한 부분들을 보완하는 데에 든든한 후원자, 지지자가 되어주실 것입니다.

끝으로, 얼마 전 유명을 달리한 세종시청 직원의 명복을 빌며 심히 상심해 있을 유가족분들께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모두는 조직을 구성하는 공무원이기 전에 마땅히 존중받고 사랑받아야 할, 아들이자 딸, 아버지이자 어머니입니다. 연이은 참담한 소식을 더 이상 묵과해서는 안되는 이유입니다. 냉철한 자기반성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를 토대로 세종시청 구성원들이 떠안고 있는 조직 구조의 문제를 진단하고 업무상 정신적 고통과 막중한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직원들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방안도 강구해야 합니다. 일하는 직원이 행복해야 우리 시민들의 진정한 행복을 바라는 정책이 펼쳐질 수 있습니다.

활기 넘치는 조직문화를 만들어 가는 데에 최민호 세종시장님과 최교진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 각고의 자세로 동참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 개회사를 마치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 의장 **상병현**

통 권
제34호

세종의회의안서

세종시의회 10년
시민의 미래, 세종의 미래

CONTENTS



QR코드를 통해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만나보세요!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인터넷방송〉을
볼 수 있습니다.



- 04 특별기획 1
- 06 특별기획 2
- 16 의정 포커스 1
- 18 의정 포커스 2
- 20 의정뉴스
- 36 5분 자유발언
- 44 긴급현안질문



세종 특별자치시의회
SEJONG CITY COUNCIL



46 결의안

54 논평

56 상임위원회 · 특별위원회 활동

의회운영위원회

행정복지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

교육안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67 공공특위

69 주요 안건 처리 현황

74 마인드맵으로 본 조례

77 입법정보

생활 법령

최근 공포법령

최근 국회 본회의 통과 주요법안

최근 국회 접수 주요법안

최근 입법 예고(주요법령)

법령 해석사례

최근시행법령

타자치단체 최근 제개정 자치법규

100 의원 발언함

106 언론에서 본 의정활동

108 의회 운영 홍보채널

세종시의회, 전반기 원 구성 완료…역사적인 개원 ‘새롭게 시작하는 10년, 함께 만들어가는 세종’ 발표



개원식 종료 직후 제4대 의회 기념식수와 전반기 의정 목표를 담은 슬로건 ‘새롭게 시작하는 10년, 함께 만들어가는 세종’을 첫 공개하는 헌판 제막식을 진행했다.



상병헌 의장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의장 상병헌)는 여야 간 합의를 통해 제4대 의회 전반기 원 구성을 완료했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7월 1일 오후 2시에 열린 제76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제4대 전반기 의회를 이끌 의장과 제1부의장을 선출했다.

무기명 투표 방식으로 진행된 의장단 선거 결과 상병헌 의원이 의장에 당선됐으며 박란희 의원은 제1부의장으로 선출됐다.

상병헌 의장은 당선 인사를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상황 매우 엄중한 시기에 중책을 맡게 되어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시민에게 희망을 주고 열심히 일하는 의회를 만들겠다”는 각오를 드러냈다.

또한 “미래를 선도하는 도시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의원들과 함께 고민하고 준비해서 비전을 제시하는 의회로서의 소임을 다하겠다”며 “소통과 협치를 통해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시민의

입장을 대변하겠으며 오늘 첫걸음을 뗀 제4대 의원들과 함께 세종시가 미래로 힘차게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란희 제1부의장은 당선 인사에서 “세종시의회의 새로운 10년을 열어가는 제4대 의회 전반기는 열린 의회, 일하는 의회를 지향하고 시민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해 제1부의장으로서 책임을 다할 것”이라며 “여소야대라는 새로운 정치 지형 속에서 정쟁이 아닌 오직 민생, 오직 시민들을 바라보면서 협치와 견제라는 본연에 역할에 충실한 건강한 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시의회는 7월 5일과 6일 제76회 임시회 3·4차 본회의를 열고 제2부의장 사임의 건 및 재선거와 각 상임·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및 위원장 선거의 건을 처리했다.

재선거 결과 김학서 의원이 전반기 제2부의장으로 당선됐다. 김학서 제2부의장은 당선 소감을 통해 “앞으로 교육 및 도농 균형 발전, 의원 소통과 화합, 협치로서 의회가 발전하는 데 일익을 담당하겠다”는 각오를 내비쳤다. 세종시의회는 각 상임위원장 선거를 거쳐 ▲임채성 행정복지위원장 ▲이순열 산업건설위원장 ▲이소희 교육안전위원장을 선출했다.

임채성 행정복지위원장은 당선 소감에서 “앞으로 위원회 차원에서 담당 부서와 진실하게 소통하고 때로는 냉철하게 비판함으로써 시민의 행복과 복리 증진에 일조하도록 노력하겠다”며 “이를 위해 소통과 협치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시민들로부터 인정받는 위원회를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이순열 산업건설위원장은 “출범 10주년을 맞은 세종시가 대한민국 대표 미래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시의회와 집행부의 협업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한다”면서 “한창 공사가 진행 중인 우리 시 특성을 감안해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하기 위

해 힘을 모으겠으며 시민들의 일상이 조금 더 여유로울 수 있도록, 생활환경과 자연환경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지속 가능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당선 소감을 남겼다.

이소희 교육안전위원장은 당선 소감을 통해 “교육열이 뛰어난 세종시의 상황을 고려해 미흡한 부분들을 개선해서 대한민국의 교육을 선도하는 도시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며 “코로나19로 인해 시민들뿐 아니라 많은 국민들이 큰 고통을 받은 만큼 앞으로도 재난과 안전에 철저히 대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시의회는 3개 상임위원회 구성이 완료됨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의를 거쳐 부위원장을 선임한 데 이어, 본회의에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선임과 위원장 선거를 실시하고 유인호 의원을 의회운영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유인호 의회운영위원장은 “의원들의 작은 의견도 소중하게 생각하고 이를 의회 운영에 반영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노력하겠다”면서 “의회 기능을 활성화하여 의회 위상을 높여가도록 위원장으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의회운영위원회는 위원장 선출 직후 회의를 열어 부위원장 선임의 건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이어진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 결의안을 최종 의결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처리했다.

세종시의회는 윤리특별위원회 김광운 위원장과 여미전 부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신일 위원장과 김충식 부위원장 선임을 끝으로 전반기 원 구성과 관련된 모든 의사일정을 마쳤다.



박란희 제1부의장

김학서 제2부의장

유인호 의회운영위원장



임채성 행정복지위원장

이순열 산업건설위원장

이소희 교육안전위원장

2022년 행정사무감사 '현장' 속으로

66

날카로운 지적과 합리적인 대안 제시
99

지난 7월 1일 제4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개원 이후 첫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올해 행정사무감사는 9월 26일부터 10월 5일까지 진행됐으며 첫 감사 일정에도 날카로운 지적과 합리적인 대안 제시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실제로 지난 10월 11일 세종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에서 발표한 행정사무감사 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피감기관 업무에 대한 이해도’와 ‘자료 검토 및 질의 수준 등 전문성’, ‘참여도와 적극성’ 부분에서 의원 전원이 평균 이상의 점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의원별 주요 지적사항을 모아 소개한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광운 의원(조치원읍, 국민의힘)은 9월 27일 경제산업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효율적인 예산 수립을 통해 명시 사고 이월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김광운 의원은 이날 경제산업국 예산 집행 전반에서 공기 부족 등에 따른 명시 및 사고 이월 등의 비율이 50% 이상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 의원은 “지방채 발행이 198억원 정도 되는데 이렇게 많은 금액을 이월한다는 건 문제가 있다고 본다”며 “실제 21개 사업 중에서 10개 사업이 집행 금액 없이 전액 이월됐다”고 비판했다.

또한 경제산업국 업무 특성상 다년도 건설 사업이 많다는 답변과 관련해 “코로나가 지속된 지난 2년 동안 집행하지 못할 금액들을 애초에 세우지 않았다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충분한 검토와 체계적인 예측에 기반한 예산 집행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집행부에서 충분히 그리고 철저한 검토를 통해 예산 불용액과 이월액을 최소화해서 시민들에게 필요한 예산이 적시 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강력히 요구했다.

21개 중 10개 사업 집행액 없이 전액 이월돼





남는 예산 있는데 빚을 내 이자 부담한 건 큰 문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여미전 의원(비례대표, 더불어민주당)은 9월 27일 기획조정실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순세계잉여금이 2021년 기준 2,232억원으로 과다하게 발생했는데도 지방채 발행에 따라 2025년까지 약 133억원 규모의 이자를 부담하게 된 것은 우리 시 예산 운용의 문제를 여실히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소속 여미전 의원은 1일차 행감에서 순세계잉여금으로 남는 예산 문제를 지적하고 세입과 세출 예산에 대한 정확한 추계와 적극적인 예산 집행을 통해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예산 집행을 당부했다. 여 의원은 “적시 적소에 예산을 쓰지 않아 발생한 과다한 순세계잉여금도 문제지만, 우리 시 재정에 대한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하지 못한 탓에 채권을 발행해 시민 혈세로 이자를 부담한 건 예산 운용의 심각한 문제를 드러낸 것”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집행부가 예산을 운용할 때 내 돈이라면 이렇게 했을까, 하는 아쉬움이 든다”며 “내 집 살림하듯 예산을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해서 우리 시 재정 건전성 향상에 힘써 달라”고 주문했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 김현옥 의원(새롬동, 더불어민주당)은 9월 27일 세종시교육청 소관 2022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청렴도가 매해 하락해 평가지표 5등급까지 이르게 됐다며 개선의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 든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김 의원은 “갑질, 음주운전, 성폭력·성희롱과 같은 사안이 교육 기관에서 계속해서 발생하는 것 자체에 문제점이 많다”며 “사안의 경중을 따지기보다는 세종교육의 도덕적 가치 기준을 높일 수 있도록 차별화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한, 투명한 정보 제공을 통해 세종시교육청에 대한 시민 불안이 가중되지 않도록 청렴 감사 운영에 만전을 기해 줄 것과 강력한 처벌 의지로 최하위 등급인 청렴도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내 식구 감싸기가 되지 않으려면 역동적이고 젊은 세종시의 위상에 맞는 강도 높은 청렴도 향상 대책이 추진되어야 한다”며 “안심하고 신뢰하는 기관이 되도록 시의원으로서 개선사항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겠다”고 말했다.

교육청 청렴도 매해 하락해 5등급까지…개선 의지 의문





최원석
의원

도담동, 국민의힘

세종시법 적극 해석 통해 보통교부세 비율 늘려야

“지방교부세의 정의를 보면 지방 불균형 완화에 방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는 전 국민 모두에게 적용되는 평등권과 행복추구권과도 연계된 사안인 만큼 적극적인 법령 해석이 필요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최원석 의원(도담동, 국민의힘)은 9월 27일 기획조정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제주특별자치도에 비해 우리 시가 현저히 낮은 보통교부세를 받는 근본적인 이유는 기초사무에 대한 보통교부세가 지급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지적하며 이같이 말했다.

최 의원은 기획조정실에 세종시 보통교부세 산정에 관한 법령 유권 해석 여부를 집중적으로 추궁하면서 세종시법 제8조와 제14조를 근거로 “기초사무 인정이 충분히 가능해 보인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세종시법 제8조에는 ‘다른 법령에서 지자체, 시도 또는 시군구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 각각 세종시를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고 명시돼 있으며, 같은 법 제14조에는 ‘광역시세 및 구세 세목을 세종시의 세목으로 부과 징수한다’고 규정돼 있다. 최 의원은 “유권 해석 여부를 확인한 이유는 보통교부세 확대 차원에서 접근할 수 있는 조항들이 충분히 있기 때문”이라면서 “언급한 세종시법에서 규정한 내용을 적극 해석하면 세종시가 기초사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만큼 다양한 논리 개발을 통해 보통교부세 확보에 더욱 힘써 달라”고 주문했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채성 행정복지위원장(종촌동, 더불어민주당)은 9월 28일 자치행정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각 실국을 포함한 읍면동의 보통예금 계좌를 철저히 관리해 각종 사건 사고의 위험을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임채성 행정복지위원장은 최근 불거진 기초단체 공무원의 115억원 횡령 사건을 언급하며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중대한 사건으로 행정안전부에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전국적으로 보통예금 계좌 등 일제 정비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세종시는 공공예금과 보통예금 계좌를 활용해 세종시 지출 및 수입을 관리하고 있다. 공공예금은 입출금이 자유롭지 않아 사고의 위험성이 크지 않지만 보통예금 계좌의 경우 사건 사고의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임 위원장은 “자체 정비를 충실히 이행했다면 읍면동별 미사용 계좌 해지나 유사 목적 계좌 통폐합을 지체 없이 실시해야 하는데도 여전히 해지되지 않은 계좌가 남아 있는 만큼 후속 조치와 지속적인 계좌 점검에 각별히 유념해 달라”고 말했다. 또한 보통예금 계좌를 통해 자금 배정을 받은 읍면동사무소에서 당일 지출을 원칙으로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해 달라는 당부도 있었다.

읍면동 보통예금 계좌 점검해 사건사고 위험 없애야



임채성
의원

종촌동, 더불어민주당



이소희
의원

비례대표, 국민의힘

단체명 변경해 마을학교 운영기관 승인한 교육청 부실 행정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이소희 의원(비례대표, 국민의힘)은 2022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마을학교 선정 및 교육 수준 저하 등 세종시교육청의 부실한 교육정책 추진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다.

이 의원은 9월 27일 기획조정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마을학교 운영 기관 선정과 관련해 단순히 단체명을 변경하여 승인한 것은 교육청의 잘못된 행정이며, 자문기구를 통해 결정되었기 때문에 문제없다는 식의 주장 또한 책임행정이라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9월 28일 교육정책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초등학교와 중학교 정보 플랫폼인 학교알리미에 공시된 2021년도 관내 학교 학업 성취도를 근거로 “특히 중학교의 경우 학력 양극화가 심각한 상황”이라고 깊은 우려를 표했다. 그러면서 “학력 저하 문제는 학력 격차와 학력 불평등의 심화, 나아가 학력이 하향 평준화된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며 “이러한 점들을 고려해 교육청은 학력과 관련한 우려를 간과하지 말고, 세심히 교육 현장을 살펴 자료를 분석하고 정책을 수립하려는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 안신일 의원(한솔동·장군면, 더불어민주당)은 9월 28일 세종시교육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육환경 등을 개선해 혁신학교 만족도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안신일 의원은 교육청 주요 정책인 혁신학교 운영과 관련해 뚜렷한 학업 성과를 내야만 학부모들이 안심하며 혁신학교 운영 취지에 공감할 수 있는데 우리 시 혁신학교는 그렇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혁신학교 운영에 관한 만족도 조사를 신뢰도 높은 여론 조사 기관에 의뢰하고, 조사 대상 인원도 폭넓게 다양화하여 혁신학교의 장점을 살려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특히, “최근 전국에서 세종의 학생들이 우수한 성과를 내고 있지만 미래 교육의 발판은 지난 과거의 노력을 잊지 않는 것”이라며 “학생들의 기초 학력 저하라는 부정적 평가를 종식하는 데도 교육청이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미래 교육을 위해 과감하게 정책 변화 시도할 때



한솔동 · 장군면, 더불어민주당

안신일
의원



박란희
의원

다정동, 더불어민주당

KTX역 세종시 남북권 조성 면밀하게 추진

세종특별자치시의회 박란희 의원(다정동, 더불어민주당)은 9월 27~28일 경제산업국과 미래전략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저조한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률에 대한 지적과 함께 KTX역 세종시 남북권 조성 추진 현황에 대한 면밀한 추진을 주문했다.

박란희 의원은 9월 27일 경제산업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관내 300인 이상 기업에도 지역 인재를 채용할 수 있게 노력해 달라고 주문하면서 “관내 기업 현황을 철저히 파악하고 관계기관과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지역 인재를 우선 채용할 수 있도록 업무를 추진해 달라”고 강조했다. 9월 28일 미래전략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는 KTX역 세종시 남북권 조성 추진 현황을 파악하고 집행부의 안일한 대응을 지적했다. 박 의원은 “현재 세종시는 국회 세종의사당,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 등 KTX 세종역 신설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할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KTX역 남북권 조성이라는 ‘투트랙 전략’이 자칫 행정력 낭비로 이어지지 않을까 염려된다”면서 “우려가 현실이 되지 않도록 면밀한 검토를 거쳐 사업을 추진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 김효숙 의원(나성동, 더불어민주당)은 9월 29일 교육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학생들이 학교생활에서 가장 기대하는 급식 시간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부실한 급식 지원체계를 바꿔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효숙 의원은 교육청 교육행정국을 대상으로 “지난 추경을 통해 세종교육청 급식 지원금액을 증액한 것인데도 2022학년도 하반기 시도별 급식비를 살펴보면, 17개 시도 중 최하위권에 속하는 14위(3,315원)에 불과하다”며 “전남은 4,426원으로 세종과 1,000원 넘게 차이이며 경기도(4,168원)와 제주도(4,168원)도 4,000원을 넘어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무상급식 식품비 외 친환경·우수 농산물과 현물 등을 지원하는 추가 지원금의 경우 경북이 1,083원으로 가장 높고, 인근 도시인 대전이 300원, 충남 320원, 충북 526원인 데 반해 세종은 13원으로 최하위에 머무르고 있다”며 “교육청의 지원 의지에 따라 충분히 지원금을 상향할 수 있음에도 수년째 그대로”라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에서 본격 확대할 예정인 카페테리아(자율배식) 급식 사례를 근거로 “타 시도에서 다양한 정책을 진행 중이고 학생들의 입맛도 바뀌고 있는 만큼 세종시교육청도 단가 상향을 비롯한 급식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남에 비해 천원 부족한 세종시 급식비, 최선입니까?



김효숙
의원

나성동, 더불어민주당



김현미
의원

소담동, 더불어민주당

읍면동 자료 부실 통합 관리 미흡… 관내 업체 계약 확대

“집행부에서 제출한 읍면동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부실하고 자료 통합 관리 역시 미흡하다. 또한 계약을 진행할 때 관내 업체와 우선 계약을 적극적으로 추진해달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현미 의원(소담동, 더불어민주당)은 9월 28일 자치행정국 읍면동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각 읍면동별로 서식을 비롯해 같은 요구자료인데도 각기 다르게 작성한 부분은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읍면동별로 축제 등의 사업이 집행되지 않았는데도 이에 대한 사유를 행감 자료에 누락한 점을 지적하고 향후 이를 통합 관리하고 관련 자료를 상세히 제출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냈다.

또한 김 의원은 읍면동별 사업에서 관내 업체와 계약이 저조한 상황과 이유에 대해 질의하면서 관내 모든 업체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계약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주문했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동빈 의원(부강·금남·대평, 국민의힘)은 9월 28일 미래전략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금강보행교 인수를 급하게 서두른 점에 대해 “성급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무려 1,200여억원이 투입된 대규모 사업인데도 공공시설물 인수점검 특별위원회의 현장 점검 과정에서 나온 개선 요구사항들을 어떻게 후속 조치했는지 보고조차 이뤄지지 않은 채 보행교 인수가 이뤄졌다”며 아쉬움을 표명했다. 이어 “추가 시설물 보완이 필요한 상황인데도 성급하게 인수한 결과 시에서 이번 추경 예산안에 시설물 보완 예산 4억원을 편성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공공시설물 인수 절차에 대한 개선을 촉구했다. 특히 세종시를 대표하는 명소라는 수식어가 무색할 정도로 장애인과 노약자를 위한 배려가 부족했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그러면서 “평등과 행복을 함께 누릴 수 있는 도시를 조성해야 한다”며 “집행기관에서 공공시설물 인수 이후에는 우리 시민으로 운영된다는 점을 명심해서 인수 전 단계에서 의회와 개선 및 보완점, 후속 조치까지 충분히 논의해주길 바란다”는 당부를 전했다.

공공시설물 인수 전 개선사항 충분히 검토해야



김동빈
의원

부강·금남·대평, 국민의힘



김충식
의원

조치원읍, 국민의힘

33개 산성 복원 등 통해 관광문화 산업 활성화해야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충식 의원(조치원읍, 국민의힘)은 9월 30일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조치원읍 등 읍면 지역 주민의 문화 향유의 기회를 늘려 달라”고 말했다.

김충식 의원은 “민간 위탁으로 추진한 조치원 문화정원의 경우 시설물 유지 관리에 대한 소극적인 대처 문제를 비롯해 인근 주민들에게 생활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며 민간 위탁 추진 근거와 문제점을 질의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산성 복원 문제를 제기했다. 현재 세종시에 있는 33개 산성을 복원해 세종시만의 특색있는 관광 명소로 육성함으로써 침체된 관광 산업을 활성화하자는 취지다.

김 의원은 “아직 개발 중인 우리 시 특성상 가족 단위로 방문할 만한 관광 명소가 상대적으로 적은 만큼 산성 복원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관련 사업을 적극 추진해 달라”고 요구했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재형 의원(고운동, 더불어민주당)은 9월 29일 보건복지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노인 복지 및 고령사회 기본계획 수립과 보건복지 분야 민원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김재형 의원은 보건복지국에서 제출한 노인 복지 및 고령사회 기본계획 자료에 대해 요구한 내용과 맞지 않을 뿐 아니라 조례에 규정돼 있는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보건복지국의 업무 특성상 사회 복지 일선에서 많은 민원을 처리하고 있어 많은 어려움이 있겠으나, 향후 계획에 관한 내용 등을 민원인에게 안내하는 등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는 제언도 전달했다.

특히, 어르신들의 문화와 전시회, 생활체육 등 여가활동 및 교육 기능을 담당하는 노인문화센터 운영과 관련해 “필요한 예산이 적정하게 쓰일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또한 시설관리 기준 등이 마련되어야 한다”면서 세종형 노인문화센터에 관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조례에 명시된 노인복지·고령사회 기본계획 수립 필요



김재형
의원

고운동, 더불어민주당



김학서
의원

전의 · 전동 · 소정, 국민의힘

체계적인 데이터 관리로 원활한 정책 추진 기반 마련해야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 김학서 의원(전의 · 전동 · 소정, 국민의힘)은 9월 30일 교육청 소관 2022년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 신설을 위한 학생 수요예측 및 기초학력 관련 데이터 관리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김학서 의원은 “시 교육청이 학생 수요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학교 설립 계획을 수립한다면 머지않아 과밀 · 과소 학급 문제에 직면할 수 있는 만큼 사전에 충분한 수요예측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교육청 차원에서 공공데이터 생산 · 관리 · 분석에 대한 체계적인 ‘규정 표준화’ 작업을 선행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는 업무 담당자 변경에도 지속적인 정책 추진이 가능할 뿐 아니라 신규 공무원들의 업무역량을 강화하는 데 필요한 요소라는 주장이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내부적으로도 업무 표준화 · 정량화 · 객관화를 바탕으로 업무를 효율적으로 조율할 수 있어야 진정한 업무 경감이 이뤄질 수 있다”며 “과거 추진했던 정책의 단점과 부정적 효과를 토대로 미래를 설계하는 데이터 관리는 물론, 관련 정책 수립에 나서 달라”고 당부했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유인호 의원(보람동, 더불어민주당)은 9월 30일 문화체육관광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세종시문화재단의 높은 이직률에 대해 “총액 인건비 평가 시스템을 개선해 일하는 만큼 대우받는 조직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현재 세종시문화재단은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 지침에 따른 총액 인건비를 적용받고 있다”며 “하지만 총액 인건비를 계상할 때 만 2년 이상 만근 직원을 대상으로 샘플링하고 있어 가장 낮은 수준의 신입 직원 급여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세종시문화재단의 인력 공백 문제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현재 세종시문화재단 전 직원 70명 중 여성 인력이 41명에 달하는 데다 대부분 예술사업본부에 편중돼 있어 휴직 등에 따른 인력 공백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유 의원은 “노사 협의에 의해서 내년 9월부터 육아휴직 기간이 3년으로 늘어나는데 인력 공백이 계속 발생할 것”이라며 “우리 시의 성장 동력 중 하나가 관광문화 사업인데 문화재단이 내부적으로 조직 정비도 제대로 할 수 없는 여건에서 일을 하게 되면 우리 시 문화관광 사업 전반의 균형추가 맞지 않을 수 있다”고 제언했다.

세종시문화재단 총액 인건비 제한으로 직원들 상대적 박탈감



유인호
의원

보람동, 더불어민주당



윤지성
의원

연기 · 연동 · 연서 · 해밀, 국민의힘

공동주택관리 효율화를 위한 선제적인 적극 행정 주문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윤지성 의원(연기 · 연동 · 연서 · 해밀, 국민의힘)은 9월 29일 건설교통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민원 요청에 의한 공동주택 조사는 사후약방문(死後藥方文)인 만큼 선제적인 적극 행정을 해달라”고 주문했다.

이날 윤지성 의원은 “올해 9월 1일 기준 세종시 공동주택은 242단지 127,297세대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로 이에 따른 각종 분쟁도 지속 발생하고 있으나 민원이 있는 공동주택에 한해서만 직권 조사 등 공동주택관리법에 관한 감독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제4항에 따르면 입주 주민 등의 감사 요청이 없더라도 공동주택의 효율화와 입주자 등의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자체 직권으로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윤 의원은 “3년간 공동주택 감사 현황을 분석해보니 사업자 선정 지침 위반 등 유사한 유형으로 공동주택단지 내 분쟁이 발생하고 있었다”면서 “공동주택 관리 관계자들의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해 참고할 만한 사항을 담아 사례집을 배포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향후 공동주택관리 감사는 행정처분 중심이 아닌 공동주택관리법의 제정 취지에 맞도록 현장 지도와 자문의 형태로 진행되는 등 입주 민 보호를 위해 힘써 달라”고 주문했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이순열 산업건설위원장(도담동, 더불어민주당)은 9월 29일 건설교통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충분한 공지 없이 B5 노선을 변경한 행정 절차에 대해 “반복되지 않아야 할 미흡한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이순열 위원장은 “세종도시교통공사 홈페이지에 B5 노선 변경사항에 대한 공지가 시행일인 7월 15일을 얼마 남겨두지 않고 7월 7일에서야 이뤄졌다”며 홍보 및 공지 기간 미흡에 따라 시민 불편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기존에 운행하고 있던 버스 노선이 사라지면 가장 난감한 건 시민들”이라며 “현대인에게 인권과 같은 이동권과도 연계된 사안인 만큼 버스 노선 변경에 대한 공지는 충분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내년 3월쯤 완료될 예정인 세종시 버스 노선 개편 용역과 관련해 “우리 시민들이 버스 노선 변경에 대비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홍보와 설명 등에 더욱 힘써 달라”고 주문했다.

충분한 공지 없이 B5 노선 변경 이뤄져 시민들 당혹



이순열
의원

도담동, 더불어민주당



이현정
의원

고운동, 더불어민주당

치유농업법 시행과 관련된 후속 대처 지지부진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이현정 의원(고운동, 더불어민주당)은 10월 4일 농업기술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난해 8월에 각 광역시도로 치유농업사 양성기관 지정에 대한 공문이 내려왔음에도 우리 시는 지금까지 관련된 공고조차 내지 못하고 있다”며 조속한 대처를 주문했다.

이날 이현정 의원 발언에 의하면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 지난해 3월 25일부터 시행되면서 지자체 지정기관을 통한 치유농업사 국가자격증 취득 교육은 물론, 치유농장 품질 인증제 시행에 따른 농장주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이 의원은 “2021년 충청남도 농촌 체험학습장 농가당 평균 이용객이 코로나19 시국에도 23.6% 증가했고 치유농장 평균 소득액만 2,434만원에 달하는 등 치유농업이 주목받고 있다”며 “농기센터 차원에서 주도적으로 아젠다(의제)를 이끌어야 세종시 관련 부서에서도 더욱 적극적인 대응에 나설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충남은 올해 초부터 기본과정 100시간, 심화과정 50시간으로 구분해서 품질인증제 시행 교육을 2개 부서에서 동시에 추진하고 있으며, 광역치매센터와 연계해서 치유농가와 매칭 사업도 진행할 예정인 만큼 이미 시행 중인 타 시도 사례를 잘 분석해서 우리 실정에 맞게 접목하려는 노력도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김영현 의원(반곡동, 더불어민주당)은 9월 30일 세종시 시설관리공단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유사한 민원에 대해 세심하고 철저히 대응해 달라”고 주문했다.

김영현 의원은 이날 세종시청 누리집 ‘시민의 창’ 등 시민 제보로 파악된 ▲산업재해 은폐 ▲장례 도우미 업체 갑질 신고 ▲수영 강습 소홀 등 다양한 민원 사례를 소개하고 시설관리공단에 해명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시설관리공단과 관련된 민원이 다양한데 세세히 살펴 보면 거의 다 비슷한 민원 유형으로 파악된다”며 “경영진과 실무진이 힘을 모아서 민원을 줄이고 나아가 세 금으로 운영되는 시설 관리에 관한 시민 불편이 최소화되길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시설관리공단의 안전관리 책임자 등 경영 정보를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는 지방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 시스템인 ‘클린아이’에 수시로 현행화해 달라는 의견도 전달했다.

반복적인 시설 이용 민원 최소화하도록 노력해야



김영현
의원

반곡동, 더불어민주당

세종시의회 제78회 정례회 개회... 35일간 회기 진행

2021회계연도 예산 결산안 승인 및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등 의결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상병헌)는 9월 15일부터 10월 19일까지 35일간 회기를 진행하고 세종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1회 계연도 결산안 등 총 79건을 처리했다.



1차 본회의에서는 김동빈 · 김효숙 · 김현옥 · 유인호 · 김충식 의원의 5분 자유발언에 이어 김학서 의원이 긴급현안질문을 실시했다. 또한 세종시 제2차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과 제안설명의 건 등 7건이 처리됐다. 특히 세종시의회는 이날 김현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정치 · 행정 효율화를 위한 국회 전부 이전 축구 결의안’과 김동빈 의원이 대표 발의한 ‘KTX 세종역 설치 축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상병헌 의장은 개회사에서 “세계 민주주의의 날을 맞아 민주주의의 가치와 의미를 되새기는 동시에 민주주의의 가치를 계승 · 발전시키기 위해 주민주권의 헌법적 가치를 지키는 지방의회법 제정에 힘을 모아 야 할 때”라면서 “풀뿌리 민주주의가 이 땅에 울곧게 자리잡을 수 있도록 우리의 뜻을 모아 의미 있는 변화를 이끌어내자”고 말했다.



제78회 1차 본회의



제78회 정례회 2차 본회의

상임위원회별 안건 처리 현황

의회운영위원회	3건
행정복지위원회	36건
산업건설위원회	17건
교육안전위원회	8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8건



또한 상 의장은 “세종에서 격주 국무회의와 월 1회 중앙지방협력회의를 개최하는 모습을 균형발전을 염원하는 많은 국민들께서 고대하고 있다”며 “대통령 임시집무실에 대한 활용 계획을 소상히 밝혀서 세종시를 구심점으로 대한민국이 고루 잘 사는 지방시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더욱 강력한 의지를 보여줄 것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세종시의회는 이날 본회의를 시작으로 9월 22일까지 2021년 회계연도 예산결산,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심의했다.

이어 9월 26일부터 10월 5일까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10월 7일부터 10월 12일까지 세종시청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와 10월 14일부터 17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 심사를 진행했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10월 19일 열린 2차 본회의에서 세종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1회계연도 결산안 등 72건을 처리했다.

2차 본회의에서는 이순열 · 김효숙 · 이현정 · 김현미 · 김현옥 의원의 5분 자유발언에 이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안건을 의결했다. 세종시의회는 상임위원회별로 의회운영위원회 3건, 행정복지위원회 36건, 산업건설위원회 17건, 교육안전위원회 8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8건을 처리했다.

주요 처리 안건으로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세종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7 충청권 하계 세계대학경기대회 국제행사 개최 협약 동의안’, ‘세종시 보통교부세 확충을 위한 세종시법 개정 촉구 결의안’ 등이다.

세종시의회 구성 후 첫 제77회 임사회 개회

15일간 조직 개편 관련
조례 및 교육청 2차 추경 등
총 39건 처리



제7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상병헌)는 7월 15일부터 29일까지 15일간 원 구성 이후 첫 회기인 제77회 임시회를 진행했다.

1차 본회의에서는 세종시청 및 교육청의 올해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 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를 듣고 교육청의 제2차 추가경정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과 제안설명의 건 등 8건을 처리했다. 특히 세종시의회는 김현욱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와 관련한 대국민 약속 이행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고 예산 확보를 비롯한 구체적 이행방안 마련 등을 요구했다.

세종시의회 상병헌 의장은 개회사에서 “이번 회기를 시작으로 엄중한 경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현실적인 대안을 모색하겠다”며 “체감 물가 관리방안과 우량 기업 유치를 비롯해 정주 여건 개선에 필요한 의회 차원의 대응 방안을 적극 논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7월 19일



기념식수 표지석 제막식

상임위원회별
주요 안건
처리 현황

의회운영위원회	4건
행정복지위원회	11건
산업건설위원회	7건
교육안전위원회	4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건



에 열린 제77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는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16개 안건을 의결했다. 세종시청 조직 개편을 규정한 조례가 통과됨에 따라 ▲기존 정무부시장을 경제부시장으로 변경 ▲기존 자치분권국을 자치행정국으로 변경 ▲미래전략본부 신설에 따른 분장 사무 조정 등이 확정됐다.

각 상임위원회별 처리 안건을 살펴보면, ‘공유재산(은하수공원)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11건, ‘세종특별자치시 교육 학예에 관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주민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등 교육안전위원회 소관 4건이다.

7월 29일에는 제77회 임시회 3차 본회의를 열고 교육청 제2차 추가경정 예산안 등 15건을 처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이순열, 이현정, 김호숙, 안신일, 김현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에 이어 임채성 의원의 긴급현안질문이 이뤄졌다. 또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과 ‘공공시설물 인수점검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등이 의결됨에 따라 오는 9월 26일부터 10월 5일까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 계획과 공공시설물 인수점검 특별위원회 구성이 확정됐다. 특히 교육청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통과로 올해 세종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3,637억원 늘어난 1조 2,365여억원 규모로 운용된다. 한편, 세종시의회의는 이날 폐회 직후 화합과 협치를 다짐하는 기념식수 표지석 제막식을 개최했다.

세종시의 밝은 내일을 만드는 의정 뉴스를 전합니다.



세종시의회, 시급한 민생 현안 해결 위해 원만한 회기 운영 주력



원 구성 당시 약속한 여야 협치 정신 따라
집행부와 협력... 시민 소통 재차 강조



의회 전경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상병헌)는 7월 22일 시급한 민생 현안 해결을 위해 집행부와 긴밀한 협력 체계를 유지하는 등 소모적인 정쟁에서 벗어나 안정적인 회기 운영에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제77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는 코로나19 확산의 장기화로 침체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세종시의 미래 전략 대책을 수립하는 조직 개편을 골자로 한 ‘시청 조직 개편안’을 시급히 처리해 여야 협치의 모습을 보여줬다.

세종시의회는 엄중한 경제 상황에서 경제부시장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해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만큼 소관 상임위원회의 회의와 본회의 의결까지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쳤다는 입장이다. 또한 미래전략본부 신설 역시 행정수도 및 자족도시 완성이라는 세종시의 중차대한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적합하다는 공통된 인식이 바탕이 됐다.

특히 지난 7월 5일 제4대 세종시의회 원 구성 당시 여야가 합의하고 시민들과 약속한 협치 정신을 이어가겠다는 의회 차원의 각오와 의지를 밝힌 이후, 안전 처리를 위해 2차 본회의를 열어 시청 조직 개편안 및 교육청 소관 조례안 등 16건을 처리한 것은 주

요 현안 해결을 위한 교두보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처럼 세종시의회는 주요 민생 현안에 대한 집행부와 협력 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시민 여론을 수렴하기 위한 시민과 언론과의 소통 강화에 주력할 계획이다. 실제로 지난 7월 19일 원 구성 이후 첫 의장단 기자회견에서 지역 여론 청취와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 무산 논란 등 세종시 주요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발표한 것을 두고 시민을 대표하는 대의 기관으로서 시의적절했다는 여론도 적지 않다.

특히 지난 제3대 세종시의회에서 추진한 브리핑 방식을 보완해 첫 문답식 기자회견을 진행함으로써 지역 언론과 활발한 교류에 나설 것이라는 의지를 드러냈다.

상병헌 의장은 “의회의 역할에서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못지않게 협업도 중요하다고 본다”며 “집행부의 정책과 사업을 구상하고 이를 추진할 때 의회가 협력할 부분이 있다면 전적으로 힘을 모으면서도 예산 및 사업 규모가 적정한지를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시민들과 이 시대가 요구하는 지방의회의 모습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세종시의회 출범 10주년 기념식 성황리 종료



시청 여민실서 역대 연기군~
세종시의회 의원 등 300여명 내외빈 참석



세종특별자치시의회 10주년 기념식

제4대 의회 출범 이후 첫 공식 행사인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출범 10주년 기념식’이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7월 6일 오전 10시 세종시청 여민실에서 열린 기념식에는 연기군의회의부터 세종시의회 역대 의원들을 비롯해 최민호 세종시장과 최고진 세종시교육감 등 내외빈 300여명이 참석했다.

세종시의회 상병헌 의장은 기념사에서 “세종시의회는 출범 10주년을 계기로 주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기관으로 자리매김하고

행정수도 세종 완성으로 전국 국토가 고루 잘 사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진 유공자 포상에서는 의회 발전에 기여한 지역 주민들 및 역대 시의원, 지역 언론인에게 감사패와 세종시의회 사무처 공무원에게 표창장 수여가 이뤄졌다. 특히 세종시의회는 비전 선포식을 통해 전반기 의정 슬로건인 ‘새롭게 시작하는 10년, 함께 만들어가는 세종’을 공식 발표하고 시민과 동행하는 의정을 다짐했다.

세종시의회, 의원 직무역량 강화 교육 실시



집행부 근무여건 개선과 지방의회
역량 강화 방안 제안 등 주요 현안 공유



의원 직무역량 강화 교육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상병헌)는 8월 30일부터 31일까지 양일간 의회청사 대회의실에서 효율적인 의회 운영과 의정활동을 위한 의원 및 전문위원실 직무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지난 7월에 실시한 ‘제4대 개원에 따른 의정 연수’에 이은 두 번째 역량 강화 프로그램으로 제78회 정례회를 앞두고 ‘예산 결산안 심사’와 ‘행정사무감사 기법 및 실전 사례’

등을 익히는 시간으로 구성되었다.

세종시의회 상병헌 의장은 “자체 직무역량 강화 교육은 의정활동의 내실을 기하고 시민 눈높이에 맞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며 “앞으로도 의정활동의 전문성과 의회사무처 직원들의 업무 능력 향상을 위해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시의회, 국회사무처 주관 2022년 첫 의정연수 참여



**5일간 조례안, 예·결산 심사,
행정사무감사 심사기법 등 역량 강화 교육**



세종시의회 국회 의정 연수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상병헌)가 하반기 두 차례 정례회를 앞두고 의정활동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의 일환으로 8월 22일부터 26일까지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국회사무처 주관으로 열리는 ‘2022년 지방의회 의원 연수’에 참여했다. 이번 지방의회 의원 연수프로그램은 전국 51개 광역 및 기초 의회 의원 170여명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안 심사에 대비한 예산안 심사기법, 효과적인 행정사무감사 기법,

조례안 입안 및 심사기법 등 필수 과목을 이수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세종시의회 상병헌 의장은 “의정활동에 꼭 필요한 이론과 실무 위주의 지방의회 의원연수를 통해 의원 개개인의 역량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시민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공부하는 의회상을 구현하기 위해 앞으로도 다각적인 교육 지원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세종시의회, 제4대 개원에 따른 의정연수 실시



**3일간 조례안, 예·결산 심사,
행정사무감사 심사기법 등 역량 강화 교육**



세종시의회 제4대 개원 의정연수 실시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상병헌)는 제4대 개원에 따라 7월 11일부터 13일까지 3일간 조치원 문화정원에서 의원 및 사무처 직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의정연수를 실시했다. 제4대 세종시의회 의원 20명 중 초선의원원의 수는 17명으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이번 기본교육을 통해 의정활동의 이해도와 안전심사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참석자들은 ‘제4대 의회 의원이 숙지해야 할 기본사항 및 조례안 작성·심사법’, ‘청탁금지법 주요 사례, 의원 행동강령 교육’, ‘예·결산 심사 및 행정사무감사·조사의 핵심 착안사항’ 등에 관한 교육을 받았다. 또한, LH 세종 홍보관과 대통령기록관 등을 방문해 세종시 건설 과정을 청취하고 주요 시설물을 둘러볼 수 있는 시간도 마련했다.

세종시의회, 제3기 의정모니터단 간담회 개최



상임위별 분과 구성...행정사무감사,
결산 등 의정활동 모니터링 참여 교육



제3기 의정모니터단 간담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상병헌)는 지난 4월 위촉된 의정모니터단 40명을 3개 상임위원회(행정복지, 산업건설, 교육안전)별 각 분과에 배치한 데 이어 7월 25일 1층 대회의실에서 간담회를 개최했다.

특히 온라인 투표를 통해 모니터단 개인별 희망 분과를 1순위부터 3순위까지 신청받은 결과 모니터단 전원이 1순위 희망 분과에서 활동할 수 있게 됐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모니터단 분과 운

영방안에 대한 논의와 함께 오는 제78회 제1차 정례회에 예정된 행정사무감사와 결산에 대한 의정활동 모니터링 참여를 앞두고 모니터링 방법과 절차에 대한 교육이 이뤄졌다.

세종시의회는 향후 상임위원회별 분과 간담회를 개최해 상임위 소관 분야에 대한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모니터단원들이 작성한 모니터링 활동보고서를 바탕으로 시의원과 모니터단이 함께 참여하는 보고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세종시의회 상병헌 의장, 9월 기자간담회 개최



집행부 근무여건 개선과 지방의회
역량 강화 방안 제안 등 주요 현안 공유



세종시의회 상병헌 의장 9월 기자 간담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상병헌)는 9월 13일 1층 대회의실에서 의정 현안에 대한 기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기자 간담회에서는 집행부 공무원 근무여건 개선과 지방의회 역량 강화를 위한 제안 등 주요 현안에 대해 설명하고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가졌다. 먼저 집행부 공무원 근무 여건 개선방안에 대해 기준인건비 최고 집행률이 86.8%에 불과했음 만큼 소극적으로 집행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기준액 범위를 초과하지

않는 선에서 적극적인 인건비 집행으로 적정 인력을 증원해 격무에 시달리는 부서에 우선 투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9월 21일과 22일 개최되는 대한민국시도의회회장협의회에 지방의회의 역량 강화를 위해 ▲‘지방의회법’ 제정 ▲의원 정책보좌 인력 확대 ▲지방의정연수원 세종 건립 ▲감사위원회의 지방의회 소속 전환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에 필요한 불합리한 제도 개선을 제안하겠다는 계획도 발표했다.

세종시의회, 제78회 정례회 의정 브리핑 개최



의장 · 상임위원장단 행정사무감사 등 주요 안건 설명



세종시의회 제78회 정례회 의정 브리핑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상병헌)는 9월 14일 대회의실에서 제 8회 정례회 의정 브리핑을 개최했다.

이날 상병헌 의장은 첫 번째 발표자로 나서 ▲행정사무감사 기법 등 의원 역량 강화 교육 ▲8월 26일부터 9월 2일까지 하반기 청소년 의회교실 운영 ▲제5기 공공시설물 인수점검 특별위원회 발족 ▲입법고문 및 고문변호사 신규 확대 위촉 등 그간 의회 차원에서 추진한 활동 성과를 공유했다.

이어 유인호 의회운영위원장은 결산검사 위원수 조정을 위한 조례안에 대해 시청과 교육청의 세출 결산 규모가 2021년도 기준으로 3조 1천억 원 이상 확대되었고, 재정 운영 성과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한 결과를 다음 연도의 예산 편성과 재정 운영에 반영하는 점을 감안해 위원 수의 적정성 여부를 신중히 따져 보겠다고 밝혔다.

임채성 행정복지위원장은 건전재정 운영의 원칙에 입각해 결산의 사후적 재정 감독 수단으로 2021년도 세입 · 세출 결산안 심사를 확고히 하고, 현장 방문에 기반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세종시 본청 실 · 국, 출자 · 출연기관 등 37개소의 소관 업무 등을 시민의 관점에서 꼼꼼히 들여다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순열 산업건설위원장은 이번 2021 회계연도 예산결산 심사에 대해 “시민의 소중한 예산이 한 톨도 헛되이 쓰이지 않게 하겠다는 각오로 집행부의 세입 과소 추계 등 지금까지 의도적으로 관행화된 부분은 없었는지 철저히 분석하겠다”면서 예산결산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이소희 교육안전위원장은 “행정사무감사는 사안에 대한 논리적 접근을 통해 제출된 자료를 세밀하고 심층적으로 다뤄 문제점을 파악하고 건설적인 대안을 설계할 수 있도록 원칙 있는 감사를 진행할 계획”이며, “2021회계연도 결산에서도 소모성과 일회성 예산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으로 계속비 및 명시 이월사업 등을 철저히 살피볼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신일 위원장은 마지막 발표자로 나서 “이번 결산 심사에서 시민을 위해 편성된 예산이 낭비 없이 당초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를 꼼꼼히 확인해서 그 결과를 다음연도 예산 편성 기초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라며 “제2회 추경안의 경우 재정건전성 향상을 위해 지방채 발행을 줄이고 지방채를 조기 상환하는 등 채무를 줄여 나가도록 심사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세종시의회 상임위원장단 브리핑 개최 위원회별 역점과제 공론화



**의정 역량 강화 및
민생 현안 해결에 대한 의지 밝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2회 언론브리핑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상병헌)는 8월 3일 대회의실에서 상임위원장단 브리핑을 열고 취임 한 달을 맞은 소회와 제4대 전반기 의정 목표, 향후 운영 방향 등에 대해 발표했다.

첫 번째 브리핑에 나선 의회운영위원회 유인호 위원장은 ▲의원 연구모임의 심의 기능 강화 및 연구모임 실효성 확보를 위한 평가회 도입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의회 운영을 위해 전문위원실의 역할 재정립 및 정책 지원관의 보좌 기능 강화를 중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행정복지위원회 임채성 위원장은 ▲협업을 통한 균형감 있는 위원회 운영 ▲의원 개인의 연구활동 적극 지원 ▲불필요하고 중복되는 조례의 신속한 정비를 통한 시민 불편 해소 등을 운영 목표로 제시했다. 산업건설위원회 이순열 위원장은 위원회

최우선 과제로 ▲주민 생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 개발 ▲시민과 함께 살펴보는 민생예산 심사를 꼽았다.

교육안전위원회 이소희 위원장은 “현장 밀착형 의정활동을 통해 의회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고 집행부와 적절한 견제와 균형을 이루고자 시민과 함께 지혜를 모으겠다”는 포부와 함께 “모든 학생이 차분히 미래를 준비하는 교육 희망도시 건설과 안전한 일상과 재난예방 체계 구축 및 대응 태세 확립 등을 심도 있게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끝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신일 위원장은 ▲시민의 경제적 어려움을 최우선으로 삼는 시민 체감형 예산심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자원 배분 ▲예·결산 분석의 전문성 · 객관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시의회, 조례 입법평가 결과 의원설명회 개최



**대회의실에서 입법평가 추진 결과
공유 및 후속 조치방안 논의**



세종시의회 청사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상병헌)는 9월 15일 의회청사 대회의실에서 조례 입법평가 결과 의원설명회를 개최했다.

조례 입법평가는 조례의 지속적인 정비를 통한 시민 권익 증진과 입법의 신뢰성 및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세종시에서 올해 첫 시행되었다. 세종시의회는 법제전문기관인 한국법제연구원에 연구용역을 위탁해 제·개정 후 3년 이상 경과된 조례

148건*(세종시 자치법규 9.13. 현재 1,058건/ 조례 774건)을 다각적으로 평가한 결과, 현행유지 62, 일반정비 62, 개정권고 17, 통합권고 2, 폐지권고 5건으로 나타났다.

세종시의회는 입법평가의 최종 결과를 집행부와 소관 상임위에 통보하고 공식 홈페이지에 게시해 시민들에게 공개하는 한편, 향후 조치계획을 수립해 분기별 추진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세종시의회, 입법평가위원회 제2차 회의 개최



평가대상 148개 조례,
입법평가연구용역 결과 최종 심의



입법평가위원회 제2차 회의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상병헌)는 8월 11일 조례 입법평가 연구용역 결과 심의를 위해 제2차 입법평가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입법평가 대상조례는 제·개정 후 3년 이상 경과된 조례 148건이다. 법제전문기관인 한국법제연구원이 위탁 평가를 실시했으며 입법평가위원회에서 그 결과를 보고 받고 최종 결과를 도출했다. 또한, 위원들은 올해 입법평가 결과에 대한 사후 관리방안에 관한 의견을 나누고 처음 시행된 입법평가제도가 나아갈 방향과 자치입법권 강화를 위한 세종시에 맞는 입법평가

제도의 발전방향 등을 논의했다. 입법평가위원회 정종미 위원장은 “입법평가 연구용역 결과에 대해 입법평가 위원들께서 사전검토를 통해 면밀히 살펴, 객관적인 결과가 도출되도록 노력하였으며, 앞으로도 실효성 있는 입법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입법평가 최종결과는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집행부에 개선을 권고하고, 평가 결과에 대한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분기별 추진상황을 점검하게 된다.

세종시의회, 전국 두 번째로 ‘의안 처리 시스템’ 도입



10월 20일까지 시범 운영 후
10월 21일부터 정식 운영 개시



의안처리시스템 교육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상병헌)가 조례안 등 의안과 각종 발언을 신청하고 심사하는 ‘의안 처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전 의원을 대상으로 9월 23일 본회의장에서 시스템 활용 교육을 실시했다.

이는 최근 3년간 의원발의 조례안 건수가 2019년 118건, 2020년 99건, 2021년 177건으로 이전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해 대다수 안건을 수기로 처리하거나 각 의원의 연서를 종이에 서명해야 하는 불편으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의안 등록뿐만 아니라 공동발의 의원의 연서 날인, 의안 제출·접수까지 개인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통해 처리할 수 있게 됐다. 또한 각종 발언 및 질문, 청가도 전산 시스템을 통해 신청이 가능해져 의정활동의 편의성이 대폭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상병헌 의장은 “의안 처리 시스템 구축으로 효율적인 의회 운영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고 세종시의 발전을 위해 의원들이 더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제4대 세종시의회 청소년 의회교실 프로그램 강화



모의 본회의에 지방선거 체험까지 프로그램 완성도 높여 교육의 질 대폭 개선



1. 세종선관위 방문한 으뜸초 학생들
2. 해밀초 찾아가는 의회교실(윤지성 의원)
3. 으뜸초 청소년의회교실
4. 세종시 가온누리학교 세종시의회 견학(김호숙 의원)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상병헌)는 8월 26일 으뜸초등학교 4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제4대 의회 개원 이후 첫 청소년 의회교실 의회 견학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참가 학생들은 본회의장에서 세종시의회 홍보 동영상 시청, 의회 체험(2분 발언·표결체험), 의회 퀴즈를 통해 본회의 운영 방식과 의사 결정 과정 등을 직접 경험했다.

또한 세종시 선관위에서 지방선거를 포함한 다양한 선거 사료를 관람하고 모의 투표소 및 개표시설에서 투표와 개표 과정을 직접 체험하는 시간도 가졌다.

9월 1일과 2일에는 양일간 해밀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올해 첫 ‘찾아가는 의회교실’을 진행했다.

윤지성 의원이 해밀초 학생들을 찾아 ‘의원과 만남의 시간’과 ‘게임으로 배우는 민주주의(젠가)’를 함께했다.

9월 5일에는 가온누리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청소년의회교실 ‘의회 견학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이날 학생들과 만난 김호숙 의원은 “미래의 주역인 가온누리 학생들이 자신의 꿈을 펼치고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의회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9월 15일에는 소정초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청소년 의회교실 본회의 방청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본회의 방청은 김학서 부의장과 의원의 만남, 본회의 전 회의 방청 에티켓 안내, 본회의 방청 순으로 진행됐다.

김학서 부의장은 “의회 방청을 통해서 의회의 역할에 대해 배울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제3기 아동청소년의회의 의원 초청 견학 실시

8월 17일에는 제3기 아동청소년의회의 의원들을 대상으로 의회 견학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날 아동청소년의회의 의원 4명, 지도교사 2명이 세종시의회 의회 운영위원회 초청으로 의회 견학 프로그램에 참석했다.

유인호 위원장은 “이번 의회체험이 미래를 이끌 청소년들에게 풀뿌리 민주주의의 기본 정신과 민주시민 의식 및 자질에 대해 생각할 수 있었던 유익한 시간으로 기억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세종시의회, 입법고문·고문변호사 7명 신규 위촉



국회·한국법제연구원 등
다양한 경력을 가진 위원으로 대폭 확대



입법고문 고문변호사 위촉식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상병헌)는 9월 7일 의장실에서 신규 입법고문 및 고문변호사 위촉식을 개최했다.

세종시의회는 지난해 11월에 개정된 ‘입법고문·고문변호사 운영조례’를 근거로 입법고문·고문변호사 정원을 기존 6명에서 9명으로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

이 가운데 임기 만료 위원 4명과 정원 증원에 따른 3명 등 총 7명이 신규 위촉됐다. 이날 위촉식으로 강현철 한국법제연구원 부원장,

박기영 前 국회사무처 법제실장, 박찬수 前 국회 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이정화 한국의원연구회 교수, 차현숙 한국법제연구원 본부장 등 5명이 입법고문으로, 김현순 변호사(법률사무소 해빛)와 도현택 변호사(법무법인 저스티스)가 고문변호사로 활동하게 된다.

임기는 2022년 9월 1일부터 2024년 8월 31일까지 2년이다.

한편, 지난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최근 3년간 세종시의회 입법고문 및 고문변호사 자문 실적은 134건에 달했다.

세종시의회 의정활동 100초에 쏙~! 시민 영상공모전 당선작 시상



일반부와 학생부 각 5편 시상...
공식 채널 통해 의정 홍보자료로 활용



세종시의회 10주년 영상 콘텐츠 공모전 시상식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상병헌)는 9월 7일 ‘출범 10주년 기념 영상콘텐츠 공모전’ 당선작 10편을 발표하고 일반부 및 학생부 수상자들을 시상했다. 세종시의회 사무처는 앞서 6월 13일부터 8월 22일까지 ‘새롭게 시작하는 10년, 함께 만들어가는 세종’을 주제로 전국 단위 영상 공모전을 개최했다.

의회사무처는 주제 적합성, 전달력, 창의성, 작품성을 기준으로 출품작을 심사했으며 일반부와 학생부 각 5편, 총 10편의 우수

작 가운데 으뜸상, 버금상, 누리상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최병민 씨는 ‘세종시의회가 만드는 세종세상’으로 일반부 으뜸상을, 박채희 양은 ‘지역농산물 공공급식에 대한 조례’를 알기 쉽게 제작해 심사위원 최고점으로 학생부 으뜸상을 받았다.

영상공모전 수상작은 홈페이지와 SNS 등 세종시의회에서 운영하는 공식 홍보 채널에 게시해 의정활동을 알리는 데 활용될 예정이다.

세종시의회, 추석 맞이 사회복지시설·전통시장 방문



사회복지시설에 위문품 전달, 관내 전통시장에선 지역 상인 격려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의장 상병헌)는 추석 명절을 앞둔 9월 7일과 8일 사회복지시설과 전통시장을 방문했다.

세종시의회 상병헌 의장은 9월 7일 정신요양시설 ‘방주의 집’과 아동양육시설 ‘영명보육원’, 노인요양시설 ‘평안의 집’ 순으로 방문해 시설을 둘러본 후 관계자에게 위문품을 전달했다.

9월 8일에는 조치원을 세종전통시장과 금남대평시장에 방문해

지역 상인들을 격려했다. 세종시의회 의원 및 사무처 직원들은 세종전통시장과 금남대평시장에서 전통시장 소비 진작을 위해 명절 제수용품 등을 구입했다. 특히 세종시의회 의원들은 시장 분위기와 애로사항 등에 관한 세종전통시장과 금남대평시장 상인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 첫 명절 대목을 맞은 상인들에게 격려의 말을 전했다.



추석맞이 복지시설 방문



금남대평시장 방문



세종전통시장 방문

세종시의회, 부여·청양군에 특별재난지역 복구 지원 성금 기탁



의원 일동 “원활한 수해 피해 복구에 작지만 의미 있는 보탬이 되길”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의장 상병헌)는 지난 8월 22일 집중호우 피해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충남 부여군과 청양군에 재해복구 지원 성금을 기탁했다고 9월 7일 밝혔다.

세종시의회회는 부여군과 청양군 지역민들의 조속한 일상 회복을 기원하는 마음을 담아 대한적십자회에 성금을 전달했다.

세종시의회 상병헌 의장을 비롯한 의원 일동은 “집중호우에 따른 막대한 재산 피해로 수해 지역 주민들의 상심이 큰 것으로 알고 있다”며 “수해 피해 복구 작업이 원활히 이뤄지는 데 작지만 의미 있는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세종시의회 상병헌 의장, 세종시 한시임기제 채용 계획 환영 표명



면밀한 조직 진단과 직원 의견 수렴 통한 조직 혁신 방안 마련 촉구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상병헌 의장은 세종시청에서 발표한 4개 분야 한시임기제 공무원 40명 채용 계획에 대해 환영의 뜻을 표한 다고 9월 20일 밝혔다.

세종시는 9월 18일 일반행정 32명과 토목 2명, 간호 1명, 사회복 지 분야 5명을 포함한 총 40명을 한시임기제로 채용하겠다는 계 획을 발표했다.

이는 세종시청 직원의 출산과 육아 휴직 등에 따른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한시적인 조치이지만, 대체인력뱅크 운영을 통 해 향후 신속한 인력 충원 체계의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긍 정적인 평가를 받는다.

올해 6월 기준으로 세종시 정원 1,876명 중 휴직자는 217명이 며, 이는 전체 정원의 11.5%에 달하는 수치다. 하지만 세종시는

휴직 대체 인원으로 100명을 채용하는 데 그쳐, 117명 결원에 따른 직원들의 업무 과중과 행정 서비스의 질적 저하에 대한 지 적을 받아왔다.

특히 2021년 기준 행정안전부가 책정한 세종시의 기준인건비는 2,223억여원에 달했지만, 기준액 대비 집행 잔액이 292억원을 넘어 전국 광역 지자체 중 가장 낮은 수준의 기준인건비 집행을 을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상 의장은 “면밀한 조직 분석과 다양한 직원 의견 수렴을 통해 표 면화된 세종시청 조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을 모 색해야 할 때”라면서 “세종시가 실질적인 조직 혁신을 위해 각고 의 자세로 노력할 수 있도록 관련 현안들을 철저히 검토해 일하 기 좋은 조직문화를 만들어 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시의회 상병헌 의장, 의장협의회서 지방의회법 제정 공론화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정책지원 인력 확대 및 지방의정연수원 설립 등 제안



대한민국시도회의장협의회 제1차 정기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상병헌 의장은 전국 17개 시·도의회 의장 으로 구성된 대한민국시도회의장협의회(이하 ‘의장협의회’) 정기에 참석해 ‘지방의회법’ 제정을 제안하는 등 지방의회 발 전과 자치부권 강화방안을 공론화했다. 의장협의회는 9월 21일 대전 호텔인터시티에서 열린 2022년도 정기회를 통해 주요 업 무계획 등 현안 보고를 청취하고 제18대 전반기 회장 선출과 추 경 예산안 등 안건을 처리했다. 이날 상병헌 의장은 “대의민주 주의 실현하는 지방의회가 인사권 독립에도 불구하고 조직구

성권과 예산편성권 등의 부재로 독립기관으로서 독자적 운영과 역할에 한계가 있다”면서, “국회 운영에 필요한 사안들을 국회 법으로 규정한 것과 같이 지방의회법을 제정하는 데 힘을 모아 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의원 정책지원 인력 확대(1:1 매칭) ▲지방의원과 의회사무처 직원의 연수와 교육을 전담할 ‘지방의정연수원’ 설립 ▲감사위원회 등 감사기구의 지방의회 소속 전환을 통한 독립성 강화 ▲정책보좌관 제도 도입 등 지방 의회 독립성 강화를 위한 불합리한 제도 개선을 제안했다.

2생활권 세종시의원 일동, 한솔119안전센터 격려 방문 및 현안 청취



“공간 부족 등 근무 여건 개선과
출동 수요 증가로 충분한 지원 필요”

세종시 2생활권 의원 일동은 8월 19일 한솔119안전센터를 찾아 직원들을 격려하고 현안을 청취했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현옥(새롬동)·김효숙(나성동)·박란희(다정동)·안신일(한솔동)은 가람동을 포함해 5개 동을 관할하는 119안전센터를 방문해 센터 시설을 둘러보고 소방 활동 현안에 대해 보고를 받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문인배 한솔동의용소방대장과 한혜숙 여성의를용소방대장도 자리해 의용소방대의 활동 지원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시의원 일동은 “한솔119안전센터는 관내



한솔 119안전센터 방문 사진

급격한 인구증가로 화재·구조·구급 수요가 급등하고 있는 반면, 보람 및 아람 등 타 119 안전센터에 비해 공간이 부족하다”며 “소방인력이 보다 안정적으로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근무 여건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라고 말했다.

이어 “2생활권의 화재 건수가 2020년 13건에서 20건으로, 구급 건수도 2,020건에서 2,418건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만큼 충분한 지원이 필요하다”며 “소방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현장을 방문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시의회 윤지성 의원 “라포르테 사용 승인 전 점검 강화” 주문



입주 예정자 및 관계 공무원과 수차례 간담회…
주택품질 향상 및 하자 최소화 당부



윤지성 의원 라포르테 입주 예정자와 간담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윤지성 의원은 최근 해밀동 라포르테 하자 갈등과 관련해 공동주택 사용 승인에 앞서 점검 강화를 주문했다. 현재 해밀동 6-4생활권에 위치한 라포르테 주택 내 창고 부분 누수와 테라스 방수 및 타일 강도 미충족 등에 대한 하자 여부 판단을 두고 사업 시행자와 입주 예정자 간 첨예한 대립이 계속되고 있다.

윤 의원은 지난 7월 14일 의회청사에서 입주 예정자와 첫 간담회를 개최한 뒤 7월 15일 주택 건설 현장에 방문해 입주 예정자

와 시청 관계 공무원(주택과), 자문위원 등과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또한 7월 20일에는 입주 예정자와 두 번째 간담회를 개최한 데 이어 7월 22일 세종시 주택과장과 입주 예정자 등을 만나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정밀한 현장 검증과 다각적인 의견을 토대로 라포르테 공동주택 하자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서는 입주 예정자, 사업 시행자, 집행부 등의 유기적인 협력이 필요한 사항으로 사용 승인에 이르기까지 신중한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진정한 지방자치 완성은 주민자치회 활성화로부터 이뤄진다”



세종시의회 유인호 의회운영위원장 주민자치회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 개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유인호 의회운영위원장은 9월 2일 주민자치회 활성화 방안에 대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박종권 주민자치회 연합회장과 김대곤 고운동 주민자치회장, 박윤경 보람동 주민자치회장이 참석해 주민자치회 운영상 어려운 점을 이야기하고 주민자치회 활성화 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주민자치 활성화 간담회(유인호 의회운영위원장)

유인호 의회운영위원장은 참석자들의 의견을 토대로 ▲마을사업 예산에 대한 심의기능 강화 ▲주민자치회 운영 예산의 현실화 ▲마을별 다양한 주민단체와의 협력 관계 유지 ▲주민자치위원 선임 대상자 요건 완화 ▲주민자치회와 행정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교육의 필요성 등 주민자치회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두루중 마을계획단 학생들 세종시의회 방문



세종시의회 김재형 의원, 폐의약품 수거함 설치에 관한 제안 발표 청취



두루중 마을계획단과 만남(김재형 의원)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재형 의원(고운동)은 지난 9월 2일 사무실에서 두루중학교 마을계획단 학생들과 만나 폐의약품 수거함 설치에 관한 제안 발표를 청취했다.

두루중 마을계획단 학생들은 김재형 의원에게 토양과 수질 오염을 유발하는 폐의약품 수거함 설치의 목적과 필요성을 설명하고, ▲아파트 단지 등 주민 접근성 향상 방안 ▲주민들의 낮은 인식도를 개선하기 위한 홍보 캠페인 실시 ▲가시성과 주목도를 높일 수 있는 수거함 디자인 ▲마일리지 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김재형 의원은 “학생들의 눈높이에서 우리 지역에 대한 문제의

식을 갖고 실태 조사와 정책 아이디어 구상, 대안 제시라는 과정에 주체적으로 참여해 놀라웠다”며 “어른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마을의 문제를 우리 학생들과 함께 고쳐나갈 수 있다는 가능성을 확인하는 뜻깊은 시간이 되었다”고 말했다.

특히 김 의원은 제안 내용에 대해 “우리 시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과 집행부의 현황 자료 등을 면밀히 분석해서 폐의약품 수거함 설치 장소 확대 등에 필요한 조례 개정과 폐의약품 수거함 설치 시범 사업 추진 등에 힘을 보태겠다”는 각오를 내비쳤다.

세종지역 청소년들 “청소년지원시설 확대 절실” 한 목소리



세종시의회 김효숙 의원, 세종시 청소년
참여위원회 위원들과 정책간담회 개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효숙 의원은 9월 8일 세종시 청소년참여위원회 위원들과 청소년 정책 간담회를 갖고 “세종 지역 내 청소년 인구수가 늘어나고 있지만 청소년을 지원하는 시설은 단 두 곳 뿐이며 세종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조치원에 단 한 곳에 불과하다”며 “청소년 인구가 동 지역에 약 80%가 집중돼 있는 만큼 동 지역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신설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2021년 여성가족부 청소년 지원시설 전국 현황에 따르면 세종시의 경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가 전부인



김효숙 의원 청소년참여위원회 위원들과 간담회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 지원 인프라 측면에서 전국 최하위 수준이다. 또한 청소년 쉼터 역시 대전과 제주에 각각 6개소, 울산과 광주 각각 5개소, 전남에 4개소가 설치돼 있지만, 전국적으로 유일하게 세종시에만 전무하다.

세종시 청소년 인구는 2020년 4월 기준으로 62,822명에서 9월 현재 71,373명으로 꾸준히 늘고 있는 반면, 청소년 지원시설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청소년 인구가 11만 명인 제주도의 경우 청소년 지원시설은 총 14곳에 설치돼 있다.

세종 학생들, 위클래스 문턱 낮추고 ‘비밀 상담’ 원해



김효숙 의원, 교육청에 의뢰해
초·중·고교 대상 위클래스 설문조사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효숙 의원이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학교 내 심리상담교실인 위(Wee)클래스에 대한 관내 초·중·고교 학생의 만족도는 높은 반면, 문턱이 더 낮아지길 바라는 의견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초등학생과 중학생은 친구 관계의 어려움, 고등학생의 경우 우울증 및 ADHD(주의력결핍 과다행동장애) 등 정서적 어려움이 큰 것으로 조사돼 이에 대한 교육청의 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9월 20일에 발표한 세종시 초중고교생 총 1,55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위(Wee)클래스 이용 현황 설문조사에 따르면, 최근 1년 이내 위클래스를 방문한 경험은 중학생(290명, 41.1%)과 고등



위클래스 관련 사진

학생(110명, 22.2%), 초등학생(36명, 10%) 순으로 조사됐다. 초등학교의 경우 올해부터 전문 상담 인력이 배치되면서 이용률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상담을 받은 초등학생 및 중학생의 경우 친구 관계에 가장 큰 어려움을 호소했으며, 고등학생은 우울증 및 ADHD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이어 성적과 진로 문제가 뒤를 이었다.

김효숙 의원은 “위클래스가 공감과 위로의 공간이 ‘전혀 아니다’라고 서술 응답한 중·고교생 대다수가 상담 사실을 부모와 담임교사에게 전달되는 것에 대한 불만을 표시했다”며 “이번 결과를 바탕으로 학생들이 좀더 편하게 고민을 털어놓을 수 있도록 위클래스 운영방식에 대한 고민이 필요해 보인다”고 밝혔다.

제천변에 숲길 조성해 누구나 찾고 싶은 제천 만든다



제천변 방문해 현장 점검 및 숲길 조성방안 등 논의



제천변 숲길 조성사업 현장방문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상병헌 의장과 임채성 행정복지위원장, 김재형·이현정 의원은 9월 20일 제천변을 방문해 현장을 점검하고, 아람동과 고운동, 종촌동으로 이어지는 숲길 조성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제천은 세종시 아람동과 고운동, 종촌동, 나성동을 따라 흐르는 도심 하천으로 전체 길이는 5.59km에 달한다. 세종시는 현재까지 1생활권 내 세종국제고와 어진중학교에 이르는 제천의 2.9km를 인수한 상태다.

주요 협의 내용은 ▲‘하천법’ 및 ‘하천점용허가 세부기준’에 적합한 수목 식재 ▲홍수에 따른 수목 전도 등 안전 사고 예방을 위한 식재 구역 검토 ▲환경과 미관을 고려한 수종 선정 등이다. 상병헌 의장은 “제천변이 주민들의 휴식과 운동 공간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는 만큼, 제천 환경 정비와 미관 개선을 위해 아람동과 종촌동 일대 제천변에 적절한 수목을 심어 숲길 형태로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람뜰 근린공원 데크 설치안 최종 보고… 내년 3월 착공 계획



완경사 데크 신설 및 연속 계단 수 조정과 양방향 쉼터 3개소 설치 등 실시 설계안 도출



우람뜰근린공원 보행환경 개선

10월 5일 도담동 행정복지센터 2층 회의실에서 열린 주민협의체 3차 회의에서 우람뜰 근린공원 보행환경 실시 설계 최종안이 발표됐다.

이날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상병헌 의장과 최원석 의원 등 참석자들은 지난 주민협의체 2차 회의에서 논의된 사안에 관한 조치 결과와 우람뜰 근린공원 보행환경 개선사업 실시 설계안 최종 보고를 청취했다.

특히 이날 발표된 데크 설치 기본계획에 따르면 ▲완경사 데크

를 기존 데크와 교차하는 방향으로 신설 ▲휴식 및 사고 예방을 위한 연속 계단 수 3~11개 이하 배치 및 계단참 설치 ▲양방향에 어린이 및 노약자를 고려한 쉼터 각 3개소 설치 등이 실시 설계안으로 도출됐다.

보행 데크 목재로는 내구성 및 유지 관리가 우수한 천연 목재를 사용하기로 결정했으며, 야간 보행 조도를 개선하고 눈부심 현상을 최소화하기 위해 LED 조명이 바닥 면을 비추도록 설계할 계획이다.

유럽한인총연합회 회장단 세종시의회 방문



행정수도 가치 공유...유럽 각국 도시와
상호 교류 등 협력 지원 방안 논의



유럽한인총연합회 회장단 방문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상병헌 의장은 10월 11일 의회청사를 방문한 유럽한인총연합회 회장단(회장 유제현)과 상호 협력 및 교류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날 상병헌 의장은 유럽한인총연합회 회장단과 만난 자리에서 세종시의 탄생 배경과 향후 도시 조성계획 등을 소개하고 유럽지역 내 한인회 등 재외동포 상황과 유럽 각국 도시와의 교류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상병헌 의장은 “특별히 세종시에 많은 관심을 갖고 방문해 주신 것에 감사하며, 시의회 차원에서도 재외동포의 권익 신장과 도시

발전을 위한 국제교류에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유제현 유럽한인총연합회장은 “세종시가 대한민국의 행정수도로서 성장하길 바라며, 유럽 각국의 도시들과도 활발한 교류·협력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한인회 차원에서 적극 협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유럽한인총연합회는 지난 1989년에 발족되어 현재 유럽 26개국의 한인회를 회원단체로 두고 유럽에 거주하는 30만 한인들의 화합과 교류·협력은 물론 모국인 대한민국의 발전 기여를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순천시의회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홍보차 세종시의회 방문



전남 순천시의회 의원 등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구경 오세요”



순천시의회 정원박람회 특별위원회 세종시의회 방문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홍보를 위해 10월 11일 의회청사를 방문한 전라남도 순천시의회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특별위원회와 교류의 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세종시의회 유인호 의회운영위원장이 순천시의회 의원들을 접견했으며 “세종시에서 10월 16일까지 열린 2022정원산업박람회에 이어 내년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의 성공적인 행사 개최

를 기원한다”고 전했다. 순천시의회 오행숙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특별위원장은 “많은 세종시민과 함께하는 뜻깊은 행사가 되길 기원한다”고 화답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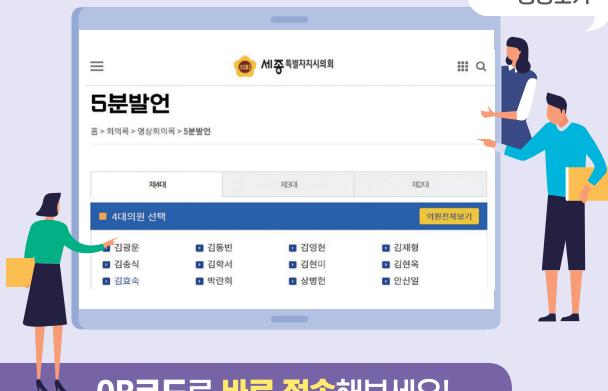
한편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는 2023년 4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전라남도 순천시 국가정원 및 도심지역 일원에서 개최된다.



5분 자유발언

5분 자유발언과 긴급현안질문 영상 시청 방법

영상보기



QR코드로 바로 접속해보세요!

- ① 세종특별자치시의회 누리집 접속
- ② 상단 메뉴 회의록 클릭 ③ 영상 회의록
- ④ 5분 발언 ⑤ 4대 의원 선택 ⑥ 영상보기



김현미 의원
소담동, 더불어민주당



우수성 인정받은 ‘읍면동장 시민추천제’ 폐지 재검토

제77회 임시회 3차 본회의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현미 의원(소담동, 더불어민주당)은 7월 29일 제77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읍면동장 시민추천제’의 폐지를 철회하고 현행 제도를 개선·보완하는 방식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고작 101명의 공무원과 시민 52명의 표본뿐 아니라 현행 제도 폐지를 전제하는 듯한 단 3문항이 담긴 설문 내용까지 타당성과 신뢰도, 객관성을 갖춘 조사로 보기 어렵다”며 집행부의 제도 폐지 결정 과정에 의구심을 표했다.

이러한 세종시의 폐지 결정과 달리 ‘읍면동장 시민추천제’는 우수한 제도로 인정받고 있다는 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 실제로 2018년 ‘국정 목표 실천 지방자치단체 경진대회’ 우수상과 2018년 ‘지방 인사 혁신 경진대회’ 대통령상을 연달아 수상하며 정부로부터 제도 도입의 취지와 운영에 대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김 의원은 “읍면동장 시민추천제는 주민자치의 상징성과 선도성, 우수성을 갖춘 좋은 제도인 만큼 문제점에 대한 대안 마련과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지역 여건과 성숙도에 따라 단계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효숙 의원
나성동, 더불어민주당



안심 등갓길 세종, 우리 모두를 위한 길

제77회 임시회 3차 본회의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효숙 의원(나성동, 더불어민주당)은 7월 29일 제77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어린이 보행 안전 강화를 위한 적극 행정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2021년 OECD 회원국들의 어린이 인구 10만 명당 보행 중 사망자 수를 비교한 결과에서 우리나라는 0.34명으로 평균치보다 1.5배 높은 것으로 나타나 어린이들에게 더욱 안전한 보행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냈다.

실제로 지역 내 75개에 달하는 어린이 보호구역 업무 담당자가 수년째 1명에 불과한 데다 교육 대상자 수인 6만 2천여명에 비해 현저히 적은 5천명 기준에 맞는 예산으로 교통안전 교육이 이뤄지고 있어 형식적이라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어린이 보행환경 개선방안으로 ▲어린이 인지와 운전자 감속 주행에 효과적인 ‘옐로카펫’ 설치 ▲어린이 행동 특성을 고려한 사고·사례 중심의 ‘체험형 교통안전교육’ 시행 ▲어린이 집과 학원 밀집 지역 등 어린이 통행이 빈번한 장소에 어린이 보호구역 추가 지정 검토를 제시했다. 아울러 ‘세종시 어린이 보호구역 조례’ 제5조에 명시돼 있지만 현재까지 미실시된 어린이 보호구역 실태조사를 진행해 달라고 요구했다.



안신일 의원
한솔동·장군면, 더불어민주당



민관정 협의체 등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 적극 대응

제77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안신일 의원은(한솔동·장군면, 더불어민주당) 7월 29일 제77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 약속이 제대로 지켜지도록 시 차원의 적극적인 자세와 대응을 촉구했다.

특히 정부세종청사에서 ‘격주 국무회의 개최’는 물론, ‘중앙지방협력회의 월 1회 개최’ 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있는 데다 500억 혈세가 투입된 용산 대통령 집무실 설치를 강행하면서도 대통령 공약인 세종집무실 설치에 예산을 핑계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신뢰하기 어려운 행보라는 주장이다.

안 의원은 “의회 차원에서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 약속을 이행하라는 결의안을 채택하고 시민단체들은 연일 성명을 내는 등 시민들은 당혹감과 분노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며 “상황이 이런 데도 집행부는 시 차원의 대책 마련을 위한 별다른 논의나 대응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며 집행부의 안일한 인식과 대응에 우려를 표했다.

끝으로 안 의원은 “세종시는 이제라도 대통령 세종집무실 약속이 확실히 이행될 때까지 민·관·정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적극적인 자세로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순열 의원

도담 · 어진동, 더불어민주당



이현정 의원

고운동, 더불어민주당



반려동물과 반려인·비반려인의 공존을 모색할 때

제77회 임시회 3차 본회의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이순열 의원(도담 · 어진동, 더불어민주당)은 7월 29일 제77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반려인과 반려동물, 비반려인 모두가 공존할 수 있는 인식개선 사업 추진과 반려동물 정책 제언 창구 마련을 촉구했다.

반려동물 양육 가구와 반려인의 급증에 따라 공동주택 소음과 다중 이용시설 목줄 및 배설물 처리 문제, 길고양이 개체수 증가와 먹이 주기뿐 아니라 동물장묘업 민원과 개 물림 사고 등도 주민 간 갈등의 요인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 의원은 정책 대안으로 “반려동물 소유자의 책임을 강화해 유기동물 발생과 주민 갈등을 예방하고 반려 인구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행정조직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며 반려동물과 반려인, 비반려인이 각각 주체로 참여하는 인식개선 사업 추진을 당부했다.

아울러 반려인과 비반려인 간 의견을 교환하고 반려동물과 관련된 정책을 제언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해 정책 입안 초기부터 인식의 차이를 줄여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모두를 위한 유니버설디자인으로 차별 없는 환경 만들자

제77회 임시회 3차 본회의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이현정 의원(고운동, 더불어민주당)은 7월 29일 제77회 임시회 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모두를 위한 유니버설디자인으로 차별 없는 환경을 만들자”고 제언했다.

이현정 의원은 “유니버설디자인은 장애물이 없는 물리적 환경을 만드는 무장애 개념을 기본으로 하되 인간의 전체 생애 주기까지 수용하는 디자인”이라면서 유니버설디자인 친화도시 조성을 제언했다.

유니버설디자인 친화도시 조성 방안으로 ▲안정적이고 통합적인 정책 추진을 위한 조례 제정을 통해 제도적 기반 마련 ▲세종시 특성에 맞는 기본계획과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수립 ▲시범사업을 통한 유니버설디자인 인식 확산 및 세종시만의 정책화 방안 마련을 제시했다.

이 의원은 “누구나 차별 없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유니버설디자인을 도시 문제 해결에 도입함으로써 시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도시 공간정책의 방향을 정립해 나가야 한다”고 거듭 당부했다.



김충식 의원
조치원읍, 국민의힘



김현옥 의원
새롬동, 더불어민주당



산하기관 경영 효율화와 불필요한 위원회 정비 촉구

제78회 정례회 1차 본회의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충식 의원(조치원읍, 국민의힘)은 9월 15일 제78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세종시 산하기관 혁신을 통한 경영 효율화와 불필요한 위원회 정비를 촉구했다. 김충식 의원은 ‘산하기관 혁신’과 관련해 세종시 산하기관 직원들의 이직과 퇴사가 잦다는 점과 운영진의 비전문성과 일부 도덕성 문제, 낮은 경영평가등급을 언급하며 강도 높은 혁신을 요구했다.

이날 두 번째 주제로 ‘위원회 정비’와 관한 제언이 이어졌다. 지난 6월 시장직인수위원회에서 발표한 “위원회 등에 대한 통폐합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을 전제로 위원회 기능의 중복, 관련 예산 증가, 의사결정 지연 등의 문제점을 조속히 해소하기 위해 위원회 정비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펼쳤다.

김 의원은 위원회 정비 방안으로 조례에 근거한 위원회의 경우 원칙적으로 폐지 또는 통합 운영하고 위원 수를 최소화하며, 법령에 따라 설치되었지만 회의 개최 실적이 없는 위원회의 경우 비상설화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에 법령 개선 건의를 제안했다.

세종시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설치 시급

제78회 정례회 1차 본회의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현옥 의원(새롬동, 더불어민주당)은 9월 15일 제78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장애인 구강 건강권 보장을 위한 권역별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설치’를 촉구했다. 김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장애인 다빈도 질환 1위가 ‘치주염 및 치주질환’으로 나타났다. 장애인 구강검진 수검률 역시 일반검진(64.6%)과 암 검진율(45.5%)에 비해 21.1%로 현저히 낮아 기본적인 검진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김 의원은 “정부가 2011년부터 권역별 장애인구강진료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광역자치체 중 세종시를 포함해 총 4곳에만 권역별 센터가 없는 상황”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특히 지난해 말 기준으로 세종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은 총 12,630명에 달하며 이 중 37.5%에 해당하는 4,156명이 중증장애인인 상황에서 권역별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설치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끝으로 김 의원은 “세종시가 조속히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유치에 나서 장애인 구강보건 향상을 위한 정책 지원과 기반 확충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효숙 의원
나성동, 더불어민주당



미래전략본부, 구체적인 비전과 로드맵을 제시해야

제78회 정례회 1차 본회의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효숙 의원(나성동, 더불어민주당)은 9월 15일 제78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최근 세종시 조직 개편으로 신설된 미래전략본부 역할에 대한 명확한 방향성 정립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크게 세 가지 문제를 언급했다. 각 실국별 주요 업무가 미래전략본부로 이관되면서 직무 연관성과 조직 균형감 상실, 직원 사기 저하는 물론, 상당수 사업이 타 부서와 협업해야 하는 구조여서 자칫 조직 내 옥상옥을 형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기획조정실이 엄연히 존재하는 상황에서 역할 중복의 우려마저 있다는 목소리도 냈다.

김 의원은 “단층제라는 세종시의 특수한 행정체계에서 조직 신설에 급급하기보다 현 조직을 면밀히 점검하고 근무 여건 개선 및 조직문화 재정립이 더욱 절실한 때라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끝으로 “세종시는 신설된 기구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고 자족 기능 확충과 행정수도를 넘어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 도시 모델을 제시할 수 있도록 동력 확보와 추진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당부의 말을 남겼다.



유인호 의원
보람동, 더불어민주당



세종시 전기차 보조금 전국 평균 수준으로 올려야

제78회 정례회 1차 본회의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유인호 의원(보람동, 더불어민주당)은 9월 15일 제78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무공해차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한 ‘전기차 보조금 지원 확대’를 촉구했다.

유인호 의원은 세종시에서는 지난해 기준 총 등록 차량의 1.1%를 무공해차로 보급해 전국 평균 보급률 상회와 보급 목표 초과 달성이라는 성과를 얻었지만, 전기차 보조금 규모는 수년째 전국 최저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세종시는 정부에서 무공해차 보급 사업을 시작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 동안이나 자체 예산 부족을 이유로 국비를 불용해 반납해왔고, 그 금액만 해도 46억 7,300 만원에 달했다”고 꼬집었다.

또한 매년 초과 접수와 조기 마감이 반복되는 전기차 보조금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에 따른 대응책으로 ▲사전 설문조사를 통한 수요 예측 ▲전기차 정책 수립 시 전문가 자문을 통한 대책 마련 등을 제안했다.

특히 현재 무공해차 보급과 충전시설 확충, 친환경자동차법 위반 행정처분 등 관련 업무 담당 인력이 1명뿐인 상황을 언급하며 인력 충원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김동빈 의원

부강 · 금남면 · 대평동, 국민의힘



김현옥 의원

새롬동, 더불어민주당



다양한 주민지원사업 발굴하고 국비 확보에 총력 기울여야

제78회 정례회 1차 본회의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동빈 의원(부강 · 금남면 · 대평동, 국민의힘)은 9월 15일 제78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주민 삶의 질 향상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활성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동빈 의원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거해 시행 중인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을 언급했다.

김 의원은 주민지원사업을 통해 신촌리 일대 공동묘지를 정비한 세종시의 대표 사례를 소개하고 “비학산 누리길과 연결된 산책길 및 공원으로 조성하면서 호평을 이끌어냈다”고 설명했다.

주민지원사업의 실효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주민 복지증진 사업과 소득 증대 및 일자리 창출 사업, 환경문화사업 등 새로운 유형의 사업을 발굴해 다양한 추진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김 의원은 주민 맞춤형 정책을 발굴하고 국비를 확보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것을 촉구하며 지역 주민을 포함한 민관 협의체를 구성해 사업 선정부터 집행 이후까지 주민지원사업을 평가 · 관리하는 시스템 구축을 제안했다.

청소년 정신건강 위한 안전망 사업 강화 촉구

제78회 정례회 2차 본회의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현옥 의원(새롬동, 더불어민주당)은 10월 19일 제78회 정례회 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청소년 정신건강을 위한 안전망 사업을 강화하기 위해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관내 청소년 자살률에 미치는 여러 요인 중 이주민이 많은 데다 역사가 짧은 도시로 지역민 간 소통이 부족하다는 점과 또래 문화를 향유하고 스트레스를 해소할 만한 청소년 문화공간의 부족을 주요 원인으로 지목했다.

특히 세종시의 정신건강 관련 예산과 전문인력은 광역시도 중 17번째로 가장 열악한 상황인 데다 학교 밖 청소년들은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실효성 있는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김 의원은 청소년 자살예방 개선방안으로 ▲전문적인 자살예방 정책 수립과 수행을 위한 전담 조직 구성 ▲사회적 인식 개선과 생명 사랑 문화 조성이 가능한 ‘자살예방센터’ 설치를 제시했다.



김효숙 의원
나성동, 더불어민주당



안정적 학교급식 위해 시와 교육청 긴밀한 협력 나서야

제78회 정례회 2차 본회의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효숙 의원(나성동, 더불어민주당)은 10월 19일 제78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학교급식 단가를 시급히 현실화해서 성장기 학생들에게 양질의 급식을 제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5분 자유발언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 세종시 공립 초중고 학생 500명 기준 평균 급식비 단가는 3,315원으로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최하위권인 14위에 해당하며 1위인 전남과 비교하면 1,000원 이상 차이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특히 무상급식 식품비 외에 친환경·우수농산물, 현물 등을 추가 지원하는 평균 단가가 고작 13원으로 17개 광역시도 중 꼴찌인데다 다른 지역과 단가 차이도 커 획기적인 인상이 검토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한 성장기 학생들을 배려한 충분한 양의 급식을 제공하고 있지 못하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김 의원은 학교급식 개선 방안으로 자율배식형 급식 확대와 고품질의 다양한 식단제공을 위한 적극적인 연구와 노력 등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학교 간 우수 조리법 공유, 구매단가 절감을 위한 식재료 공동구매, 급식 공모전이나 콘테스트 개최 등 급식 품질향상을 위한 다각도의 방안을 마련하고 국내외 모범 사례 조사와 연구를 통해 천편일률적인 식단구성에서 벗어나 영양균형은 챙기되 다양성과 선택권이 보장되는 급식의 대전환에도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순열 의원
도담·어진동, 더불어민주당



공동주택 갈등 완화를 위한 행정 지원 서비스 강화

제78회 정례회 2차 본회의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이순열 의원(도담·어진동, 더불어민주당)은 10월 19일 제78회 정례회 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공동주택 갈등 완화를 위한 행정 지원 서비스 강화를 주문했다. 이날 발언에 의하면 2020년 기준 전국 최고 수준에 이르는 세종시 주민들의 공동주택 거주 비율로 층간 소음과 부실 시공에 따른 크고 작은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세종시의 ‘공동주택 생활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해 “전문 인력 1명이 196개에 달하는 의무관리 공동주택 단지의 민원 상담부터 단지별 관리 실태 순회 진단 등 한 사람이 소화하기 어려운 여러 업무를 맡고 있다”며 “담당과를 별도 설치한 타 지자체와 비교할 때 담당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현 제도의 한계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으로 ▲공동주택 관리 전문인력 확충과 전담부서 설치 ▲공동주택 기술자문단 구성 ▲‘공동주택 관리지원센터’ 업무를 구체화한 관련 조례 개정 검토를 제시했다. 끝으로 2027년까지 약 8만호에 달하는 공동주택 추가 공급이 예상되는 만큼 쾌적한 주거 환경 조성을 위해 더욱 전문적이고 적극적인 공동주택 관리 지원 체계를 마련해 달라는 당부를 전했다.



김현미 의원
소담동, 더불어민주당



이현정 의원
고운동, 더불어민주당



국비 삭감한 정부 방향과 별도로 여민전 혜택 유지 노력해야

제78회 정례회 2차 본회의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현미 의원(소담동, 더불어민주당)은 10월 19일 제78회 정례회 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국비 지원이 없더라도 현행 여민전 캐시백 혜택 10% 비율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김현미 의원은 ‘여민전’ 발행 효과에 대해 “우리 시의 부족한 자족 기능을 보완하며 소상공인 보호와 역내 소비 진작의 효과가 입증되었다”고 강조하면서 전액 삭감된 정부 예산과 별개로 자체 예산을 선제적으로 투입해 캐시백 혜택을 지속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날 공개한 자료에 의하면, 여민전 발행으로 2020년 역내 소비는 2019년 대비 1,855억원 증가했으며 이중 여민전 소비액 비율은 88.5%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김 의원은 ‘여민전’ 발행에 투입한 예산 1억원당 역내 소비액은 9억원 늘었다는 분석 결과를 제시하며 지역화폐 발행의 순기능을 강조했다.

끝으로 “중앙정부의 방향만 따라가다 보면 우리 세종시민을 돌보는데 소홀할 수 있다”면서 “세종시민이 원하고 세종시민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는 정책적 판단이 절실한 시기”라고 덧붙였다.

시민 편의를 최우선으로 하는 체육시설 관리 일원화 제안

제78회 정례회 2차 본회의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이현정 의원(고운동, 더불어민주당)은 10월 19일 제78회 정례회 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체육시설 관리 일원화’를 제안했다.

이현정 의원은 “계속해서 늘어가는 우리 시 체육시설의 관리·운영이 효율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든다”며 이 문제의 원인에 대해 “체육시설 별로 관리부서가 나뉘어져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존 공원관리사업소, 시설관리사업소, 조치원읍, 아름동으로 분산돼 있는 관내 체육시설의 관리 주체 일원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 의원은 관리 주체 일원화를 통해 시민들의 민원 처리 간결화와 통합 관리를 통한 체육시설 운영 업무의 연속성 확보, 향후 축적된 노하우를 통한 시스템 개선 및 예산 절감 등의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아울러 관리·운영 업무가 통합된다면 새벽과 심야 시간에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무인화 시스템 도입과 조직의 효율적인 개편 등 발전적인 방안에 대한 적극적인 논의도 가능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제77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광역교통망 구축 위한 특단의 자원 확보 대책 마련

긴급현안질문



의원
임채성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채성 의원(종촌동·더불어민주당)은 7월 29일 제77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교통 문제 및 공무원 근무 여건 개선을 비롯해 산하기관 인사청문제도 도입을 촉구하는 긴급현안질문을 실시했다.

임 의원은 첫 번째 주제인 교통 대책과 관련해 “행정수도의 면모를 제대로 갖추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광역교통망 구축이 필수적”이라고 전제하고 건설비용 자원 분담을 비롯한 자원 마련에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임 의원은 교통흐름 개선방안에 대해 “경주에서 전국 최초로 운영 중인 실시간 신호제어 시스템을 도입해 교통량이 많은 구간에 녹색신호 시간을 유기적으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버스요금 무료화 정책과 관련 운영비 전액을 시민 혈세로 부담해야 하는 점과 저조한 버스 이용률 및 재정 건전성 등을 근거로 개인형 이동장치 활성화 정책이 더욱 효과적일 수 있다는 의견을 냈다. 임 의원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빈도가 높아지

고 있는 만큼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사고 건수 등 실태조사 실시 ▲청소년 요금제 신설 ▲충족한 대중교통 환승체계 구축 ▲마일리지 적립 등 다각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

또한 임 의원은 세종시 공무원 근무 여건 마련과 조직문화 개선을 촉구했다.

세종시의 경우 지난 3년간 기준인건비 최고 집행률이 86.8%에 불과해 소극적·보수적인 인건비 집행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기준인건비를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인력 보강 이후 격무에 시달리는 부서에 우선 투입해야 한다는 게 임 의원의 주장이다.

아울러 임 의원은 정실·보은 인사를 방지하고 전문성과 도덕성을 겸비한 인재 확보 차원에서 세종시 산하기관 인사청문제도 도입을 촉구했다.

실제로 세종시를 제외한 16개 광역시·도가 인사청문제도를 시행 중이고 정치적 선택이 아닌 경영진의 전문성에 대한 철저한 검증에 대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제78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면 지역 자족기능 강화 위한 대기업 유치 촉구



김근현안질문



의원
김학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학서 의원(전의·전동·소정)은 9월 15일 제78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관내 면 지역 자족 기능 강화를 위한 대기업 유치와 조속한 농민수당 지급을 촉구하는 긴급 현안질문을 실시했다.

대기업 유치와 관련해서는 지역 불균형에 따른 경제·사회적 대규모 충격과 조정 비용을 초래하기 전에 면 지역 생존전략 마련이 시급한 만큼 대기업 유치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지역 소멸 위기에 처한 전의·전동·소정면에 4개 산업단지를 포함해 총 11개의 산단이 위치했으나 60% 이상이 소규모 업체이며 법인세 기준으로 살펴본 결과, 시 재정 기여도가 낮다는 점도 문제로 제기했다.

또한 민관 합작 방식으로 추진된 4개 산단에 대해 입주 의향 업체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조성돼 저조한 실업주율은 물론, 토지 분양 위주의 사업이 이뤄졌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타 지역의 첨단 대기업 유치 사례를 참고해 단기적으로 시 재정에 손해를 끼치더라도 일정 기간 세금 면제와 부지 매입비 지원 등 파격적인 투자 인센티브를 통해 장기적으로 지역 성장의 발판이 되도록 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김 의원은 두 번째 주제로 세종시 농민수당 지급 추진에 대해 질의했다.

김 의원은 농민수당 용역 결과가 나오는 대로 사업 추진을 주문하면서 “농민수당은 여민전으로 지급할 예정이므로 정부의 지역화폐 보조금이 삭감되더라도 안정적으로 지급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급방식과 관련해 중·대농이 경영체를 분리 등록하거나 여성 농민들이 수당 지급 혜택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농가 경영체 단위가 아닌 농민 개인별로 지급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세종시의회, 김현옥 의원 대표 발의한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 대국민 약속이행 촉구 결의안 채택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상병헌)는 7월 15일에 열린 제7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현옥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와 관련한 대국민 약속이행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세종시의회 의원 전원은 공동 발의한 결의안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통해 발표했던 로드맵에 따라 대통령 집무실 설치를 원안대로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하지만 최근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와 관련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입주 무산 보도와 지난 13일 행정안전부가 ‘기존 임시집무실 활용’이라는 해명자료를 발표하면서 국가 균형 발전에 대한 국

민적 염원과 기대가 한순간에 상실감으로 바뀌었다며 세종시의 회 차원에서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명했다.

이에 세종시의회 의원 전원은 정부와 대통령에 ▲국민적 염원이자 시대적 요구인 국가 균형 발전 부응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를 위한 구체적 이행방안과 로드맵 제시 ▲국무회의 및 중앙지방협력회의의 세종 개최 약속 이행을 요구했다.

한편, 이번 결의안은 대통령실(비서실장)을 비롯한 대한민국 국회의장, 국무총리, 행정안전부 장관 등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와 관련된 기관 10여 곳에 전달했다.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와 관련한 대국민 약속 이행 촉구 결의안

우리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통해 발표되었던 로드맵에 따라 원안대로 추진할 것과 구체적 실행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한다.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에 지난 대통령 선거 당시 여야를 막론하고 대통령 후보 주요 공약으로 발표하는 등 여야 정치권의 공통된 인식은 물론,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에 대한 전국적 공감대 형성과 국민적 합의에서 비롯됐다. 그 결과 2022년 5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대통령과 그 소속기관의 집무실 설치’를 규정한 「행복도시법」 제16조의2를 신설하는 「행복도시법」 개정안이 찬성 185명, 반대 0명, 기권 2명이라는 압도적인 결과로 가결되고 6월 10일 공포되었다.

우리 39만 세종시민은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과 함께 대통령 세종집무실이라는 행정수도 완성의 초석이 마련된 것에 기쁨과 환영으로 화답하였으며, 각계에서는 세종특별자치시가 드디어 그 취지에 맞게 국가균형발전의 진정한 중심, 진정한 행정수도로써 위상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였다.

하지만, ‘대통령 임시 집무실 세종청사 입주 무산’이라는 언론보도로 인해 국가균형발전의 염원과 기대는 상실감으로 바뀌었다.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에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우리 세종시가 제안한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 단계별 이행 방안’을 받아드려 추진기로 한 사안이다. 그럼에도 실제 정부세종청사 신청사 입주계획에 대통령 임시 세종집무실 설치가 반영되어 있지 않았고, 13일 행정안전부 해명 자료에서도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세종집무실을 임시집무실로 활용할 계획’이라며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의 상징성과 의미를 이해하지 못한 입장을 내놓았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이 같은 정부의 인식과 방침에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명하고 당초 구상대로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를 강력히 요구하며, 다음과 같은 사항을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세종시민을 비롯한 온 국민의 염원인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라!

하나, 정부는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에 따른 2023년도 예산 확보 등 구체적인 이행방안과 로드맵을 조속히 제시하라!

하나, 윤석열 대통령은 세종에서 국무회의와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열겠다는 약속을 이행하라!

2022. 7. 15.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세종시의회, 김동빈 의원 대표 발의한 KTX 세종역 설치 촉구 결의안 채택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9월 15일에 열린 제78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김동빈 의원의 대표 발의로 ‘KTX 세종역 설치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KTX 세종역 설치 촉구 결의안은 세종시가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하고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서 제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조속히 KTX 세종역 설치에 나서야 한다는 인식에서 마련됐다. 세종시의회 의원 전원은 공동 발의한 결의안을 통해 “지난 2020년 정부가 경제성이 낮다는 이유로 KTX 세종역 신설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이후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 확정 등 상황에 큰 변화가 있었다”며 긍정적인 재검토를 요구했다.

실제로 지난해 ‘2027년 하반기 국회 세종의사당 완공 계획’에 이어 지난 8월에는 ‘2027년 상반기 대통령 세종집무실 완공 로드맵’이 발표됨에 따라 세종시를 연결하는 교통 수요 급증이 예상되고 있는 만큼 교통 접근성의 시급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김동빈 의원은 “KTX 세종역은 향후 행정수도 세종의 미래를 좌우할 필수 기반시설로서 행정수도 완성의 핵심 전제조건이자 장기적으로는 충청권 메가시티 성공의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한편, 이번 결의안은 대통령(비서실장)을 비롯한 국회의장, 국무총리(국무조정실장),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게 발송됐다.



KTX 세종역 설치 촉구 결의안

우리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행정수도 완성과 국가 균형발전 실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KTX 세종역 설치에 정부가 조속히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정부는 2020년 경제성이 낮다는 이유로 KTX 세종역 신설이 필요하다는 시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이후 상황에 큰 변화가 있었다.

지난해 국회가 세종의사당을 2027년 하반기에 완공한다고 발표했고, 올해 8월에는 정부가 대통령 세종집무실을 2027년 상반기에 완공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최근에는 국회에서 법무부와 여성가족부를 세종으로 이전하는 내용의 행복도시법 개정안이 발의되었고, 국회 예결특위 전체회의에서 서울과 수도권 소재 위원회의 세종이전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었다.

무엇보다 국회 세종의사당,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 계획은 더 이상 되돌릴 수 없으며 2027년이 되면 세종시는 명실상부한 대한민국의 행정수도로 자리 잡게 될 것이다.

향후 세종과 수도권을 오가는 교통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이 명백하고 행정수도 위상에 걸맞은 교통 인프라 구축이 시급하나, 정작 세종시에는 아직까지 제주도를 제외한 16개 시도 중 유일하게 KTX역 하나 없는 실정이며 서울에서 KTX를 이용해 세종시를 방문하려면 청주시 소재 KTX 오송역을 거쳐 추가로 세종 시내까지 30분 이상을 더 이동해야 하는 매우 소모적인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서울역이 서울 도심에 자리 잡고 있듯 세종시 안에도 세종역이 있어야 한다. 우리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정부부처 추가 이전은 물론 국회 이전이 본격 착수되고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까지 확정된 지금 세종시 교통 접근성의 시급한 개선이 필수적이라고 확신한다.

특히 KTX 세종역은 향후 행정수도 세종의 미래를 좌우할 필수 기반 시설로서 행정수도 완성의 핵심 전제조건이며 장기적으로 충청권 메가시티 성공의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정부는 KTX 세종역 설치를 위한 세종시와 세종시민의 노력을 더 이상 저버리지 말고 KTX 세종역 설치 요구를 적극 수용하라.

하나, 정부는 행정수도 세종 완성의 핵심조건인 KTX 세종역 설치를 조속히 추진하라.

하나, 정부는 세종시가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하고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서의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행정수도 세종의 위상에 적합한 교통체계 구축방안을 마련하라.

2022. 9. 15.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세종시의회, 김현미 의원 대표 발의한 ‘정치·행정 효율화를 위한 국회 전부 이전 촉구 결의안’ 채택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상병헌)는 9월 15일 제78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김현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정치·행정 효율화를 위한 국회 전부 이전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번 결의안에는 입법부와 행정부의 이원화에 따른 비효율을 해소하고, 세종특별자치시가 국가 균형발전을 선도하는 행정수도로 거듭날 수 있도록 국회의사당 전부 이전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번 결의안 채택에 따라 세종시의회는 ‘국회 분원 설치 시 예산 낭비와 비효율적인 정치·행정 이원화 논란이 지속될 것’이라며 ‘국회 분원이 아닌 전부 이전을 요구한다’는 입장을 공식 표명했다. 또한 결의안에서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은 여의도 국회의사당

의 1.9배에 달하는 면적에 1조 4,263억원이 투입되는 대형 사업”이라며 “미국 워싱턴 D.C, 캐나다 오타와, 호주 캔버라 등 해외 주요 행정수도를 살펴봐도 정치와 행정의 이원화 사례는 전무하다”고 강조했다.

세종시의회 전 의원은 ▲국회 전부 이전을 전제로 ‘국회 세종의사당 기본계획 수립용역’ 추진 ▲정부 예산에 ‘국회 전부 이전 건립비용’ 추가 반영 ▲개헌을 비롯한 세종시의 행정수도 법적 토대 마련을 위한 노력을 촉구했다.

세종시의회는 ‘정치·행정 효율화를 위한 국회 전부 이전 촉구 결의안’을 국회의장과 국무총리, 행안부장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등에 이송했다.



정치·행정 효율화를 위한 국회 전부 이전 촉구 결의안

세종특별자치시는 국가 균형발전을 선도한다는 상징성을 가지고 출범한 도시로서, 현재 47개의 중앙행정기관과 16개 국책 연구기관이 이전했으며, 2027년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로 행정수도 완성을 앞두고 있다.

행정수도는 국가의 정치·행정을 담당하는 도시로써, 국회·대통령실·정부부처 등 주요 국가기관이 위치해야 한다. 미국 워싱턴 D.C, 캐나다 오타와, 호주 캔버라 등 해외 주요 행정수도 사례들을 보아도 정치와 행정의 이원화 사례는 전무하다.

헌법상 제약으로 인해 국회의 본질적인 중추 기능을 수행하는 본회의장은 여의도에 남겨두고 일부 상임위만 세종으로 이전되는 ‘국회분원’ 안으로 검토되고 있다. 세종의사당 건립사업은 부지 63만 1천㎡로 여의도 국회의사당의 1.9배에 달하는 면적에 1조 4,263억원이 투입되는 대형 사업으로 분원 설치에 그친다면 예산 낭비가 될 것이 명백하다.

특히, 본회의 참석을 위한 300인의 국회의원들과 각종 현안 대응을 위한 담당 공무원들의 이동으로 여전히 많은 시간과 예산이 낭비될 것이며 비효율적인 정치·행정 이원화 논란은 지속될 것이다.

이에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로 이원화 되었던 입법부와 행정부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국회와 정부 간 신속한 업무처리를 위해서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국회 분원이 아닌 전부 이전을 요구한다.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사업은 서울과 세종의 정치·행정 이원화로 인한 행정 비효율을 해소하고 국가 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해 추진되는 것이다. 당초 세종시 출범 취지에 맞게 행정수도로서의 기능을 온전히 수행할 수 있도록 국회 전부 이전을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정부와 국회는 현재 추진 중인 ‘국회 세종의사당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전부 이전’을 전제로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정부와 국회는 정부예산에 ‘국회 전부 이전 건립비용’을 추가 반영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국회는 세종특별자치시가 행정수도로 거듭날 수 있도록 개헌을 비롯한 법적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한다.

2022. 9. 15.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세종시의회, 김학서 의원 대표 발의한 ‘보통교부세 확충을 위한 세종시법 개정 촉구 결의안’ 채택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상병헌)는 10월 19일 제78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김학서 의원(전의·전동·소정면, 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보통교부세 확충을 위한 세종시법 개정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현재 세종시는 「세종시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2023년까지 한 시적으로 재정부족액의 25%를 보통교부세로 지급받고 있다. 기초와 광역 업무를 동시에 수행하는 단층제 광역자치단체임에도 기초자치단체에 지급하는 보통교부세를 받지 못하고 있다.

문제는 「세종시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기초사무 수행에 필요한 지방세는 징수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이다. 세종시의회 차원에서 보통교부세의 차별적 지급 문제를 표면화하고 이를 개선해 달라는 공동의 목소리를 낸 이유다.

반면 2007년 단층제로 출범한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제주특별법」 제124조에 따른 기초분 2.2%를 포함해 보통교부세 총액

의 3%를 정률로 받고 있다. 그 결과 올해 제주도 보통교부세 총액은 1조 6,531억원에 달한다.

더욱이 세종시 지역 내 부동산 거래량이 현저히 감소해 세수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2019년부터 한 해 평균 1,000여억원에 가까운 지방채를 발행하는 등 재정 여건이 악화돼 왔다. 여기에 2030년까지 국가가 세종시에 조성한 모든 공공시설물 이관까지 더해지면 세종시가 떠안게 될 공공시설물 유지관리 부담액만 약 2,528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에 세종시의회 전 의원은 그동안 보통교부세 개선 건의에 대한 ‘수용 불가 원칙’을 고수해온 행정안전부에 유감을 표명하고 ▲보통교부세 지급 특례기한 폐지 ▲세종시의 단층제 특성을 반영한 보통교부세 산정방식 개선 ▲중앙부처 및 관계기관 이전으로 발생하는 재정수요와 그에 따른 보정수요 발굴로 차별 없는 보통교부세 지급을 강력히 촉구했다.



세종시 보통교부세 확충을 위한 「세종시법」 개정 촉구 결의안

우리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국가균형발전 실현과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세종시 특성을 반영한 「세종시법」상 ‘재정특례’ 조항의 개정을 요구한다. 보통교부세는 지방재정을 보완하는 주요财源으로, 현재 우리시는 「세종시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재정부족액의 25%를 보통교부세로 지급받고 있으며, 이마저도 ‘23년에 종료될 예정이다. 세종시는 기초와 광역업무를 동시에 수행하는 단층제 광역자치단체임에도 기초자치단체에 지급하는 보통교부세를 받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세종시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기초사무 수행에 필요한 지방세는 징수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같이 기초사무를 수행하는 지자체임을 법률로 인정하고 있음에도 기초사무에 대한 보통교부세 산정근거는 마련하지 않아 보통교부세의 차별적 지급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2007년 단층제로 출범한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특별법」 제124조에 따른 기초분 2.2%를 포함해 보통교부세 총액의 3%를 정률로 지급받고 있다. ‘22년만 해도 그 액수가 1조 6,531억원에 달하며, 기초분을 제외한 0.15%에 해당하는 837억원만 받은 우리시의 20배가 넘는다. 인구 규모가 비슷한 광주시(1,464억)와 원주시(4,237억), 진주시(4,543억) 등의 기초자치단체와 비교해도 크게 낮은 수준이다.

세종시는 부동산 거래 감소로 인한 지방세 증가율이 둔화되고 있고, ‘19년부터는 한 해 평균 1,000여억 원에 가까운 지방채 발행이 지속되고 있으며, ‘22년에는 예산 대비 채무비율이 14%를 넘어 재정여건이 열악한 상태다. ‘30년에는 행정중심복합도시가 완성되는 해로 국가가 조성한 공공시설물이 모두 세종시로 이관되므로 한해 유지관리 비용만 2,528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세종시 행정체계 특성이 미반영된 재정특례가 현실성있게 개정되지 않는다면, 국가균형발전과 행정수도 완성의 걸림돌이 될 것이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우리시가 지속적으로 행정안전부에 보통교부세 제도 개선을 건의했음에도 “특별법에 교부 근거가 없어 기초분에 대한 교부가 불가하다”는 입장만 고수하고 있는 것에 유감을 표하며, 다음과 같은 사항을 즉각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국가균형발전과 행정수도 완성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도록 보통교부세 지급 특례기한 폐지를 촉구한다.

하나, 보통교부세 산정 시 세종시의 단층제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산정방식 개선을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국회를 비롯한 중앙부처 및 관계기관 이전으로 발생하는 재정수요와 이에 따른 보정수요를 발굴해 차별 없는 보통교부세 지급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2. 10. 19.



세종 특별자치시의회

행복도시법 개정안과 대통령 세종집무실 로드맵 39만 세종시민과 함께 환영!



수도권 소재 각종 위원회 이전방안 모색할 때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최근 정부의 대통령 세종집무실 로드맵 발표를 비롯해 정부 예산안에 대통령 세종집무실 기본계획 용역비 반영을 환영하며, 법무부·여성가족부 이전 법안 발의 및 수도권 소재 14개 정부위원회의 조속한 이전 논의에 대해 적극적 지지 의견을 밝힌다.

국회에서 논의 중인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 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행복도시법)’은 이전 대상 기관에 법무부와 여성가족부를 포함함으로써 부처 간 업무 효율을 높이고 국가 균형 발전을 촉진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이번 행정도시법 개정을 통해 법무부와 여가부 이전을 속도감 있게 추진함으로써 세종시를 중심으로 한 균형발전 정책의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향후 법무부 이전이 그간 세종시민들과 함께 외쳐온 세종지방법원 및 행정법원 설치 등 지역민들의 사법 접근성 향상에 한 걸음 더 다가가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이러한 국회 차원의 움직임과 함께 내달 중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 행복청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 추진단’ 출범이 공식화됐다. 연구용역 및 설계 예산과 관련한 행정 지원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를 전제로 한 실무적 협의의 장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환영할 만하다.

특히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집무실을 연계하는 도시계획에 대한 정부의 구상은 국정 효율 향상을 위한 구체적인 비전 수립의 의미뿐 아니라, 그간 우리 의회 차원에서 제기해온 대통령 세종집무실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할 수 있어 긍정적이다.

다만, 2027년으로 예정된 대통령 세종집무실 완공까지 ‘정부세종청사 내 임시 집무공간 시설을 보완하고 이용 빈도를 늘리겠다’는 행정안전부의 계획과 별도로 대통령실 차원의 세종집무실 활용 방안 수립도 적극 검토해주길 촉구한다.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열겠다’는 현 정부의 국정 운영목표가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 로드맵 확정을 계기로 더욱 구체화 되어서 다양한 정책적 시도로 이어져야 한다.

8월 2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나온 수도권 소재 각종 위원회의 세종 이전이 대표적인 예다. 업무 연계성과 주무부처의 위치를 고려할 때 14곳에 달하는 중앙행정기관 위원회와 행정위원회, 대통령 소속 자문위원회의 세종 이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다. 정부가 법적 절차와 이전 필요성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해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의 상징성에 부합하는 위원회를 순차적으로 세종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모색해주길 바란다.

끝으로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21대 국회의 초당적 합의를 통한 행복도시법 개정을 촉구하며, 유관기관과 공조를 기반으로 행정수도 완성과 관련된 주요 현안들을 해결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상임·특별위원회 활동

의회운영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를 소개합니다!



제77회 임시회 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



유인호 위원장



김동빈 부위원장



김광운 의원



김현옥 의원



여미전 의원

〈제77회 임시회〉

조례안 및 2022년 주요업무 계획 청취

7월 22일 제2차 회의에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협의의 건’ 등 6건을 심사했다. 이날 심사 결과 ‘의회사무처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협의의 건’을 원안 가결했다.

이에 따라 제78회 정례회 기간 중 9월 26일부터 10월 5일까지 2022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또한 ‘세종특별자치시 공공시설물 인수점검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과 ‘중증장애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조례안’도 원안 가결됐다.

이어진 2022년도 주요 업무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에서 위원들은 ▲정책보좌관 조기 확충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사무처 정원 확충 ▲행정사무감사 시민제보 활성화 위한 다각적 홍보방안 마련 ▲전자의안 시스템 조기 구축 완료 등을 요구했다.



2022년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제78회 정례회〉

조례안 및 21회계연도 결산, 2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

9월 20일 2차 회의를 열고 ‘2021회계연도 결산’ 등 4건을 심사했다. 이날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들은 의회사무처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집행 잔액을 최소화할 것을 주문하고 성과지표를 개선해 달라고 요구했다.

더불어,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환경 개선과 함께 의정모니터단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찾아가는 의회교실의 대상을 확대해 달라고 요구하는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의회운영위는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 ‘세종특별자치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 가결했다.

유인호 위원장은 “의회사무처의 업무 특성상 일반 행정운영 경비 예산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나, 집행 잔액 원인별 내역을 분석하고 예산 편성부터 세심히 살펴 지출 잔액 감소를 위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2년 행정사무감사 실시

10월 5일 의회사무처를 대상으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유인호 위원장은 의안 제출기한을 엄격하게 준수하도록 당부하고 본회의장과 상임위원회 회의장에 허가받지 않은 인원 출입에 대한 철저한 사전 관리를 요청했다.

김동빈 부위원장은 의원실 환경 정비와 의회청사 리모델링 등 사업 추진 시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당부하는 한편, 의정자료실 운영과 관련 의정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료 확보와 상시 활용이 가능하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김광운 의원은 사무처 직원 휴직 등에 따른 결원 발생 시 총원까지 업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수립하고 직원들의 근무 환경과 처우 개선을 요청했다.

또한 원활한 의정활동에 필수적인 정책지원관 정원 확보를 위해 집행부와 긴밀히 협조하는 등 다각적으로 노력해 달라는 당부도 전했다.

김현욱 의원은 연구용역 추진 시 내용이나 절차를 시민들에게 공개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달라고 요청한 데 이어, 다양한 기관과 교류를 통해 우수한 정책을 의정활동에 접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의정활동이 시민들에게 제때 공유될 수 있도록 홍보 인력 확대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

여미전 의원은 사무처 직원의 처우 개선 방법으로 세종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개선과 시간선택제 등 소수 직원에 대한 배려 및 성과급 지급방안을 고민해 달라고 요청했다.

상임·특별위원회 활동

행정복지위원회

행정복지위원회를 소개합니다!



임채성 위원장



유인호 부위원장



김재형 위원



김충식 위원



김현미 위원



여미전 위원



최원석 위원



제78회 정례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

〈제77회 임시회 기간〉

조례안과 동의안 11건 심사 및 하반기 계획 보고

7월 18일 제1차 회의에서 조례안과 동의안 등 11건을 심사하고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받았다. 행정복지위원회는 ‘세종특별자치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5건과 ‘종촌종합복지센터 가정·성 폭력통합상담소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등 동의안 5건 등을 심사한 결과 총 11개 안건 중 9건을 원안 가결했으며, 2건을 수정 가결했다.

의정모니터단 간담회 개최

9월 13일 대회의실에서 의정모니터단 행정복지분과와 간담회를 열고 모니터단 운영 및 활동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행정복지위원회 의원 전원과 모니터단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모니터링 활동 계획 및 발전 방향, 효과적인 의정모니터단 운영 방향 등을 다각적으로 모색했다.

〈제78회 정례회 기간〉

2021회계연도 결산안 예비심사 실시

9월 16일과 19일 양일간 ‘2021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예비 심사를 실시했다. 행정복지위원회는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통해 이월액과 집행 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지적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임채성 위원장은 “순세계잉여금은 주로 초과 세입과 집행 잔액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세출 예산의 정확도를 제고하고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통해 집행 잔액을 최소화할 특별한 대책 강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복지위원회 현장방문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마을기록문화관 등 행정사무감사 현장 방문

9월 26일 행정사무감사 현장 방문은 마을기록문화관과 세종문화예술회관, 세종장애인보호작업장, 종촌종합복지센터를 방문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특히 마을기록문화관 운영과 관련해 주민 기록 기증 캠페인, 주민자치 기록물의 지속적인 수집, 찾아가는 주민자치 기록교육, 주민자치회 및 공동체 활동 단체·학교 등 홍보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조치원읍에 위치한 세종문화예술회관에서는 시설 장비와 무대, 운영프로그램 등을 점검했다.

또한 조치원읍에 위치한 세종장애인보호작업장에서 작업장 환경 개선의 필요성과 장애인 기업 생산물에 대한 공공기관 우선 구매 인식 개선 및 제도적 보호장치 강화에 대한 건의를 청취하고, 위원회 차원에서도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끝으로 종촌종합복지센터에 위치한 장애인주간보호센터와 장애인보호작업장을 방문해 센터 현황과 시설, 근무 여건 등을 점검했다.

2022년 행정사무감사 실시

9월 26일부터 10월 4일까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임채성 위원장은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로 제출받은 법정계획 수립 여부에 대해 점검하고 집행부에서 누락한 자료에 대해 지적했다.

유인호 위원은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장 공석으로 인해 업무 처리가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은 점을 언급하며 공개 채용을 통해 정상적인 정책 사업 추진을 주문했다.

김재형 위원은 ‘모두의 놀이터’ 사업의 후속 조치가 미비하다며 안전한 놀이터가 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관리계획 수립 방안을 요구했다.

김충식 위원은 현재 세종시의 위원회 운영 현황과 관련해 양성평등기본법상 특정 성별이 60%가 넘지 않아야 한다고 언급했다.

김현미 위원은 읍면동사무소의 결원에 대해 읍면동 직원들의 고충과 직결될 수 있는 만큼 조속히 인력을 보강해 달라고 요청했다.

여미전 위원은 기준인건비 약 300억원을 이월하는 등 소극적인 행정에 대해 지적하고 정확한 조직 진단을 통해 기피부서에 대한 인력 재배치를 효율적으로 개선해 달라고 요구했다.

최원석 위원은 민간 위탁 사업의 공개모집 과정과 수탁자에 대한 적절한 관리·감독을 추진해 달라고 강조했다.

세종시 제2차 추경안 및 조례안 등 심사

10월 7일부터 12일까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예비 심의한 데 이어 조례안 13건 및 동의안 20건, 기타 안건 3건을 심사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2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예산 9,092억원 대비 총 647억원을 증액한 9,739억원 규모다.

7일과 11일 추경 예산안 심의와 계수 조정을 거쳐 충청권 생활문화 축제 등 4개 사업에서 1억 1,900만원을 감액하고 실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공원 시설 보강 및 그늘막 설치 등 9개 사업에서 1억 1,900만원을 증액했다.

12일 열린 6차 회의에서 행정복지위는 조례안 13건 중 10건을 원안 가결하고 3건을 수정 가결했으며, 동의안 등 기타 안건 23건 중 22건을 원안 가결하고 1건을 수정 가결했다.

상임·특별위원회 활동

산업건설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를 소개합니다!



이순열 위원장



김동빈 부위원장



김광운 위원장



김영현 위원



박란희 위원



윤지성 위원



이현정 위원



제77회 임시회 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제77회 임시회 기간〉

조례안 등 8건 심사 및 실적·계획 청취

7월 18일부터 21일까지 조례안과 동의안 등 8건을 심사하고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받았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세종특별자치시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등 조례안 4건과 ‘생활폐기물종합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등 동의안 3건, 산업건설위 소관 2022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심사한 결과 총 8개 안건 중 6건을 원안 가결했으며 조례안 2건을 수정 가결했다. 이순열 위원장은 “고물가에 코로나 재확산 등으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및 시민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집행부에서는 이에 대한 적극적 관심과 함께 지원방안을 강구해 줄 것”을 당부했다.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공동 노력” 당부

이순열 산업건설위원장은 8월 8일 집무실에서 세종시 레미콘제조사 협의회 관계자들과 만나 지역 건설산업의 활성화 촉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관내 7개 레미콘 제조업체로 구성된 세종시 레미콘제조사 운영의 고충과 제안 사항을 청취하고 관련 부서인 도로과 관계 공무원과 실질적인 정책 지원방안을 모색했다. 세종시 레미콘제조사 협의회는 세종시에서 시행하는 각종 민간 및 공공 건설 공사 시 우리 지역 자재 및 장비 등을 우선 공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세종시 차원의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했다.

매월 현장의 목소리 듣는다

시민의 목소리를 현장에서 듣고 주요 현안에 대한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매월 ‘찾아가는 현장 방문’을 실시한다. 8월 29일 첫 일정으로 내로부터 인수 예정인 금강보행교와 새롭게 조성된 조치원복합커뮤니티센터 및 도도리파크 등 3곳을 방문해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개선해야 할 문제점 등을 파악했다.

의정모니터단 간담회 개최

9월 5일 의회청사 대회의실에서 의정모니터단 산업건설분과와 1차 간담회를 개최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전원이 간담회에 참석해 산업건설분과 모니터단원(총 13명)과 모니터링 활동 계획 및 발전 방향, 의정모니터단을 더욱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방안을 다각적으로 논의했다.

〈제78회 정례회 기간〉

2021 회계연도 결산 심사

9월 16일과 19일 2021 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기금 결산 승인안을 심사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들은 심사 과정에서 예산 편성 시 사업 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 집행의 적정성과 효율성 등을 살펴 불용되거나 이월되는 예산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후속 조치를 요구했다.

또한, 정책 목적과 부합되는 성과지표를 개발하고 성과지표 작성 시 정확도 검증에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했다.

2022년 행정사무감사 현장 방문

9월 26일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소관부서 업무와 관련된 현장을 방문했다. 이날 현장 방문은 운영 현황 및 실태 점검을 확인하기 위해 도시재생사업 3곳과 생활자원회수센터, 도시통합정보센터, 공공급식지원센터 순으로 진행했다.

2022년 행정사무감사 종료

9월 26일부터 10월 4일까지 경제산업국 등 본청·직속기관 10곳과 세종도시교통공사 등 5개 출자·출연기관 포함 15개소에 대한 2022년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했다.

김동빈 부위원장은 ▲유사 위원회 통폐합 운영 ▲지역화폐 국비 지원 중단에 대비한 여민전 지원 방안 강구 등을 지적했다.

김광운 의원은 ▲과다한 이월 사업 및 저조한 예산 집행을 개선을 통한 재정 건전성 확보 ▲면 단위 LPG 보급 확대 등에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주문했다.

김명현 의원은 ▲하자 담보 기간 내 하자 조치 ▲난임부부에 대한 임신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사업 확대방안 등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박란희 의원은 ▲KTX 조치원 정차와 세종역 신설에 대한 투 트랙 전략 우려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이행 등을 요구했다.

윤지성 의원은 ▲공동주택관리 하자·분쟁 사례집 보급 ▲전통시장 화재 및 가스 폭발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 점검 철저 등을 제언했다.

이현정 의원은 ▲과속방지턱 전수조사를 통한 불필요한 방지턱 제거 ▲공동구 수용기관별 관리비 부담률 개선방안 등을 요구했다.

이순열 위원장은 “버스 노선 변경 시 충분한 의견 수렴 및 계도기간을 거쳐야 하며 가로등 장애 처리를 할 때 시민신고에만 의존하지 말고 도시통합정보센터 CCTV 관제와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고민해달라”고 주문했다.

2회 추경 및 조례안 등 심의

10월 7일부터 12일까지 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조례안 등을 심사하고 2022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2022년 제2회 추경 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648억 4,916만원(8.3%) 증액한 8,427억 5,132만원으로 편성됐다.

계수 조정 결과 전통시장 키즈카페 조성사업 등 4개 사업에서 4억 3,700만원을 감액하고, 택시 카드 수수료 및 모뎀 통신료 지원사업 등 2개 사업에서 2억 9,900만원을 증액했다.

아울러, 조례안 10건과 동의안 5건, 의견 청취 1건,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건을 심사한 결과 11건을 원안 가결하고 6건을 수정 가결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산업건설위원회 현장 방문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의정모니터단 간담회

상임·특별위원회 활동

위원회
교육안전

교육안전위원회를 소개합니다!



이소희 위원장



김현욱 부위원장



김학서 위원



김효숙 위원



안신일 위원



조치원중학교 현장 방문

〈제77회 임시회 기간〉

상반기 주요 업무 보고·청취 및 조례안 등 4건 심사

7월 18일부터 21일까지 2022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 결과를 청취하고 조례안 등 4건을 심사했다.

이날 회의에서 세종시교육청이 제출한 조례안 등 4건을 원안 가결하고 ‘2022~2026년 지방공무원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과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1차)’,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된 안건을 처리했다.

이소희 교육안전위원장은 “시민 생활과 직결되는 우리 시 교육 및 안전과 관련된 현안에 관해 위원들과 서로 협력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등 상임위 활동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청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처리

7월 25일과 26일 양일간 세종시교육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이하 세종시교육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3,637억원 증액된 1조 2,365억원 규모다. 위원들은 심의 과정에서 인건비, 학교·기관 설립비, 학교 안전 사업비 등 필수 사업 예산을 신속히 집행하고, 포스트 오미كرون 등 향후 코로나19 상황에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해 줄 것을 주문했다.

조치원중·해밀초 현장 방문

8월 4일 조치원중학교 이전 현황과 해밀초등학교 마을 연계 운영 우수사례를 파악하기 위해 현장 방문을 실시했다.

이날 현장 방문은 지난해 조치원중 이전에 따른 학교 현장을 확인하고 마을과 학교가 연계된 해밀초등학교의 다양한 활동 우수 사례를 면밀히 검토하기 위해 마련됐다.

세종시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 간담회

8월 31일 의정실에서 교육 현안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세종시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회장 서미애)와 간담회를 실시했다.

이날 간담회를 통해 학교 주변 금연거리 지정 및 어린이보호구역 내 노랑 신호등 교체 추진, 통학 차량 승하차 문제 해결 등에 필요한 협력방안과 정책지원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교육안전위는 세종시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에서 파악한 관내 학교운영위원회의 요구사항들을 심도 있게 검토해 교육청과 시청 관계부서에 후속 조치를 건의할 계획이다.

세종시학교학부모연합회 소통 간담회

9월 2일과 6일 세종시학교학부모연합회 회원들과 두 차례 ‘소통 간담회’를 실시했다.

이번 간담회는 북부와 남부지역으로 나눠 세종시 학교 학부모연합회에서 수렴한 지역 및 학교별 현안을 공유하고 향후 미래지향적 교육 실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안전위원회는 소통 간담회를 계기로 학부모들의 관심 사안

과 역점 과제 등을 발굴해 내실 있게 성장할 수 있는 교육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교육 현안과 관련한 소통과 협력을 통해 교육 환경 개선에 필요한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다각적으로 수렴할 계획이다.

Wee클래스 점검차 한솔초 방문

9월 7일 현장 밀착형 의정활동의 일환으로 한솔초등학교를 방문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단위 학교 학생 상담실인 위(Wee)클래스 운영 현장을 살펴보고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안전위는 한솔초 Wee클래스 운영 실무진과 코로나19에 따른 운영상 고충과 한계점 등에 관한 의견과 요구 사항을 토대로 향후 의회 차원의 지원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한 2012년 세종시 출범 이후 개교한 한솔초의 현안 사항을 청취하는 등 관내 동 지역 학교가 겪는 문제점 등을 파악하는 데 주력했다.

〈제78회 정례회 기간〉

의정모니터단 간담회 개최

9월 15일 의회 대회의실에서 의정모니터단 교육안전분과와 1차 간담회를 열고 함께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의정활동과 관련된 각종 제안과 시정 발전에 필요한 제도 개선 건의 등 교육안전분과 의정모니터단의 다양한 의견을 교육안전위원회에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안전위원회 한솔초등학교 현장 방문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교육안전위원회 현장 방문

2021회계연도 예산결산 예비심사 실시

9월 16일과 19일 양일간 ‘2021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했다. 교육안전위는 이번 예비 심사과정에서 예산 집행 과정의 적정성과 효율성 등을 면밀히 살피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후속 조치를 요구했다. 이소희 위원장은 예산의 전용 및 계속비, 명시 이월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비중 있게 다룰 것이며, 예비비 편성에 대한 관리 부분은 면밀히 살필 것을 당부했다.

장영실고, 안전체험교육원 등 4개소 현장 방문

9월 26일 현장 방문을 시작으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돌입했다. 이날 장영실고등학교, 안전체험교육원, 조치원119안전센터, 양화취수장 순으로 4개소에 방문했다. 위원들은 안전체험교육원에서 체험시설을 확인한 뒤 관내 많은 인원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을 주문한 데 이어, 최근 개설한 대안교육 시설인 늘벗학교에서 학생들이 안정적으로 생활하는 데 필요한 교육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

9월 27일부터 29일까지 교육청, 9월 30일 소방본부, 10월 4일 시민안전실 순으로 행정사무감사를 마쳤다.

이소희 위원장은 세종시가 직접 보험사와 계약하고 보험료를 부담해 각종 재난 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좋은 제도가 있다”며, “시민들에게 적극 홍보하여 관련 제도를 필요한 경우 이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김현옥 부위원장은 “사용자를 고려해 세종 소방본부와 시민안전실에서 관리하는 홈페이지 이용 편의성을 개선해 달라”며 “향후 유지 관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 담당자가 관련 내용을 꼼꼼히 점검하고 의견을 적극 반영해 줄 것”을 주문했다.

김학서 의원은 “재난 발생 지역과 관련해 지역과 소통하면서 다수의 부서가 협업할 필요가 있다”며 “현재 안전 표지판이 없는 지역을 세심히 파악하여 재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살펴 달라”고 말했다.

김호숙 의원은 한솔동 소방서의 열악한 현장 근무 환경을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하고 “우리 시 안전을 책임지는 시민안전기관으로서 근무자 처우는 지속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신일 의원은 행정중심복합도시 개발부담금과 관련해 “그동안 지역 사회에서 NH가 행복도시 개발을 통해 얻은 이익 금액을 정확히 산정하고, 이를 환수하기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대전세종연구원(도시안전연구센터) 출연 동의안 등 의결

10월 11일부터 12일까지 동의안 1건 및 조례안 6건을 심의한 데 이어 세종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예비 심사했다. 교육안전위는 세종시교육청에서 제출한 조례안 4건 중 3건을 원안 가결하고 1건을 수정 가결했으며, 세종시청에서 제출한 조례안 2건과 동의안 1건을 원안 가결했다.



교육안전위원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교육안전위 의정보니터단 간담회

상임·특별위원회 활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소개합니다!



안신일 위원장



김충식 부위원장



김동빈 위원



김재형 위원



김현미 위원장



윤지성 위원



이소희 부위원장



이순열 위원



이현정 위원



임재성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코로나19 관련 교육과정 정상화 등 1조 2,365억원 규모

제77회 임시회 기간 중인 7월 28일 제1차 회의를 열어 세종시교육감이 제출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1차 안정화기금 운영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고 수정 가결했다.

세종시교육비특별회계 추경 예산안은 정부 2차 추경에 따른 보통교부금 추가 교부 등을 반영한 것으로, 기정예산 8,728억원보다 3,637억원(41.7%) 늘어난 1조 2,365억원 규모다.

제4대 세종시의회 원 구성 이후 첫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는 코로나19 이전 수준의 교육 회복과 미래지향적 교육사업의 지속 추진을 비롯해 학교 안전 강화 지원에 중점을 두고 심도 있는 심사가 이뤄졌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계수 조정을 거쳐 교육청 정책기획과 소관 스마트기기 구입 등 14개 사업에서 9억 2,200만원을 감액하고 다문화 교육센터 운영 등 6개 사업에서 9억 2,200만원을 증액했다. 또한 2022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기정 예산액 대비 2,112억 8,400만원을 증액하여 원안 가결했다.

안신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장은 “사업의 타당성과 실효성을 우선 검토하고, 정확한 추계를 통해 예산을 편성했는지 면밀히 검토하며 심사를 진행했다”면서 “심사 과정에서 지적된 사항들을 적극 반영해 개선해 나가고, 추경예산 편성 취지와 목적에 따라 내실 있게 예산을 집행해달라”고 당부했다.



제78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시청·교육청 2021회계연도 결산 심사

제78회 정례회 기간 중인 9월 21일과 22일 양일간 세종시청과 세종시교육청 세입·세출 결산안과 예비비 지출 및 기금 결산안을 심사하고 원안 가결했다.

예결특위에서 심사한 세종시 결산 규모는 예산 현액 기준 전년 대비 14.5% 증가한 2조 3,617억원이며 세입 결산액은 2조 4,965억원, 세출 결산액은 2조 834억원에 달했다. 교육청 결산 규모는 전년 대비 13.7% 증가한 1조 667억원으로 세입 결산액은 1조 688억원 세출 결산액은 1조 292억원이다.

예결특위는 시청 결산심사에서 과다한 순세계잉여금에 대해 지적하면서 개선 대책 수립과 성과관리 제도 취지에 부합하는 충실한 성과 보고서 작성, 꼼꼼한 사업 계획 검토를 통한 예산 집행 등 예산 집행 기준과 절차를 반드시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교육청 결산심사를 통해 앞으로 내국세 증가 등의 사유로 증액된 교부금이 단순히 기금으로 적립되지 않도록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수도 완성을 위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아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의회의 심의권이 존중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내실 있게 예산을 집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안신일 위원장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이번 결산심사를 통해 필요한 예산이 적재적소에 편성되어 낭비 없이 목적대로 집행되었는지 시청과 교육청의 예산 운용 전반을 꼼꼼히 따져봤다”면서, 예결특위에서 지적한 사항들이 올해 시청과 교육청 예산 운용에 적극 반영되어 개선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세종시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

제78회 정례회 기간 중인 10월 14일과 17일 양일간 세종시장이 제출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고 수정 가결했다.

세종시장이 제출한 2022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 예산 대비 1,427억원(7.2%) 증가한 2조 1,263억원 규모이다.

특히 예산결산특위는 이번 추경 예산안에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시민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는 시정 4기 현안 관련 사업에 주력한 부분과 중장기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지방채 상환에 집중한 것이 눈길을 끌었다고 밝혔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제2회 추경 예산안 심사 및 계수 조정을 거쳐 정책기획관 소관 대전세종연구원 운영 등 9개 사업에서 54억 5,600만원을 감액하고, 교통과 소관 택시카드 수수료 및 모뎀 통신료 등 16개 사업에서 54억 5,600만원을 증액했다. 그리고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기정 예산액 대비 9,300만원 증가한 3,998억 3,300만원 규모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됐다.

안신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시정 4기 기반 조성 and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시민 편의 향상, 재정 건전성 확보에 주안점을 두고 심사했다”면서 “심사 과정에서 예산편성 사전 절차 미이행 사항 등 지적된 사항들을 개선하고, 소중한 재원을 적재적소에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상임·특별위원회 활동

특별위원회 공공시설물 인수점검



이순열 위원장



김재형 부위원장



김동빈 위원



김영현 위원



김현옥 위원



김효숙 위원



박란희 위원



유인호 위원



윤지성 위원

세종시의회 제5기 공공시설물 인수특위 제1차 회의 개최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회(의장 상병헌) 제5기 공공시설물 인수점검 특별위원회(위원장 이순열)는 8월 29일 위원장·부위원장 선임 및 제1차 회의를 시작으로 공식 활동에 돌입했다.

공공시설물 인수점검 특별위원회(이하 공공인수특위)는 이날 회의에서 위원장에 이순열 의원과 부위원장에 김재형 의원을 각각 선임하고 김동빈, 김영현,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유인호, 윤지성 의원 총 9명의 특위 구성을 완료했다.

공공인수특위는 미래전략본부로부터 공공시설물 인수현황 및 향후 인수계획 등을 보고 받은 후 질의·답변 시간을 가졌다.

공공특위 위원들은 공공시설물을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물 공용 개시를 확대할 것과 재산권 행사에 불편이 없도록 대지

권에 관한 이전등기 절차 완료를 요구했다.

또한, 엘리베이터 강화유리 파손 및 보도블록 단차 발생 등 금강보행교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안전과 직결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정밀 점검을 통해 시설물 인수 전에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강력히 요청했다.

이순열 위원장은 “제5기 인수점검특위는 시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현장 중심으로 운영할 계획”이라면서 “시민과 함께 공공시설물 점검이 이뤄질 수 있도록 시민참여 특별점검반을 조속히 편성해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공공특위는 행복도시 예정 지역 내 설치되는 공공시설물의 부실 공사 예방과 함께 완벽하고 안전한 시설물 이관을 위해 2024년 6월 30일까지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공공특위





윤리특별위원회

상임·특별위원회 활동

윤리 특별위원회

윤리특별위원회를 소개합니다!



김광운 위원장



여미전 부위원장



김영현 위원



김학서 위원



김현욱 위원



김효숙 위원



박란희 위원



유인호 위원



최원석 위원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 처리

제76회 임시회 기간 중인 7월 6일 행정복지위 회의실에서 제1차 회의를 열고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처리했다. 이날 김광운 윤리특별위원장은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 주신 데 대해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윤리특별위원회는 세종시의회 의원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및 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심사·의결하는 특위로 앞으로 위원님들과 함께 윤리특별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또한 여미전 부위원장은 “저를 부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며 “앞으로 위원장님을 잘 보필하고 위원님들과 함께 윤리특별위원회 활동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주요 안건 처리 현황 < 제77회 임시회 >



제1차 본회의(2022. 7. 15.)

의사일정	안 건 명	처리결과	비고
제1항	제77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7.15.~7.29.(15일간)	원안가결	
제2항	제77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 김영현, 김재형	원안가결	
제3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결정의 건	원안가결	
제4항	2022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	처리	
제5항	2022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 · 세출 추가 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과 제안설명회의 건	처리	
제6항	2022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	처리	
제7항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와 관련한 대국민 약속 이행 촉구 결의안	원안가결	
제8항	휴회의 건(7.16~7.18, 3일간)	원안가결	

제2차 본회의(2022. 7. 19.)

의사일정	안 건 명	처리결과	비고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원안가결	행복위 (11건)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 행정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제3항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2차)	원안가결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제5항	종촌종합복지센터가정 · 성폭력통합상담소 운영 민간위탁동의안(재위탁)	원안가결	
제6항	세종특별자치시 자립지원전담기관 운영 민간위탁동의안	원안가결	
제7항	공유재산(은하수공원)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원안가결	
제8항	세종특별자치시 감염병관리지원단 민간위탁동의안(재위탁)	원안가결	
제9항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의사일정	안 건 명	처리결과	비고
제10항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콘텐츠 산업 육성(스포츠산업 혁신기반 조성 사업) 출연 동의안	원안가결	행복위 (11건)
제11항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제12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교안위 (4건)
제13항	세종특별자치시 교육·학예에 관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주민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	
제14항	세종특별자치시 교육·학예에 관한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 연서 주민수 기준 조례 폐지조례안	원안가결	
제15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1차)	원안가결	
제16항	휴회의 건(7.20~7.28, 9일간)	원안가결	

제3차 본회의(2022. 7. 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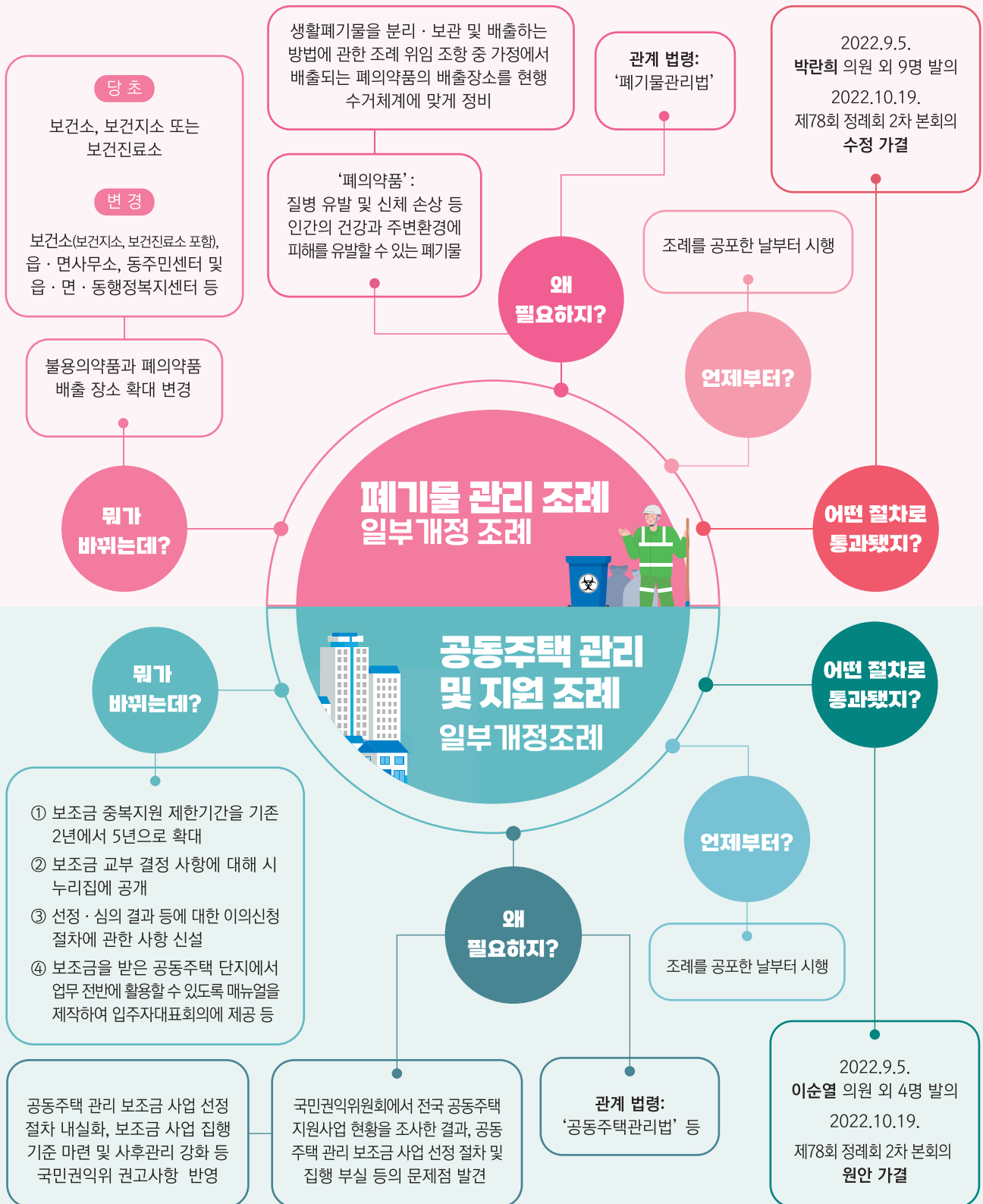
의사일정	안 건 명	처리결과	비고
제1항	긴급현안 질문(임채성 의원)		
제2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	원안가결	운영위 (4건)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중증장애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조례안	원안가결	
제5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공시설물 인수점검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원안가결	
제6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공시설물 인수점검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원안가결	의장제의
제7항	세종특별자치시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산건위 (7건)
제8항	세종특별자치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원안가결	
제9항	생활폐기물종합처리시설 민간 재위탁 동의안	원안가결	
제10항	제6,7,8호 자동집하시설 운영 민간 재위탁 동의안	원안가결	
제11항	숲가꾸기사업 민간위탁(변경) 동의안	원안가결	
제12항	세종특별자치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제13항	세종특별자치시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제14항	2022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원안가결	예결위 (2건)
제15항	2022년도 제1차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변경안	원안가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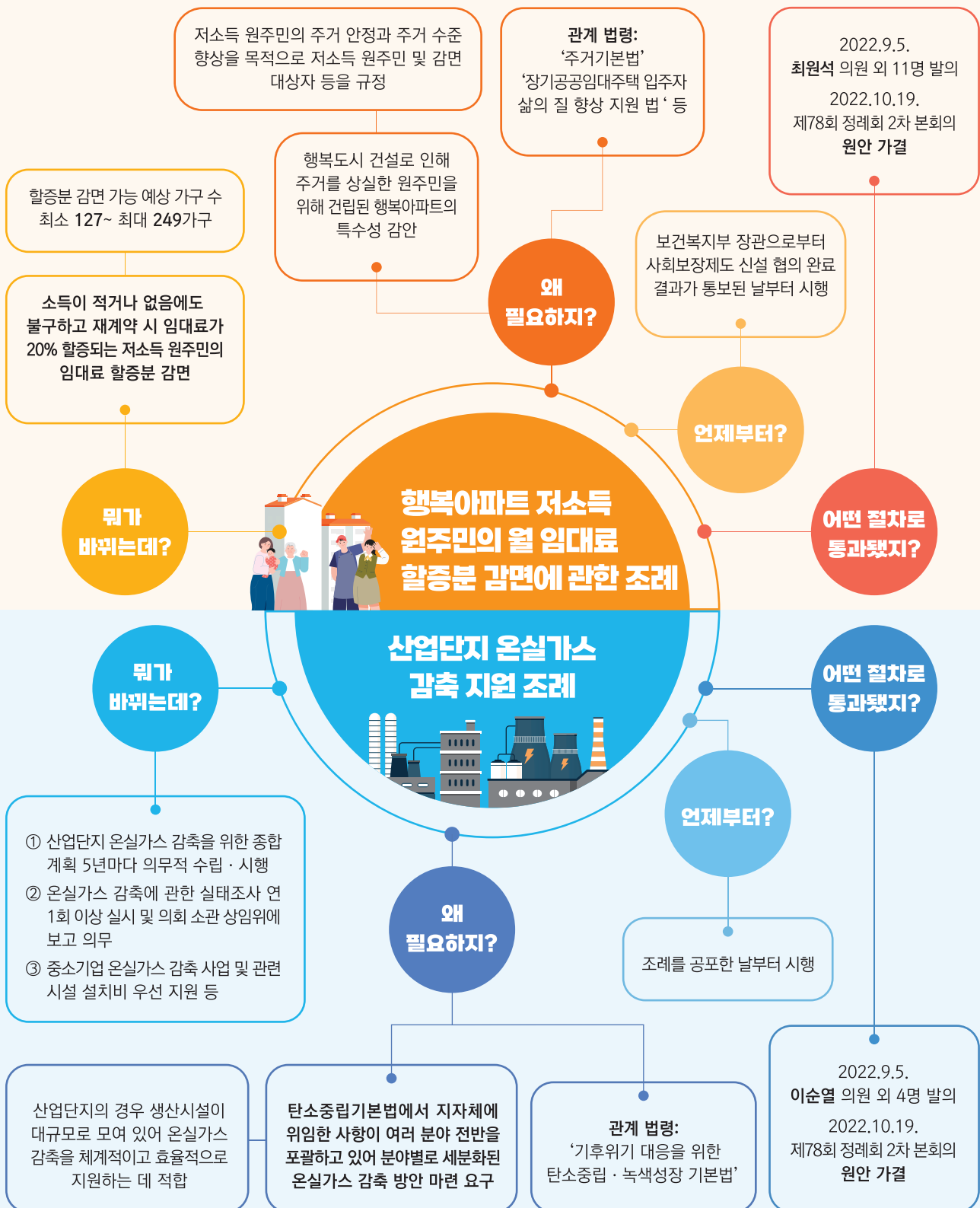
의사일정	안 건 명	처리결과	비고
제1항	긴급현안질문(김학서 의원)	원안가결	
제2항	제78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원안가결	09.15.~ 10.19. (35일간)
제3항	제78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원안가결	김학서 의원 김충식 의원
제4항	정치·행정 효율화를 위한 국회 전부 이전 촉구 결의안	원안가결	
제5항	KTX 세종역 설치 촉구 결의안	원안가결	
제6항	2022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변경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과 제안설명 의 건	원안가결	
제7항	휴회의 건(2022. 9. 16. ~ 10. 18, 33일간)	원안가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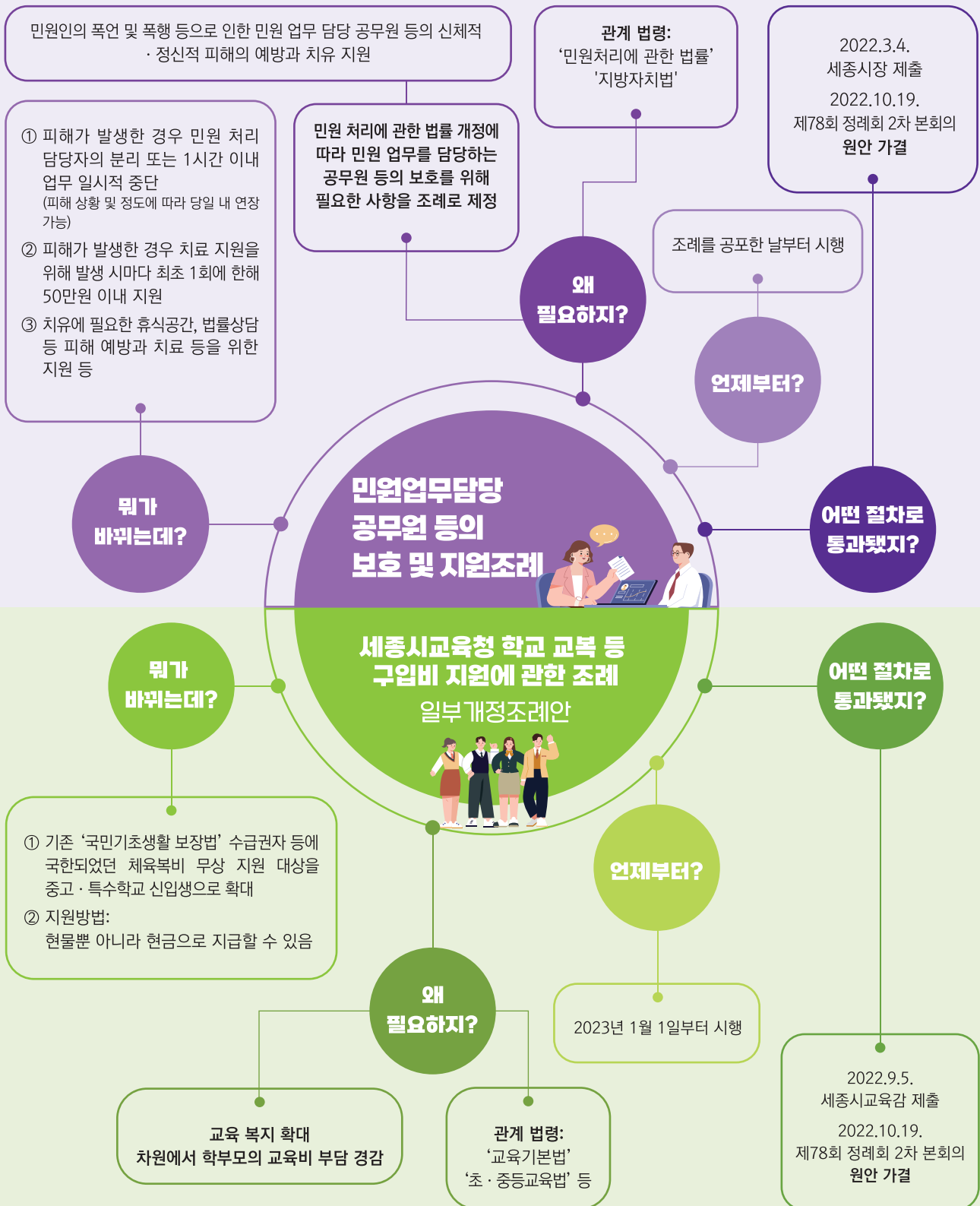
의사일정	안 건 명	처리결과	비고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운영위 행복위 (2건)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행복위 (35건)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제5항	2023년 대전세종연구원(세종연구실) 출연 동의안	원안가결	
제6항	2023년 세종특별자치시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 출연 동의안	원안가결	
제7항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 동의안	원안가결	
제8항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 동의안	원안가결	
제9항	2023년 세종특별자치시 청년 문화거리 조성 및 운영 사업 출연 동의안	원안가결	
제10항	2022년 지역기업-청년 희망이음 지원사업 출연 동의안	원안가결	
제11항	어려운 용어 정비를 위한 세종특별자치시 119시민수상구조대 설치·운영 조례 등 87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제12항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3차)	원안가결	

의사일정	안 건 명	처리결과	비고
제13항	세종특별자치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원안가결	행복위 (35건)
제14항	세종특별자치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제15항	종촌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원안가결	
제16항	세종특별자치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제17항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신규위탁) 동의안	원안가결	
제18항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신규) 동의안	원안가결	
제19항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청소년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원안가결	
제20항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활동진흥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원안가결	
제21항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원안가결	
제22항	세종특별자치시 반곡청소년자유공간 민간위탁(신규) 동의안	원안가결	
제23항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원안가결	
제24항	밀마루복지마을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원안가결	
제25항	종촌종합복지센터 노인주간보호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원안가결	
제26항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지원사업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원안가결	
제27항	종촌종합복지센터 장애인복지시설(주간보호, 보호작업장)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원안가결	
제28항	세종특별자치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제29항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구, 유니버시아드) 국제행사 개최협약 동의안	원안가결	
제30항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구, 유니버시아드) 개최권료 출연 동의안	원안가결	
제31항	세종특별자치시 청년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제32항	세종특별자치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제33항	세종특별자치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제34항	세종특별자치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제35항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	원안가결	
제36항	세종특별자치시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제37항	세종시 보통교부세 확충을 위한 「세종시법」 개정 촉구 결의안	원안가결	
제38항	지역협력 혁신성장사업 출연 동의안	원안가결	산건위 (16건)
제39항	세종특별자치시 신중년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제40항	세종특별자치시 세종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제41항	세종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청취	원안가결	
제42항	신흥사랑주택 실버복지관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원안가결	
제43항	숲가꾸기사업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원안가결	

의사일정	안 건 명	처리결과	비고
제44항	세종시 아름스포츠허브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원안가결	산건위 (16건)
제45항	한솔복합수영장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원안가결	
제46항	세종특별자치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	
제47항	세종특별자치시 건축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제48항	세종특별자치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제49항	세종특별자치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제50항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제51항	세종특별자치시 행복아파트 저소득 원주민의 월 임대료 할증분 감면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	
제52항	세종특별자치시 산업단지 온실가스 감축지원 조례안	원안가결	
제53항	세종특별자치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교안위 (7건)
제54항	대전세종연구원(도시안전연구센터) 출연 동의안	원안가결	
제55항	세종특별자치시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안	원안가결	
제56항	세종특별자치시 통합방위협의회 등의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제57항	세종특별자치시 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제58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제59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제60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 교복 등 구입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제61항	2022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원안가결	예결위 (7건)
제62항	2022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원안가결	
제63항	2021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원안가결	
제64항	2021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	원안가결	
제65항	2021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원안가결	
제66항	2021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원안가결	
제67항	2021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원안가결	
제68항	2021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기금결산 승인의 건	원안가결	
제69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교육안전위원회 소관)	원안가결	
제70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원안가결	
제71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원안가결	
제72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원안가결	









입법정보

- 78 생활법령
- 81 입법동향
- 88 법령해석사례
- 96 최근시행법령
- 98 타자치단체 최근 제개정 자치법규

수습사원 근무기간도 퇴직금 산정 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나요?



김사원씨는 1999년 12월 1일부터 메타회사에 수습사원으로 근무하기 시작하여 1개월의 수습기간 만료 이후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2000년 1월 1일 임시직 근로자로 채용되었습니다.

그 시기에 메타회사는 「보수규정」을 개정하면서 퇴직금을 1999년 12월 31일 이전 입사자에게는 기존 유리한 퇴직금 제도를, 2000년 1월 1일 이후 입사자는 상대적으로 불리하게 변경된 퇴직금 제도를 적용하였습니다. 2020년 김사원씨는 메타회사를 퇴사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2000년 1월 1일에 입사한 것을 전제로 퇴직금이 지급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메타회사에 자신의 입사일은 수습기간 시작일인 1999년 12월 1일이므로 변경 이전의 퇴직금 제도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반면 메타회사는 김사원씨의 입사를 임시직 시작일인 2000년 1월 1일로 보고 변경된 퇴직금 제도를 적용하여 지급하였다고 하는데요. 이 경우, 김사원씨의 수습사원 근무기간도 퇴직금 산정 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 것이 타당한가요?

김사원씨: 저는 1999년 12월 1일에 메타회사에 입사했습니다. 따라서 메타회사「보수규정」에 따라 1999년 12월 31일 이전 입사자에 해당하므로 기존 퇴직금산정방식에 따르면 받아야 할 미지급된 퇴직금을 주셔야 합니다.

메타회사: 김사원씨는 1개월의 실무수습을 통해 적격 여부를 평가한 후 인사위원회 심의를 통과하면 채용을 한다는 조건으로 모집된 수습사원이었습니다. 수습기간은 일종의 실무전형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근로기간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2000년 1월 1일 입사자에 적용되는 지급률에 따라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한 것이 맞습니다.

평결

정답은 김사원씨: 저는 1999년 12월 1일에 메타회사에 입사했습니다. 따라서 메타회사「보수규정」에 따라 1999년 12월 31일 이전 입사자에 해당하므로 기존 퇴직금산정방식에 따르면 받아야 할 미지급된 퇴직금을 주셔야 합니다.

위 사례는 퇴직금 지급기준인 계속근로기간의 계산 즉, 수습사원의 시용기간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지의 여부가 문제 되는 사안입니다.

이와 유사한 사례에서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2022. 2. 17. 선고 2021다218083 판결).

(1) “시용(試用)”이란 본 근로계약 체결 이전에 해당 근로자의 직업적 능력, 자질, 인품, 성실성 등 업무적격성을 관찰·판단하고 평가하기 위해 일정기간 시험적으로 고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근무기간 중에 직종 등 근로제공의 형태가 변경된 경우와 마찬가지로, 시용기간 만료 후 본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공백 기간 없이 계속 근무한 경우에도 시용기간과 본 근로계약기간을 통산한 기간을 퇴직금 산정의 기

초가 되는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야 합니다(대법원 1995. 7. 11. 선고 93다26168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5. 11. 27. 선고 2015두48136 판결,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18두43958 판결 참조).

- (2) 원고가 피고의 수습사원 채용시험에 합격하여 1999년 12월 1일부터 1개월간 피고의 원무과에서 수습사원으로 근무하면서 사무보조 등 업무를 수행하였고, 1999년 12월 30일 피고로부터 급여 명목으로 338,000원을 지급받았으며, 이후 피고의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2000년 1월 1일자로 피고의 임시직 근로자로 채용된 사실에 비추어, 원고가 피고의 수습사원으로 근무한 기간은 현실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시용기간에 해당하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 (3) 원고가 수습기간 만료 후에도 계속 피고의 근로자로서 근무한 이상 원고의 수습사원 근무기간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 사례에서 김사원씨의 수습사원으로서의 근무기간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안에 따라 수습사원의 시용기간이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지의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니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관계의 계속성 유지 여부를 확인하면 사전에 법적 분쟁을 방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생활
법령

출처: 법제처(생활법령)

상대방과 대화하는 내용을 음식점 주인 몰래 녹음하기 위해 카메라를 설치하러 들어가면, 주거침입죄인가요?



운송업체에 근무하는 부사장 나운송씨와 관리팀장 김배송씨! 어느 날, 자신들이 소속된 회사에 불리한 보도기사가 난 것을 알게 됩니다. 그들은 양심을 품고, 해당 기사를 보도한 기자에게 식사를 대접하겠다고 초대한 뒤, 향응을 제공하고 부적절한 요구 등을 하는 장면을 몰래카메라로 녹음·녹화하기 위해 음식점에 들어갑니다. 물론, 몰래카메라를 설치한다는 내용은 기자와 음식점 주인에게 비밀로 하고서요.

나중에 나운송씨와 김배송씨는 음식점에 대한 주거침입의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는데요. 과연, 나운송씨와 김배송씨는 주거침입죄에 해당할까요?

미정: 당연히 주거침입죄에 해당하지. 음식점 주인이 나운송씨와 김배송씨의 몰래카메라 설치의도를 알았다면 과연 식당이유를 허락했을까? 승낙하지 않았을 거야. 영업주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해 들어갔다면 주거침입죄에 해당한다고.

자경: 말도 안돼! 이건 주거침입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침입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영업주의 의사도 중요하지만,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였는지가 더 중요하다고! 몰래 카메라를 설치하기 위해 들어갔다 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는 ‘침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평결

정답은 자경: 말도 안돼! 이건 주거침입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침입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영업주의 의사도 중요하지만,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였는지가 더 중요하다고! 몰래카메라를 설치하기 위해 들어갔다 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는 ‘침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입니다.

위 사례는 주거침입죄에서 ‘침입’의 의미 즉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음식점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하기 위해 영업주의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 방법으로 들어간 행위가 주거침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위와 유사한 사례에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주거침입죄에서 침입에 해당하는지는 출입 당시 객관적·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 태양(態樣)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고, 이에 해당하는지는 출입하려는 주거 등의 형태와 용도·성질, 외부인에 대한 출입의 통제·관리 방식과 상태, 행위자의 출입 경위와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 태양인지를 평가할 때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는지 여부 또한 고려할 요소 중 하나이지만 주된 평가 요소가 될 수는 없으므로, 침입행위에 해당하는지는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 태양인지를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한다고 본 것입니다.

즉 행위자가 범죄 등을 목적으로 음식점에 출입하였거나 영업주가 행위자의 실제 출입 목적을 알았더라면 출입을 승낙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정이 인정되더라도,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음식점에 영업주의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방법으로 들어갔다면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주거침입죄에서 규정하는 침입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결은 영업주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하는 목적을 가지고 출입한 경우라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고 인정한 기존 판례를 변경하고,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의 관점에서 침입의 의미와 판단기준을 객관화하여 사실상의 평온상태가 침해되었는지에 따라 주거침입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례에서도 2. 자경의 의견처럼 나운송씨와 김배송씨는 주거침입죄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임대하지 않은 토지를 침범하여 증축한 건축물의 경우 임차인은 지상물매수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재영은 승준에게 토지의 일부를 임대하면서 지상에 조립식 건물을 건축하여 음식점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몇 년 후 승준은 해당 음식점의 건물을 확장하기로 마음을 먹고 임대계약을 맺은 토지를 벗어나 재영의 토지 중 지목이 '전'으로 되어 있는 토지까지 침범하여 증축하였습니다.

이후 임대기간이 만료되어 승준은 재영에게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하려고 하는데요, 과연 누구의 말이 맞을까요?

승준: 제가 비록 원래 계약한 토지를 벗어나 증축은 했으나, 침범한 토지 역시 재영씨의 토지로 건물과 부지를 자유롭게 사용하거나 처분할 수 있어요. 재영씨가 재산권을 행사하는데 전혀 문제되지 않으니 저도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거예요.

재영: 아니 승준씨, 임대하지 않은 지목이 '전'인 토지까지 무단으로 침범해서 증축하면 어떡해요! 더군다나 지목이 '전'이면 건물을 지을 수 없는데 당신이 증축한 건물 절반 이상이 불법건축물이에요. 지금 건물을 철거하고 이행강제금까지 내야 되는 상황인데 지상물매수청구권이라뇨? 전 불법건축물을 살 생각이 없어요!

평결

정답은 재영: 아니 승준씨, 임대하지 않은 지목이 '전'인 토지까지 무단으로 침범해서 증축하면 어떡해요! 더군다나 지목이 '전'이면 건물을 지을 수 없는데 당신이 증축한 건물 절반 이상이 불법건축물이에요. 지금 건물을 철거하고 이행강제금까지 내야 되는 상황인데 지상물매수청구권이라뇨? 전 불법건축물을 살 생각이 없어요! 입니다.

본 건 사안은, 임대한 토지 외에 임대하지 않은 토지까지 무단으로 침범하여 증축하고 나아가 해당 건축물이 불법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 임대계약 종료 후 임차인은 임대인을 상대로 지상물매수청구를 할 수 있을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이와 유사한 사례에서 원심은 임대 토지의 경계를 벗어나 걸쳐 있는 토지 부분이 모두 임대인의 소유에 속하므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해 매수청구가 허용되더라도 임대인으로서 그에 관한 철거나 손해배상의 의무를 부담할 염려가 없고 이 사건 건물과 부지를 자유롭게 사용·처분할 수 있어 임대인의 재산권 행사에 지나친 제약이 되기 어렵다고 보아 임차인의 건물 매수청구가 허용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수원지방법원 2021. 7. 9. 선고 2019나73062 판결).

그러나 대법원에서는 다음과 같이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였습니다(대법원 2021. 12. 10. 선고 2021다260671).

대법원은 “임차인이 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이 사건 건물은 절반 이상이 임대차계약의 목적 토지가 아닌 토지를 무단으로 침범하여 건립되었다. 이는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토지상에 건립한 건물을 불법으로 증축하였기 때문이다. 만약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매수청구가 허용된다면 임대인으로서 이 사건 건물에 따른 토지 외에 임대하지 않았던 3필지의 토지에 대해서도 소유권 행사에 상당한 제한을 받게 된다. 나아가 매수에 따른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칠 수 있는지 여부도 불확실하며, 특히 이 사건 건물의 절반에 가까운 부분이 지목이 '전'인 필지 위에 걸쳐 있어 사실상 건물 전체에 대한 철거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이 사건 건물 중 공부상 등재된 사항을 제외한 나머지 불법으로 증·개축된 부분에 대해서는 임대인이 철거 등 원상회복 의무를 부담하게 되고, 이행강제금 부과의 위험 역시 이전되는 결과가 된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결국 임대인은 이 사건 건물과 부지를 자유롭게 사용·처분할 수 없고, 이는 임대인의 재산권 행사에 지나친 제약이 된다고 보기에 충분하므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매수청구는 허용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함으로써 임대인의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는 지상물매수청구권과 같은 예외적 강행규정은 그 해석을 엄격하게 해야 된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사례에서도 임대한 토지 외에 임대하지 않은 토지까지 무단으로 침범하여 증축하고 나아가 해당 건축물이 불법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 임대계약 종료 후 승준은 재영을 상대로 지상물매수청구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주요입법동향

최근 공포법령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22. 9. 23 공포
'22. 9. 23 시행
대통령령 제32918호

1세대 1주택자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자가 된 경우 또는 1주택 외에 상속받은 주택이나 지방 저가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도록 하고, 일정 요건을 갖춘 1세대 1주택자에 대하여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납부유예를 허가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종합부동산세법」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1세대 1주택자가 취득한 신규 주택으로서 취득한 날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주택, 상속개시일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상속주택 또는 상속인의 지분율이 100분의 40 이하이거나 지분율에 상당하는 공시가격이 6억원(수도권 밖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3억원) 이하인 상속주택 및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인 지방 저가주택은 1세대 1주택자 여부를 판단하거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세율을 적용할 때 주택 수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부유예의 신청 및 허가 절차와 허가 취소 시 납세의무자에게 징수해야 하는 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의 계산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도로교통법 시행령

'22. 10. 25 공포
'22. 10. 25 시행
대통령령 제32960호

고속도로에서 다른 차를 앞지르는 경우 방향지시기·등화 등을 사용하지 않는 등 통행방법을 준수하지 아니한 사실이 영상기록매체에 의하여 입증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도로교통법」이 개정됨에 따라, 고속도로에서 앞지르기 통행방법을 준수하지 아니한 승용자동차의 고용주 등에게 부과하는 과태료를 7만원으로 정하는 등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주·정차된 차량을 손괴한 후 인적사항 제공 의무를 위반한 자전거 등의 운전자에게 부과하는 범칙금을 6만원으로, 차로를 따라 통행하지 아니한 승용자동차 등의 운전자에게 부과하는 범칙금을 3만원으로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방송법 시행령

'22. 10. 25 공포
'22. 10. 25 시행
대통령령 제29609호

신문의 전체 발행부수, 유가 판매부수에 관한 조사를 담당하던 특정기관의 자료를 더 이상 활용하지 않기로 한 정책적 고려사항을 반영하여 일간신문을 경영하는 법인이 지상파방송사업자 등의 주식 등을 소유하려는 경우 종전에는 해당 특정기관의 인증을 받은 신문사의 전체 발행부수 등의 자료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해당 특정기관의 인증 여부와 관계없이 제출하도록 하고, 일간신문을 경영하는 법인의 지상파방송사업 등에 대한 소유제한의 기준이 되는 일간신문 구독률을 종전에는 장래가구추계통계에 따른 총 가구 수와 연평균 유료구독 가구 수를 활용하여 산정하던 것을 앞으로는 방송통신위원회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가 제공하는 총 가구 수와 유료구독 가구 수를 활용하여 산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유료도로법 시행령

'22. 10. 25 공포
'22. 10. 25 시행
대통령령 제32962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자와 건설기계대여업자를 지원하고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을 확대하기 위하여 2022년 12월 31일에 만료되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용 화물자동차와 건설기계대여업용 건설기계에 대한 고속국도 심야시간대 통행료 감면 및 전기자동차·수소전기자동차에 대한 고속국도 통행료 감면의 일몰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려는 것임.

주요입법동향

최근 국회 본회의 통과 주요법안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

환경노동위원장

최근 미관 중심의 투명방음벽, 건축물 투명창 등이 증가함에 따라 인공구조물로 인한 조류의 충돌 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인공구조물로 인한 야생동물의 충돌·추락 등 피해를 방지함으로써 야생동물이 공존하는 환경을 확보하는 데 기여하고, 유해야생동물 포획 과정에서 고의 또는 과실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피해를 준 경우를 수렵면허의 취소·정지 사유로 규정하여 국민의 생명 및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함.

또한,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불법 인공증식과 관련하여 처벌 수위를 강화함으로써 국제적 멸종위기종에 대한 보호·관리를 강화하고, 민간단체 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등 야생생물을 보호·관리하는 기관도 이 법에 따른 보조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고자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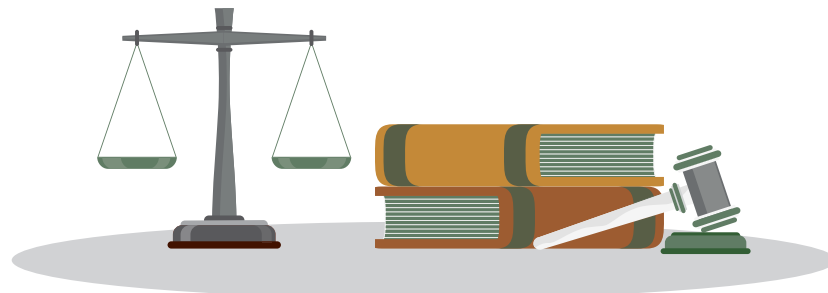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

환경노동위원장

현행법상 공공하수도의 관리주체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인데, 집중호우에 따른 침수피해, 하수처리시설의 고도화, 방류수 수질기준 강화 등 최근 커지고 있는 하수처리시설의 운영·관리상 어려움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공공하수도 기술진단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현행 시행령은 기술진단전문기관이 공공하수도에 대한 공사 또는 관리 업무를 위탁받은 경우에는 위탁기간 동안 해당 공공하수도에 대한 기술진단을 대행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데, 공공하수도 계획, 설계, 시공, 감리를 수행한 자와 운영관리 중인 한국환경공단 또는 기술진단전문기관이 그 대상에 포함되는지 분명하지 않아 논란이 있음.

이에 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공공하수도 관리주체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지원체계 마련 및 재난상황 대응을 위하여 유역하수도지원센터를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공공하수도 기술진단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기술진단 대행의 금지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

환경노동위원장

잔류성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위반사업장에 대한 관리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어, 사업장에 대한 개선명령 미이행 시 환경부장관이 사용중지명령을 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사용중지명령에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 횟수를 제한하는 등 상습적으로 배출기준을 초과하는 시설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또한, 잔류성오염물질에 대한 측정대행과 주변지역 영향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측정분석 전문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규정하여, 전문기관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도 필요함.

마지막으로, 스톡홀름협약과 미나마타협약에서 정하는 잔류성오염물질의 종류와 협약의 특정면제에 관한 국내 적용사항을 고시로 제정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신고제도를 정비하는 등 기타 현행 법의 미비점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장

수소경제가 지향하는 방향은 수소의 생산단계에서 더 이상 대기오염물질이나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탄소중립에 기여하는 것이고, 이를 위해서는 청정수소 중심의 생산·유통·활용 전주기에 걸친 생태계 구축 마련이 필요함.

이에 청정수소에 대한 등급별 인증제를 도입하고, 수소연료공급시설의 운영자 등에게 수소판매·사용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청정수소로 판매·사용하도록 하며, 전기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수소발전 입찰시장을 통해 수소발전량을 구매·공급하도록 함으로써 청정수소의 사용을 촉진하고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하려는 것임.

또한, 수소가스터빈의 법적근거를 명시하고, 수소가스터빈 등 수소발전에 대해 별도의 천연가스 요금체계를 적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수소경제로의 이행 촉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산림문화·
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

농림축산식품
해양수산위원장

임업인들이 임업경영 뿐만 아니라 산림휴양·체험·관광·숙박 등 산림문화·휴양과 관련된 서비스를 산촌에서 함께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임업인들에게 추가적인 소득창출 기반을 마련하고 국민들의 산림자원 이용에 대한 수요를 충족하도록 하며, 장애인 등 보행약자가 숲길을 안전하고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설의 설치 근거를 법률에 규정하고자 함.

주요입법동향

최근 국회 접수 주요법안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하태경의원 등 11인

태풍 힌남로에 따른 포항 아파트 지하주차장 침수와 수도권 폭우 당시 반지하주택의 침수로 안타까운 인명사고가 발생하였고, 차수판 및 차수문 등 물막이설비가 설치되었다면 인명사고를 예방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지적이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공공건축물에 한정하여 침수대비시설인 차수판, 역류방지밸브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민간 건축물은 별도의 규정이 없어 침수대비시설의 설치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음.

또한 침수대비시설을 설치할 경우 각 여건을 고려해 설치비용을 지원하여 침수 피해를 예방할 필요가 있음. 이에 공공 건축물 뿐만 아니라 민간 건축물까지 침수대비시설의 설치를 의무화함으로써 폭우 등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49조제6항 및 제7항 신설).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신동근의원 등 14인

현행법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사업주가 건강진단(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사업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서는 일반건강진단의 의무검사항목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 항목에 구강검진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 이에 국민의 국가 구강검진 수검률은 매년 30% 내외이며, 2020년 기준 외래 다빈도 상병급여 질환 1위는 ‘치은염 및 치주질환’으로 나타나는 등 외래 다빈도 상병급여 질환 중 구강질환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음.

구강질환의 증가로 지속적 구강질환으로 인한 국민의 의료비 부담이 늘어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구강질환을 방지하기 위하여 구강검진을 일반건강진단의 검사항목으로 포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이에 일반건강진단 검사항목을 결정할 경우 구강검진 항목이 포함되도록 하여 국민의 구강질환을 예방하고 근로자의 건강관리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129조제3항 등).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범수의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에 대해 중대한 과실 없이 상속 고려기간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하거나 단순승인이 의제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는 ‘특별한정승인’을 규정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경우에 특별한정승인의 요건인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의 인식여부에 대하여 법정대리인의 인식여부를 기준으로 적용하였고, 이에 따라 미성년상속인이 성년에 이른 후 본인 스스로의 인식을 기준으로 새롭게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는 없다고 판시하여 왔음.

그러나 이와 같은 해석은 미성년상속인의 입장에서 본다면 법정대리인의 착오 또는 법률적 무지 등으로 인하여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통해 초과상속채무를 부담하지 않을 수 있는 기회를 보장받지 못한 상태에서 상속채무를 전부 부담하는 것이 되어 지나치게 가혹한 측면이 있음.

특히 특별한정승인제도의 입법취지가 상속인의 자기결정권과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미성년상속인이 스스로 법률행위를 온전히 할 수 있을 때 별도로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현행법에 미성년상속인이 성년이 되었을 때 일정한 기간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별도로 마련함으로써 과도한 상속채무로부터 미성년상속인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 1020조제2항 신설 등).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장혜영의원 등 10인

현행 「스토킹처벌법」은 피해자 보호명령 및 신변안전조치에 대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체계적인 지원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또한 온라인 공간에서 다양하게 발생하는 스톱킹에 대해 스톱킹 상대방에게 도달한 경우에만 성립되는 등 갈수록 교묘해지는 온라인 공간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범죄 신고부터 피해자 보호 지원 및 사법 공조에 이르기까지 국가의 책임이 명문화되어 있지 않아 한계가 지적되어 왔습니다.

이에 스톱킹의 유형을 구체화하고 실태조사 및 교육 실시 등 국가 책임을 명확히 하며 신변안전조치, 피해자 보호명령 등을 통해 피해자 보호와 스톱킹 범죄 근절의 기본 토대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경협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재외국민이 영사조력 과정에서 자신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되, 무자력(無資力) 등으로 비용을 부담하기 어려운 재외국민을 긴급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국가가 그 비용을 부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재외국민이 급박한 해외위난상황에서 생명의 위협을 받는 경우 해당 상황 발생에 대한 귀책 등을 고려하지 않고 무자력과 대피 이동 수단이 없는 경우에만 국가가 비용을 부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국내에서 국민을 보호하는 국가의 책임에 비하여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생명이 위급한 상황에 처한 재외국민이 자력으로 벗어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해당 상황 발생에 대한 귀책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국가가 영사조력에 대한 경비를 부담할 수 있도록 하여 재외국민 보호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1항제3호 신설).

주요입법동향

최근 입법 예고(주요법령)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의견제출 '22.11.23.까지

대지급금 제도를 개편하여 사업주의 임금지급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체불 사업주가 용자 제도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주 용자제도를 확대하여 체불근로자의 생계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며, 기타 부담금 징수 및 기금설치 목적 문구의 수정을 하기 위함임.

아울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 개정에 따른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도입 사업주에 대해 부담금 경감 대상에 추가하려는 것임.

우주개발진흥법 시행령 입법예고

의견제출 '22.11.17.까지

우주산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기업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우주개발진흥법」이 개정(법률 제18867호, 2022.6.10.일부개정, 2022.12.11.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기반시설의 개방·확대 절차, 지체상금 한도규정, 우주신기술 지정절차, 우주산업클러스터 등을 규정해 민간부문의 우주개발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의견제출 '22.11.29.까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신규로 구매 또는 임차해야 하는 제1종 저공해자동차의 의무비율을 상향하여 대기환경개선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 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 대상 시설 중 도서지역에 입지하는 경우 기상 악화 시 자가 측정의 예외를 인정하는 한편, 배출가스저감 전문정비사업자 교육기한을 현행 4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는 등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의견제출 '22.11.29.까지

당직근무자의 휴식권 보장을 위해 당직근무 종료시각이 속하는 날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도 당직휴무를 부여하고, 출장 관리방식의 통일을 위해 근무지 내·외 출장 모두 근무상황부에 기록하고 출장신청서로 승인받도록 하고, 체계적인 비상근무를 위해 중앙행정기관장이 비상근무 4호를 발령하는 경우 발령권자가 근무상 필요한 사항을 정하도록 하는 한편, 일부 어려운 용어 및 일본식 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의견제출 '22.10.31.까지

각급 국립학교의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하여 행정직군 정원 2명(7급 1명, 9급 1명)을 기술직군으로 전환하고, 기술직군 정원 11명(6급 3명, 7급 3명, 8급 1명, 9급 4명)을 행정직군으로 전환하며, 관리운영직군 정원 15명(6급 1명, 7급 4명, 8급 1명, 9급 9명)을 행정·기술직군으로 전환하고, 기술직군 정원 7명(6급 1명, 8급 1명, 9급 5명)의 직렬을 조정하며,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직급을 상향 조정하였던 국립의 각급 학교의 정원 5명(5급 1명, 6급 3명, 7급 1명)을 종전의 직급(7급 4명, 9급 1명)으로 환원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령(안) 입법예고**

의견제출 '22.12. 2.까지

최근 수상레저활동 인구의 증가 및 수상레저 기반의 확대 등 수상레저 환경이 급변하고 있으나, 현행 법령은 수상레저의 안전관리 기준, 보험 관리 등의 규정이 미비하여 변화되는 수상레저 환경에 탄력적인 대응이 곤란하였음.

또한, 현행법은 1999년 제정된 이후 여러 차례 개정을 통하여 조문이 복잡해지고, 법률 체계의 일관성이 부족하여 국민이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이에 기술적이고 전문적인 동력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사항을 현행 「수상레저안전법」에서 분리하여 지자체장의 등록사무에 대한 해양경찰청장의 지도·감독 근거 마련,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안전검사필증 부착 의무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8957호, 2022. 6. 10. 공포, 2023. 6. 11. 시행)됨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의견제출 '22.11.14.까지

2021. 10. 21.부터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처벌법’이라고 함)」이 제정되어 시행 중이나 스톱킹 피해자가 신변보호 또는 재판 도중 가해자에 의해 살해되는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함. 살인 등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스톱킹범죄의 특성상 합의 과정에서 추가 피해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삭제하고 온라인스토킹에 대한 처벌을 확대하며 잠정조치로 스톱킹행위자에 대한 위치추적을 도입하여 재발을 방지하고자 함.

또한 피해자등에 대한 신변안전조치, 신원 등 누설 금지 및 피해자 국선변호사, 피해자보호명령 제도 등을 도입하고 현장 대응력 강화를 위하여 잠정조치 위반 시 법정형을 상향하며 긴급응급조치 위반 시 형사처벌을 신설하는 등 스톱킹행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재발을 방지하는 한편 피해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입법예고**

의견제출 '22.11.14.까지

스토킹범죄 피해자를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스톱킹행위자에 대한 잠정조치에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추가하는 내용 등의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맞추어 스톱킹행위자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 집행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의견제출 '22.12.5.까지

공동주택의 하자는 다른 용도의 건축물에 비해 구체적이고 세부적이며, 민감도도 높기 때문에 공동주택 하자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감리원을 현장에 배치하여 반복적이고 다발적인 하자가 발생하는 공정마다 시공 상태, 자재 품질 등을 철저히 확인하도록 하고자 적격심사 시 평가감리원에 대해 기본자격요건을 확인하고 있으나, 기본자격요건에 대한 법적 위임근거가 없어 법적 분쟁 소지가 있음.

법령해석사례

(법제처-22-0109 / 회신일자 2022. 9. 14.)

질의

건축허가·건축신고 관련 업무대행건축사 지정 시 업무대행건축사 명부에 포함된 자 중에서만 지정할 수 있는지 여부(「건축법 시행령」 제20조제3항 등 관련)

질의
요지

허가권자¹⁾가 「건축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허가 및 건축신고”와 관련되는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이하 “건축허가 현장조사 등”이라 함)를 건축사에게 대행하게 하려는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20조제2항 전단에 따른 업무대행건축사 명부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자를 업무대행건축사로 지정할 수 있는지?

회답

이 사안의 경우, 허가권자는 「건축법 시행령」 제20조제2항 전단에 따른 업무대행건축사 명부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자를 건축허가 현장조사 등을 대행할 건축사로 지정할 수 없습니다.

이유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²⁾ 「건축법」 제27조제1항에서는 허가권자는 “이 법에 따른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사법」 제23조에 따라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한 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건축법 시행령」 제20조제1항 전단에서는 대행 가능한 업무를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허가, 건축신고,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과 관련되는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 전단에서는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건축사”를 “업무대행건축사”로 약칭하면서, 시·도지사³⁾가 업무대행건축사의 명부를 작성·관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허가권자는 제2항에 따른 명부에서 업무대행건축사를 지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허가권자가 건축물의 건축허가·건축신고와 관련되는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는 자는 같은 항에 따른 명부에서 지정해야 하는 “업무대행건축사”여야 한다는 점이 문언상 분명합니다.

1)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같음(「건축법」 제4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2)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

3)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하며, 이하 같음(「건축법 시행령」 제5조의5제1항제8호 전단)

회답

질의

또한 「건축법 시행령」 제20조제1항과 같은 조 제2항은 각각 「건축법」 제27조제1항의 집행을 위한 것으로,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의 전단에서는 허가권자가 건축사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에 건축허가 현장조사 등을 포함하고 있고, 같은 항 후단은 사용(임시사용)승인의 경우 추가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는 선정기준일 뿐이어서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업무대행건축사 명부의 작성·관리 대상이 되는 건축사의 범위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허가권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명부에서 업무대행건축사를 지정해야 하므로, 결국 허가권자는 건축허가 현장조사 등을 대행하게 하려는 경우 명부에 포함된 건축사 중에서 업무대행건축사를 지정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 건축법령의 규정 체계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나아가 구 「건축법 시행령」⁴⁾ 제20조에서는 허가권자가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허가, 건축신고,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과 관련되는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건축사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고 하면서(제1항 전단), 그에 따른 업무대행자의 업무범위와 업무대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축조례로 정한다(제2항)고만 규정하고 있었는데, 건축물 현장조사·검사 업무 대행제도의 체계적 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⁵⁾ 이를 현행 규정과 같이 개정하여, 시·도지사로 하여금 업무대행건축사의 명부를 작성·관리하도록 하고 허가권자는 그 명부에서 업무대행건축사를 지정하도록 한 것이라는 점에 비추어 보면, 허가권자는 건축허가 현장조사 등의 경우에 업무대행건축사 명부에서 업무대행건축사를 지정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 개정 취지에 부합합니다.

따라서 허가권자는 「건축법 시행령」 제20조제2항 전단에 따른 업무대행건축사 명부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자를 건축허가 현장조사 등을 대행할 건축사로 지정할 수 없습니다.

.....

(법제처-22-0152 / 회신일자 2022. 9. 14.)

질의

주거지역에서 임대주택과 임대주택이 아닌 시설을 같은 건축물로 건설하는 경우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는지 여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5조 등 관련)

질의 요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78조의 위임에 따라 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 기준을 정하고 있는 같은 법 시행령 제85조제1항에서는 같은 법 제7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용적률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관할 구역의 면적, 인구규모 및 용도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비율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같은 법 시행령 제85조제3항제1호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거지역⁶⁾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용적률의 12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주거지역에서 임대주택을 임대주택이 아닌 시설과 같은 건축물로 건설하려는 경우⁷⁾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85조제3항제1호에 따라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는지?

4) 2021. 1. 8. 대통령령 제31382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함

5) 2021. 1. 8. 대통령령 제31382호로 일부개정된 「건축법 시행령」 조문별 제·개정이유서 참조

6)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85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지역을 말하며, 이하 같음)에서 임대주택(「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으로서 각각 임대무기기간이 8년 이상인 경우에 한정하며, 이하 같음)

7)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85조제3항제1호에 따라 증가되는 용적률에 해당하는 규모의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를 전제함

회답

이유

이 사안의 경우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85조제3항제1호에 따라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85조제1항에서는 같은 법 제7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용적률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관할 구역의 면적, 인구규모 및 용도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비율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85조제1항 각 호에서는 제1종전용주거지역의 경우 5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이하(제1호) 등으로 용도지역에 따른 용적률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한편, 같은 조 제3항제1호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거지역에서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용적률의 12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바,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85조제3항제1호에 따른 완화된 용적률의 적용 여부를 판단할 때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를 건설하는 건축물 전체가 임대주택인 경우만으로 한정할 것인지, 아니면 건축물에 같은 호에 따라 증가되는 용적률에 해당하는 규모의 임대주택을 임대주택이 아닌 시설과 함께 건축하는 경우까지로 볼 것인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85조제3항제1호에서는 같은 호에 따른 임대주택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민간임대주택법”이라 함)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으로서 각각 임대무기기간이 8년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민간임대주택법 제2조제1호에서는 “민간임대주택”이란 임대 목적으로 제공하는 주택으로서 임대사업자가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제7호에서는 “임대사업자”란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가 아닌 자로서 1호(戶) 이상의 민간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사업을 할 목적으로 민간임대주택법 제5조에 따라 등록한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여,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은 전체 건축물이 아닌 1호(戶) 이상의 주택을 의미함이 문언상 분명하고,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에서는 “공공임대주택”을 임대 또는 임대한 후 분양전환을 할 목적으로 공급하는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주택법」 제2조제1호에서는 “주택”이란 세대(世帯)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여,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도 건축물의 전부로 건축된 경우로 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85조제3항제1호에 따른 임대주택의 의미는 건축물 전체가 임대주택인 경우로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1호(戶) 이상 또는 건축물의 일부가 임대주택인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같은 호에서는 해당 지역의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는 요건으로 주거지역에서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를 규정하면서 이 경우에 완화할 수 있는 용적률의 최대 범위를 정하여 규정하고 있을 뿐, 건설하는 건축물 전체가 임대주택이어야 한다는 별도의 요건을 두고 있지도 않으므로, 주거지역에서 임대주택을 임대주택이 아닌 시설과 같은 건축물로 건설하는 경우에도 같은 호에 따라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85조제3항제1호의 입법연혁을 살펴보면, 2018년 7월 17일 대통령령 제2905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국토계획법 시행령(이하 “구 국토계획법 시행령”이라 함)에서는 “도시·군계획조례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용적률의 2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임대주택의 추가건설을 허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따라 증가되는 용적률에 해당하는 규모의 임대주택을 임대주택이 아닌 시설에 추가하여 건설할 수 있도록 하되, 이 경우 완화할 수 있는 용적률의 범위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용적률의 20퍼센트 이하로 제한하도록 하던 것을, 2018년 7월 17일 대통령령 제29051호로 일부개정된 국토계획법 시행령에서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라는 문구를 활용하여 법령의 문언을 변경하였으나, 이는 같은 항에 제3호 및 제4호를 신설하면서 각 호의 규정방식을 일치시키기 위해 표현을 수정한 것에 불과할 뿐, 같은 항 제1호에 따라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는 경우를 임대주택을 건축물 전체로 건설하는 경우로만 한정하려는 취지로는 보이지 않으므로⁸⁾, 구 국토계획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바와 동일하게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85조제3항제1호에 따른 “임대주택”은 건축물 전체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1호 이상 또는 건축물의 일부가 임대주택인 경우도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또한 2014년 1월 14일 대통령령 제25090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85조제3항에서는 도시·군계획조례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용적률의 2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임대주택의 추가건설을 허용(본문)할 수 있도록 하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 제30조의⁹⁾에 따라 임대주택 건설이 의무화되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는 제외(단서)하도록 규정하여, 임대주택을 임대주택이 아닌 시설과 같은 건축물로 건설하는 경우에도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음을 전제로 그 임대주택 건설이 의무화되는 경우는 용적률 완화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었는데, 비록 2014년 1월 14일 대통령령 제25090호로 일부개정된 국토계획법 시행령에서 제85조제3항 단서를 삭제하였으나, 이는 주택재건축사업에 대한 임대주택 건설의무가 폐지된 사항¹⁰⁾을 반영한 것¹¹⁾일 뿐이므로, 임대주택을 임대주택이 아닌 시설과 같은 건축물로 건설하는 경우에도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다는 전제는 현행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85조제3항제1호의 해석에 있어서도 유지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아울러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85조제3항제1호는 임대주택의 공급 확대를 통해 서민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택가격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취지의 규정¹²⁾인바, 주거지역에서 임대주택의 건설에 따라 증가되는 용적률에 해당하는 규모의 임대주택을 임대주택이 아닌 시설과 같은 건축물로 건설하는 경우에도 같은 호에 따라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도록 용적률 완화 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해당 규정의 입법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이라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85조제3항제1호에 따라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8) 2018. 7. 17. 대통령령 제29051호로 일부개정된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이유 참조

9) 2005. 3. 18. 법률 제7392호로 일부개정되어 2009. 4. 22. 법률 제9632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도시정비법 제30조의2 참조

10) 2009. 4. 22. 법률 제9632호로 일부개정된 도시정비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참조

11) 2014. 1. 14. 대통령령 제25090호로 일부개정된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방침(국토교통부) 참조

12) 2005. 9. 8. 대통령령 제19036호로 일부개정된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이유·주요내용 및 법제처 2021. 4. 21. 회신 20-0715 해석례 참조

(법제처-22-0352 / 회신일자 2022. 10. 7.)

질의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라목에 따른 제약기업의 경우 그 상호 중에 제약등유사명칭을 사용할 수 없는지(「약사법」 제87조의2 등 관련)

질의
요지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제약산업법”이라 함) 제2조제2호에서는 “제약기업”이란 국내에서 제약산업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하는 같은 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호 라목에서는 신약 연구개발 등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조직, 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을 규정하고 있는 한편, 「약사법」 제87조의2에서는 같은 법에 따른 의약품·의약품외품의 제조업자, 위탁제조판매업 신고를 한 자, 품목허가를 받은 자, 수입자 또는 판매업자(이하 “의약품제조업자등”이라 함)가 아닌 자는 그 상호 중에 제약, 약품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유사한 명칭(이하 “제약등유사명칭”이라 함)을 사용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제약산업법 제2조제2호라목에 따른 제약기업(이하 “신약연구제약기업”이라 함)으로서 의약품제조업자등이 아닌 자는 「약사법」 제87조의2에 따라 그 상호 중에 제약등유사명칭을 사용할 수 없는지?

회답

신약연구제약기업으로서 의약품제조업자등이 아닌 자는 「약사법」 제87조의2에 따라 그 상호 중에 제약등유사명칭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유

제약산업법은 제약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지원과 혁신성 증진 및 국제협력 강화를 통하여 제약산업의 발전기반을 마련하고 외국 제약기업의 국내투자유치환경을 조성하여 제약산업이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추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증진과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제1조)으로 하는 법률인 반면, 「약사법」은 약사(藥事)에 관한 일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제1조)으로 하는 법률로서, 두 법률은 그 입법목적이 다르고, 「약사법」에서 유사명칭 사용 금지 규정을 두면서 별도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지 않으며, 제약산업법에서도 신약연구제약기업에 대해 「약사법」상의 유사명칭 사용 금지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약산업법 제2조제2호에서는 제약기업의 범위에 관하여 「약사법」에 따른 일정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기업(가목 및 나목)과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2에 따른 벤처기업 중 신약 연구개발을 전문으로 하는 기업(다목) 및 신약 연구개발 등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조직, 인력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라목)으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제약산업법의 입법목적이 제약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기 위함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육성·지원의 대상이 되는 제약기업의 범위를 같은 법 내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이라고 할 것인바, 제약산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제약기업의 범위에 포함된다는 이유만으로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제조업자등에 해당하는지와 무관하게 명문의 근거 없이 「약사법」에 따라 상호에 제약등유사명칭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일반적으로 허용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약사법」에서는 의약품의 제조(제31조)·수입(제42조)·판매(제45조)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도록 하고, 취급하는 품목별로도 품목허가 등을 받도록 규정하여 약사와 관련해서는 엄격한 관리체계를 갖추고 있는데, 같은 법 제87조의2에서 의약품제조업자등이 아니면 그 상호 중에 제약등유사명칭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 취지는 이러한 엄격한 관리체계에 따라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가 아니면 제약등유사명칭을 사용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소비자의 오인을 방지하려는 것¹³⁾이라고 할 것인바, 만약 제약산업법에 따른 제약기업으로서 의약품제조업자등이 아닌 자의 경우에도 그 상호 중에 제약등유사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고 본다면, 연구전담요원 5명 이상을 상시 확보하고 있는 독립된 연구시설(제약산업법 제2조제2호라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호)을 갖추는 등 일정한 요건만 갖추면 약사에 관한 엄격한 관리체계에 따른 요건을 갖추지 않고서도 제약등유사명칭을 사용할 수 있게 되므로, 「약사법」에서 제약등유사명칭사용 금지규정을 둔 입법취지에 반하는 결과가 되어 타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신약연구제약기업으로서 의약품제조업자등이 아닌 자는 「약사법」 제87조의2에 따라 그 상호 중에 제약등유사명칭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질의

질의 요지

(법제처-22-431 / 회신일자 2022. 10. 21.)

장애인 의무고용인원 산정 시 “근로자의 총수”에서 특정활동(E-7)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외국인 근로자 수를 제외할 수 있는지(「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제1항 등 관련)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장애인고용법”이라 함) 제2조제5호 본문에서는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장애인고용법 제28조제1항에서는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그 근로자의 총수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하 “의무고용률”이라 함) 이상에 해당(그 수에서 소수점 이하는 버림)하는 장애인을 고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장애인고용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고용하여야 하는 장애인의 수(이하 “장애인 의무고용인원”이라 함)를 산정할 때 “근로자의 총수”에서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 제20호에 따른 특정활동(E-7) 체류자격(이하 “E-7 자격”이라 함)에 해당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수를 제외할 수 있는지?¹⁴⁾

13) 2016. 12. 2. 법률 제14328호로 일부개정되어 2017. 12. 3. 시행된 「약사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참조

14) 해당 업종은 건설업이 아니고, 해당 외국인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에 해당하며, 장애인고용법 제2조제5호 단서 및 같은 법 제28조제2항 전단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전제하고, 이하 같음

회답

장애인 의무고용인원을 산정할 때 장애인고용법 제28조제1항의 “근로자의 총수”에서 E-7 자격에 해당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수를 제외할 수 없습니다.

이유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 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¹⁵⁾ 장애인고용법 제28조제1항에서는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그 근로자의 총수”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고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그 근로자”란 해당 조문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가 고용한 근로자를 말하는 것이며, 같은 법 제2조제5호 본문에서는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서는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근로제공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므로,¹⁶⁾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제외하고 있지 않은 이상 그 외국인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다면, 해당 조문을 인용하고 있는 장애인고용법 제2조제5호 및 같은 법 제28조제1항의 “근로자”에는 외국인 근로자가 포함된다고 보아야 하고,¹⁷⁾ 장애인고용법 제2조제5호 단서에서도 근로자에서 소정근로시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미만인 사람(중증장애인은 제외한다)은 제외한다고 하고 있을 뿐, 그 밖에 장애인고용법령에서 “근로자”에서 출입국관리법령에 따른 특정한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외국인 근로자를 제외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바, 이를 종합하면, 장애인고용법 제28조제1항의 “근로자의 총수”에서 E-7 자격에 해당하는 외국인 근로자가 제외되지 않는다는 점은 문언상 명확합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예외 규정은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며, 예외 규정의 해석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원칙으로 돌아가야 하고 예외 규정을 확장해석해서는 안 되는데,¹⁸⁾ 장애인고용법에서는 제28조에 따른 의무고용인원 산정 시 포함하는 근로자 총수 및 장애인 수의 예외를 규정하려는 경우 같은 법 제79조제1항과 같이 “제28조에도 불구하고”라는 문언을 사용하여 규정하거나 같은 법 제79조제3항과 같이 ‘특정한 사람을 근로자 총수 및 장애인 수에서 제외’ 하도록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는바, 이와 같이 명문으로 제28조에 대한 예외가 규정되어 있지 않은 이상 이 사안 의무고용인원을 산정할 때 E-7 자격에 해당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수를 “근로자의 총수”에서 제외하지 않는 것이 예외 규정의 엄격해석 원칙과 장애인고용법의 규정체계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15)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

16)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18다277570 판결례 참조

17)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6다53627 판결례 참조

18) 대법원 2020. 5. 28. 선고 2017두73693 판결례 참조

19) 해당 외국인 근로자가 보험가입을 신청한 경우는 「고용보험법」의 전부를 적용함. 「고용보험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3제2호나목 참조

한편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단서 및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호에 따르면 E-7 자격에 해당하는 외국인 근로자는 같은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고, 「고용보험법」 제10조의2제1항 본문에서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외국인 근로자에게 「고용보험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E-7 자격에 해당하는 외국인 근로자에게는 고용보험이 의무적으로 적용되지는 않으므로,¹⁹⁾ 이러한 특수성을 고려하여 이 사안 의무고용인원을 산정할 때 장애인고용법 제28조제1항의 “근로자의 총수”에서 E-7 자격에 해당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수를 제외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은 외국인근로자를 체계적으로 도입·관리함으로써 원활한 인력수급 및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제1조), 「고용보험법」은 고용보험의 시행을 통하여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 및 근로자 등의 직업능력의 개발과 향상을 꾀하고, 국가의 직업지도와 직업소개 기능을 강화하며, 근로자 등이 실업한 경우에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근로자 등의 생활안정과 구직 활동을 촉진함으로써 경제·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데(제1조) 비해, 장애인고용법은 장애인이 그 능력에 맞는 직업생활을 통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바(제1조), 각각의 법률은 서로 다른 목적에 따라 그 규율 내용을 달리 하고 있는 것이므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과 「고용보험법」에서 E-7 자격에 해당하는 외국인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는 이유로 장애인고용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근로자의 총수”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 의무고용인원을 산정할 때 장애인고용법 제28조제1항의 “근로자의 총수”에서 E-7 자격에 해당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수를 제외할 수 없습니다.



최근시행법령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 9월 1일 시행

법령 1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의 예측가능성 및 보험료 부과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역가입자의 소득 기준 보험료부과점수 산정 방식을 ‘소득구간별 등급에 따른 점수 부여’에서 소득 1만원당 일정한 점수를 부여하는 ‘소득금액 기준’으로 변경하고, 지역가입자의 재산 기준 보험료의 부담을 낮추기 위하여 재산에 대한 기본공제액을 확대하는 등 지역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부과체계를 합리적으로 개편하는 한편,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산정 시 ‘보수를 제외한 소득’ 기준 공제금액을 연간 3,400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줄이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형사소송법」 일부개정, 9월 10일 시행

법령 2

형사소송법

검사는 송치요구 등에 따라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송치받은 사건 등에 관하여는 동일성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만 수사할 수 있도록 하고, 수사기관이 수사 중인 사건의 범죄 혐의를 밝히기 위한 목적으로 합리적인 근거 없이 별개의 사건을 부당하게 수사하는 것을 금지하며, 다른 사건의 수사를 통해 확보된 증거 또는 자료를 내세워 관련 없는 사건에 대한 자백이나 진술을 강요할 수 없도록 하는 한편,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수사결과 불송치결정을 받아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주체에서 고발인을 제외하려는 것임.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9월 11일 시행

법령 3

이러닝(전자학습) 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4차 산업혁명과 더불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가 불러온 언택트 시대의 도래로 발전된 과학 기술을 접목시킨 다양한 이러닝 콘텐츠를 통한 수준 높은 교육의 실시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이 법의 목적에 이러닝 활성화를 통한 교육의 질 향상을 추가하고, 인공지능, 가상현실 및 증강현실 관련 기술을 활용한 학습방식을 이러닝의 정의에 포함시킴으로써 최신 형태의 학습법을 포괄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이러닝 산업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제고하기 위하여 정부가 이러닝 사업자의 개인정보 보호실태를 점검하고, 개인정보 침해 예방에 필요한 컨설팅 지원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도록 하려는 것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9월 15일 시행

법령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계약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반적인 계약 방법에 따라 경우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혁신적인 물품·사업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한시적(限時的)으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별도의 기준·절차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는 시범특례 제도를 도입하여 혁신적인 신기술·신산업의 조달시장 진출을 지원하고 국가계약 제도의 유연성을 높이는 한편, 계약상대자가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공사 등에 관한 계약상의 의무 일부만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전체 계약보증금에서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을 제외한 나머지를 국고에 귀속하도록 하여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국적법」 일부개정, 10월 1일 시행

법령 5

국적법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복수국적자가 국적 선택 기간 내에 국적 이탈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유를 불문하고 병역의무가 해소될 때까지 국적 이탈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은 국적 이탈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헌법재판소 2020. 9. 24. 선고, 2016헌마889)의 내용 및 취지를 고려하여, 주된 생활의 근거가 외국에 있는 복수국적자에게 적용되는 예외적인 국적 이탈의 허가 절차를 신설함으로써 현행 규정의 위헌성을 제거하는 동시에 국적 이탈의 자유라는 사익과 병역의무 이행의 공평성 확보라는 공익의 조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도로교통법」 일부개정, 10월 21일 시행

법령 6

도로교통법

현행법의 보행자를 유모차, 보행보조용 의자차, 노약자용 보행기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구·장치를 이용하여 통행하는 사람으로 확대하여 보행안전을 제고하고, 현행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대상에 그 밖에 어린이가 자주 왕래하는 곳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장소를 추가하고, 노인·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대상을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전체로 각각 확대하여 사회적 약자에 대한 교통안전 확보를 강화하며,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는 도로에 대한 보행자의 통행방법을 개선하여 보행자의 통행우선권이 보장되도록 하는 동시에 해당 도로에서 차의 운전자로 하여금 보행자를 보호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하여 보행자의 교통안전 확보를 더욱 강화하고, 자율주행시스템과 자율주행자동차의 정의규정을 신설하고, 자율주행자동차 운전자의 준수사항과 그 위반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하여 현행법이 자율주행자동차에도 적용되도록 하며, 외국에서 취득한 외국면허증만으로도 국내에서 운전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외국인의 국내면허증 교환·발급 시 외국 운전면허증 회수를 상대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등 일정 경우에만 하도록 하여 운전면허 상호인정 협상에서 우리측 선택의 폭을 넓혀 합의를 용이하게 하며 해외에 있는 국민의 운전면허증 관련 편의를 제고하려는 것임.

타자치단체 최근 제개정 자치법규

1 인천광역시 가사근로자 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 조례

[시행 2022. 6. 16.]

- 제안이유** 공공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을 예방하고 안전한 화장실 이용을 도모하여 시민의 편의와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조례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용어를 정의함.(제2조)
 나.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제3조)
 다. 지원계획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5조 및 제6조)
 라. 가사근로자 등에 대한 지원사업을 규정함.(제7조)
 마. 가사근로자 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 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9조)
 바. 협력체계 구축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제12조)

2 광주광역시 공동주택 기술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 2022. 7. 8.]

- 제안이유** 공동주택 공용부분 시설보수공사 시 입주자 등의 전문성 부족으로 발생하는 공사비 과다 산정, 부실공사 등의 피해 예방, 시설보수공사의 방법·범위·시기 등 자문을 통해 공사비 절감 및 공사 품질 향상효과를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
- 주요내용** 가. 공동주택 기술자문단 지원 운영분야 규정 (안 제3조)
 나. 자문단의 구성에 관한 사항 20명 이내, 임기 2년 규정 (안 제4조)
 다. 기술자문 대상 및 자문 제외 대상 규정 (안 제5조제6항)
 라. 신청 및 관계서류 제출, 자료요청, 결과보고 등 규정 (안 제10~12조)

3 강원도기록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22. 6. 30.]

- 제안이유**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조례에 위임한 강원도 소관 기록물의 영구보존 및 관리를 위한 강원도 기록원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 주요내용** 가. 강원도기록원 설치·운영, 업무, 관리 대상 (안 제1조 ~ 제5조)
 나. 강원도기록관리위원회 설치·운영, 구성 (안 제6조 ~ 제11조)
 다. 기록물평가심의회 설치 (안 제12조)
 라. 민간기록물 수집, 대상, 방법 (안 제13조 ~ 제15조)
 마. 민간기록물 수집요원 (안 제16조)
 바. 도지정기록물의 지정·해제, 보존·관리 (안 제17조, 제18조)
 사. 보존기록물의 활용 (안 제19조 ~ 제21조)

4

광주광역시 아동·청소년 교통지원 조례

[시행 2022. 4. 26.]

제안이유

최근 개인형 이동수단의 보급 확대로 이용자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나 이에 따른 이용자의 사고위험이 높아지고, 관련 법적 근거 미비로 인해 이용자가 보호받지 못하는 실정으므로,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함.

주요내용

- 가. 개인형 이동수단의 이용안전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제1조)
- 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개인형 이동수단의 정의에 대해 규정함(제2조)
- 다.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여건 개선을 위한 시책 개발에 대한 시의 책무와 시민의 안전한 이용에 대해 규정함(제3조)
- 라.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안전 증진계획의 수립·시행에 대하여 규정함(제4조)
- 마. 개인형 이동수단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한 사업추진 등에 대해 규정함(제5조)
- 바. 개인형 이동수단의 이용 안전 증진을 위한 시범사업 실시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제6조)
- 사.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안전 증진을 위한 안전기준 마련 및 배포에 대해 규정함(제7조)
- 아.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안전 증진을 위한 사업 추진 시 의견수렴과 실태조사 실시에 관해 규정함(제8조)
- 자.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안전 증진을 위한 효율적·체계적 사업추진 관련, 협력체계 구축에 대해 규정함(제9조)

5

제주특별자치도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22. 10. 26.]

제안이유

「제주특별자치도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22.4.19. 제정, ’22.7.20. 시행)에서 부실공사신고센터의 기능을 제주특별자치도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와 통합 운영할 수 있게 함에 따라 신고센터 통합 운영 사항을 본 조례에 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에서 「제주특별자치도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에 따른 부실공사신고센터의 기능을 통합 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 신설(안 제19조제2항)

6

창원시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 2022. 10. 26.]

제안이유

해체 신고 대상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주변 여건상 안전한 해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체 허가를 받도록 「건축물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한 건축물 해체 허가 대상을 정하여 해체공사 현장의 안전을 확보하고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고자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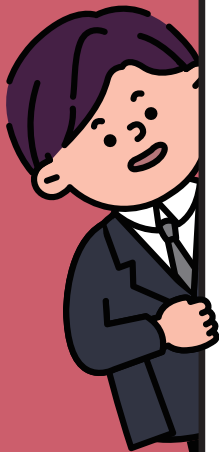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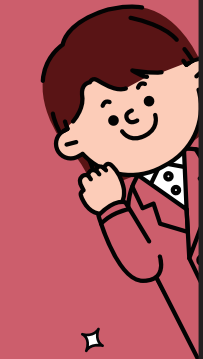
주요내용

- 가. 건축물 해체 시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를 정함(제8조의2)
 - 1) 건축물 외벽으로부터 해당 건축물의 높이에 해당하는 범위 내에 버스정류장, 신호등이 있는 횡단 보도, 육교 및 지하도 출입구가 있는 경우
 - 2) 건축물 외벽으로부터 건축물의 높이에 해당하는 범위 내에 폭 20미터 이상의 도로가 있는 경우
 - 3) 지하유류탱크 시설과 인접하여 지하층 건축물을 해체하는 경우
- 나. 건축물의 해체공사 허가 과정에서 해체계획서 등을 보다 철저히 검토하기 위하여 지방 건축위원회에서 해당 사항을 심의하도록 법이 개정됨에 따라 건축물의 해체계획서가 불합리하거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창원시 건축구조전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창원시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의 규정을 삭제함(부칙 제3조)



의원 발언함

제77회 임시회와
제78회 정례회 기간 중
의원별 주요 발언 내용을
살펴봤다.



의원별 발언 내용은 전자 임시 회의록을 참고했으며, 지면 사정과 문맥에 따라 발언 취지와 의도에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내용 중략 등 일부 수정되었다는 점을 알립니다.

〈편집자 주〉



김광운 윤리특별위원장

세종시 시설관리공단 예산 전용 사례에 대해

행사운영비를 봉안당 중도 해지 환불금으로 해 주고 위탁관리비를 환불금으로 해 주고 이것도 그냥 마음대로 전용하셨네요. 용도에 맞게 사업을 하라고 분명히 할 건데 이해가 안 돼요. 행사운영비를 봉안당 중도 해지 환불금으로 준다? 돈을 용도에 맞게끔 해서 1년 사업을 하는 건데, 분명히 말 그대로 봉안당 중간 해지가 있는 걸 은하수공원 생기고 나서 알았을 건데 그 예산을 안 세워 놓고 중간에 이거를 다른 위탁관리비를 전용해서 중도 해지 환불금을 지출해 주고. 그래도 대중은 통제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정도 예산은 감안하셔서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면 예비비라도 갖고 있다든지. 다른 거를 전용해서 쓸 게 아니라.

미래전략본부의 2차 추경 예산 편성에 대해

10월 25일부터 10월 28일까지 3일 동안 참가비가 1,200만 원이고 조성비와 부스로 1,200만원 해서 2,400만 원을 잡았어요, 추경으로. 이게 갑작스럽게 하는 행사는 아니잖아요. 해마다 하는 행사를 추경으로 해서, 이게 만약에 추경 예산에 안 세워 주면 어떻게 할 뻔했어요? 이거 더군다나 10월 25일이면 며칠 안 남았어요. 하여튼 잘 고민하시고 뭐든지 낭비되지 않게끔 미리 준비를 하셔야 해요.



김동빈 의원



김영현 의원

환경복지국의 생활자원회수센터 직원 식사 공간에 대해

생활자원회수센터 갔을 때 업무 보고도 받았던 곳이기도 한데 가슴 아프다고 할까요. 일하시는 분들 사실 굉장히 힘든 일을 하고 계신 거잖아요. 세종에 있는 쓰레기를 다 나눠서 처리하고 계신데, 직원분들 식사하는 공간을 보고 조금 화도 나고 마음도 아프고 했었습니다. 휴식 공간이나 식사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개선됐으면 좋겠고….

문화체육관광국의 국제 및 전국 규모 체육행사 유치에 대해

골프 국가 상비군, 세종특별자치시 배점 부여 대회가 있었어요. 충북 지역에 있는 세레니티CC라는 곳에서 실시했거든요. 세종시에서 골프를 하는 선수로 등록된 초중고 학생들이 지역에 세종CC도 있는데 그 대회를 충북에서 해서 거기에 돈을 주고 했어요. 세종시 내에 잘 만들어져 있고 이용하기 좋은 체육시설들을 적극 활용해서 전국 대회나 기타 대회 등을 많이 유치해서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세종시의 이미지 제고와 홍보에 기여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재형 의원



김충식 의원

보건소의 하수구 방역에 대해

하수관로가 작은 관로도 있지만 버스가 지나다닐 만큼 큰 관로도 있습니다. 차량이 지나다닐 정도. 그런데 그곳에 봄이나 여름이나 가을 정도 되면 거기에서 깔따구나 하루살이들이 엄청 나오거든요. 주민들이 거기에서 하도 많이 나오니까 하수구를 전부 덮어 놓습니다. 그래서 방역을 자주 해 줬으면, 우리가 그런 것 때문에 민원이 들어와서 관로에 들어가 보면 벽에 전부 다 모기가 있습니다. 방역을 꼭 분기별로 해 주시든지 아니면 한 달마다 해 주시든지.

교육청 교육행정국의 면 지역 학교 통폐합 정책에 대해

교육청이 혼자 일을 하다 보니 문제 해결 능력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사기업이나 공기업이나 국가 기관이나 협업을 잘 통하면 모든 문제가 더 많이 해결될 수 있어요. 면 단위의 기업을 유치하거나 아니면 다른 공공기관을 유치해서 인구가 늘어날 수 있고 그러면 학급 수도 늘어나서 학교를 꼭 없앨 필요가 없겠지요. 어차피 우리가 80만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면 단위까지 가는데 현재는 고령인 구박에 없다는 말이지요. 면 단위가 살아남으려면 공장 등을 유치해서 양질의 일할 수 있는 사람, 그다음에 돈을 쓸 수 있는 인구를 유입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협업을 할 때 우리가 상생하고 살아남을 수 있는 대책이 나온다는 겁니다.



김학서 제2부시장



김현미 의원

세종시청 공직자들에 대한 인권 교육에 대해

저는 인권이 기반이 되는 행정이 우선될 때 시민에 대한 존중과 배려가 함께 간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시청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청 안에서 직원들에게 인권이 기반이 될 때 직원들의 업무 만족도도 높아진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국장님한테 부탁을 드린다고 하면요, 최근에 세종시 인권에 대한 실태조사 그리고 직원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서 좀 구체적인 방안들을 마련하고 질 높은 세종시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민안전실 소관 세종시 방독면 보유량에 대해

방독면 보유량이 전국 최저입니다. 61.3%로요. 이게 충남이나 전북, 경남, 경북 같은 경우는 110%, 111% 이미 넘어서고, 경기도나 충북이나 제주도는 90%를 넘어서서 방독면을 보유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 굉장히 낮거든요. 예산 부분은 타 시도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그런데 선제적으로 어느 정도 일정량을 보유했다는 것은 위급 상황에 어느 정도 대처하는 자세가 돼 있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아울러 폐기 연한이나, 내구연한이 된 방독면 숫자가 많이 나올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을 잘 체크해서 저희가 정말 언제 전시상황이 될지 모르는 부분 그리고 시민안전실이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하는 만큼 잘 체크해서 갖춰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김효숙 의원



김현옥 의원

시민안전실의 최근 5년간 간주처리비용 비율 증가에 대해

최근 5년간 예산편성 현황을 보니까 간주처리비용이 지속적으로 지금 늘어나고 있는데요. 의회의 고유 기능인 의결을 거치지 않은 간주처리비용이 2020년도에 81억 7,600만원, 2021년도에 96억 1,300만원 이런 식으로 간주처리가 된다는 것은 사실 좀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간주처리 비용이 늘어나는 것은 지방자치 원리에도 어긋나는 행위가 되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히 주의를 당부드리고요.

미래전략본부의 용역 추진 방향에 대해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용역을 하나 맡는 게 너무 힘들다.” 왜냐하면 성공적인 정말 쓸 만한 용역이 나오려면 관리 담당자가 애를 많이 써야 한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미래전략본부 같은 경우에는 사업이 명확하지 않고 용역에 의존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잖아요. 실제 업무를 맡고 계신 분들도 어려움이 많으실 것 같아요. 추진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고 기다려야 하고 계속해서 용역 발주하고 관리해야 하니까. 그래도 세종시의 미래를 열어 가겠다고 하고 계신 거니까 많이 애써 주셔서 그냥 통상적이고 관념적인 용역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게 나올 수 있도록 땀을 많이 흘려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박란희 제1부시장



상병헌 의원

제77회 본회의 개회사 중

지속적인 인구 유입은 2030년 세종시의 도시 완성에 필수 불가결한 요소입니다.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데에 필요한 시민들의 의견을 다각적으로 수렴해서 적기에 의회 차원의 대응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공동주택 일반 분양 시 거주자 할당 비율을 높여 시민들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고, 국회세종의사당 설치에 대비한 대중교통 중심의 대대적인 교통체계 개편과 대중교통 이용 무료화 역시 재정 여건 및 시민 여론을 고려해서 조속히 논의되어야 합니다. 또한 차별 없는 교육, 균등한 교육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학교시설 개선 및 확충도 정밀한 수요 예측을 통해 적기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아름중 제2캠퍼스 건립을 교훈 삼아 과밀·과대 학급, 원거리 통학이 더 이상 우리 학생들의 불편과 고민이 되지 않도록 정책적 해안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의 학교급식비 지원 사업에 대해

사실은 그냥 급식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뒤에는 우리 지역 농가 소득, 그다음에 수많은 일자리들, 심지어 이번에 교안위에서 살펴본 바로는 잔반 등 환경문제가 있습니다. 제공했던 음식물들은 다시 쓰지 않는다가 학교의 원칙이더라고요. 그게 굉장히 많을 텐데 우리가 지원해야 할 어려운 분이나 단체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이런 음식물들이 말하자면 싱싱한 거지요. 그런 식재료들이 사실은 어디로 흘러가는지 종합 검토를 할 상위 기관이 필요한데... 큰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조금만 신경을 기울이면 굉장히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재원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해서, 사회복지와 연계도 조금 더 챙겨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안신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여미전 의원

세종시 사회적기업 운영 지원 방향에 대해

만약에 자체 플랫폼을 이용한다고 하면 구매할 수 있는 것까지 연결하는 게 좋고 ‘그렇게 하면 더 많은 사회적기업을 유입시키고 여민전 카드를 씌므로 인해서 할인 혜택을 주면 우리 세종시민들이 이용하기에 더 좋지 않을까’라는 부분도 생각해 봤고 다른 한편으로는 소셜 인터넷 판매 업체가 있잖아요. 그쪽을 연계해서 판매해 보는 건 어떨까 이런 고민을 해 봤는데... 289개소를 설치한 것도 중요하지만 그분들이 현장에서 잘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해 주는 것 또한 중요하고요. 행정 처리나 위생 점검이나 등등 어려운 점이 많았는데 이것을 적시 적소에 물어보면 바로 대답해 줄 수 있는 창구가 많이 부족하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셨어요.

세종시의회 회의장 출입 문제에 대해

회의 규칙 제90조에 보면 회의장 출입의 제한이라고 되어 있어요. ‘회의장 안에는 의원, 관계 공무원, 그 밖에 의안 심의에 필요한 사람과 의장 또는 위원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77회 임시회를 할 때 실제로 출석을 요하는 관계 공무원 이외에도 다른 공무원들이 회의장 안에 동의를 받지 않고, 허가를 받지 않고 들어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무처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의안의 시기를 지키게끔 한다거나 이런 회의장 안에 들어오는 행위들에 대해서 강력하게 시그널을 보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유인호
의화운영위원장

윤지성 의원

공공건설사업소의 부실공사 방지 조례 운영 현황에 대해

예전보다는 건축자재나 건축기법이 굉장히 선진화되고 발전되어 있는데 왜 부실공사의 비중이 더 늘어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복잡한 공정보다 오히려 출발점에서 하자율이 가장 높습니다. 우리가 권한은 없다고 할지라도 의견은 분명히 표출할 수 있거든요. 요즘은 기술력이 떨어져서가 아니라 ‘법에서 이 부분은 안 해도 된다’라는 근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생략된 부분이 많아요. 법적으로 시의 권한 유무를 떠나서 각 공정마다 가장 기본인 첫 출발점 그런 곳은 가 볼 수가 있잖아요, 그렇지요?

교육청의 세종꿈마루 사업 진행 과정에 대해

애초에 공모 계획상 공모 조건에서 학교 구성원의 주체적 참여로 세종꿈마루추진공동체와 학습공동체를 구성해야 한다고 나와 있고 세종꿈마루추진공동체는 학생을 포함하여 구성해야 한다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집현종의 경우에는 이 학교가 2022년 3월 1일에 개교했던 말이에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선정 절차는 2021년 12월에 했고요. 학생이 빠져 있잖아요. 애초에 공모 조건인데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아이들의 생각이나 이런 것들이 반영이 안 된 거잖아요. 조건에 맞지 않고 이 사업에 맞지 않는 학교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특혜를 주신 거지요, 이거는.

이소희
교육안전위원장



이순열
산업건설위원장

환경녹지국의 배출가스 저감장치 사업에 대해

이 사업이 사고이월로 이어지고 있는데 사업설명서를 보시면 반도체 때문에 신차 출고가 늦어지기 때문에 시민분들이 기존에 타던 경유차를 어쩔 수 없이 계속해서 타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럴 수록 배출가스 저감장치는 수요가 더 많아야 하잖아요. 그런데 설치 업체는 일주일에 한두 번 만나 기도 어렵고 자부담도 50만 원 이상 든다면데요. 관내 저공해 미조치 차량이 3천대가 넘는데 이게 엇박자라는 거예요. 시민분들이 적극적으로 신청하게끔 업체와의 만남도, 저감장치를 부착할 수 있는 기회를 시가 앞서서 만들어 줘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환경녹지국의 탄소중립 사업 중 민관 협력 방안에 대해

전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처장이 세종환경교육 대표하고 있고 전 녹색구매지원센터 국장이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처장하고 있고. 지속협의랑 지속협의 위탁하는 기후환경네트워크랑 녹색구매지원센터 가지고 약간 독점하는 식으로 되어 버린 거예요. 충분히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어요. 다른 단체랑 시민들한테도 앞으로 충분히 기회를 주시라는 말이에요.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보조금 단체 감사 결과 보니까 그중에서도 관련 단체들끼리 행사하고 민간 참여 없다는 것도 지적받았는데 이게 홍보의 문제라고 감사에는 지적되어 있던데 이게 단순히 홍보의 문제는 아닌 것같이 보여요. 세종시 인구가 40만에 육박해요. 무슨 말이나면 다양한 시민 인재들이 대거 유입됐다는 뜻이에요. 구조적으로 다시 처음부터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이현정 의원



임채성
행정복지위원장

보건복지국의 민간 위탁 관리·감독의 중요성에 대해

수년간 우리 시에서 가장 큰 보조금을 받고 위탁을 하는 경우 아니겠습니까? 공공의 영역에서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위탁을 민간에다 주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공공의 영역에서 해야 되는 부분이예요. 하지만 여러 가지 여건, 재정적인 것들, 상황적인 부분들 이런 것들이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공공의 영역에서 민간으로 위탁을 주는 거잖아요. 그런 민간 위탁 시설 관계자분들은 시민분들과 직접 맞닿아 계신 분들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사소한 부분들까지도 관리·감독을 해 줘야지 모든 것들이 우리 시민들에게 좋은 복지정책으로 다가갈 수 있다는 말씀 드리는 겁니다.

문화체육관광국의 촬영 명소 등 관광 자원화 계획에 대해

업무 능력의 한계가 분명히 나올 건데 제 의견으로는 영상 콘텐츠 촬영장 유치에 관련한 위원회를 만드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 방송사나 영화 제작 관련한 회사에 우리가 먼저 콘택트를 하는 거지요. 잠깐 지나가는 촬영지가 아니고 세종시가 메인 무대가 되는 촬영지를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예산을 써도 좋으니까, 공무원분들의 능력으로 한계가 있다면 관련 위원회를 만드는 거고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저는 적극적으로 장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원석 의원

언론에서 본 의정활동

세종
시의회



大田日報

2022년 07월 25일
04면 (정치)

안정적 회기 운영 운힘 세종시의회

세종시의회가 시급한 민생 현안 해결을 위해 안정적인 회기 운영에 주력하는 데 나섰다. 24일 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제77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지역 경제를 활성화와 시의 미래 전략 대책을 수립하는 조직 개편을 골자로 한 '시정 조직 개편안'을 시급히 처리했다. 여야 모두 경제부시장의 필요성에 대해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만큼 소관 상임위원회의 회의와 본회의 의결까지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쳤다는 입장이다. 미래전략본부 신설도 행정수도 및 자족도시 완성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적합하다는 공통된 인식을 바탕으로 했다.

각 상임위원회도 소관부서 업무보고 청취와 상정안건 심사 등 본격적인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의회운영위원회는 지난 22일 제2차 회의를 열고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협의의 건' 등 6건을 심사했다. **조은솔 기자**

(11.0*6.2)cm

NEWS

[대전일보] 22. 07. 25



세종시의회 금강보행교 현황 점검 30일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이순열) 위원들이 세종시 상정시설인 금강시설 관계자로부터 보행교 현황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지난해 3월 완공 개통된 금영영권은 조영간 한국토지주택공사(TH)에서 세종시로 이관될 예정이다.

[금강일보] 22. 08. 31



세종시의회가 78회 정례회 개막을 앞두고 14일 의정활동방향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 김정호기자

시의회, 오늘부터 정례회 돌입

NEWS

[충북일보] 22. 09. 15.

언론보도
스크랩

[중앙매일] 22. 10. 14.

중앙매일

2022년 10월 14일
06면 (지역)



유럽한인총연합회 회장단, 세종시의회 방문 후 기념촬영 모습.

유럽한인총연합회 회장단 세종시의회 방문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상병현 의장은 지난 11일 의회청사를 방문한 유럽한인총연합회 회장단(회장 유제현)과 상호 협력 및 교류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날 상병현 의장은 유럽한인총연합회 회장단과 만난 자리에서 세종시의 탄성 배경과 향후 도시 조성계획 등을 소개하고 유럽지역 내 한인회 등 재외동포 상황과 유럽 각국 도시와의 교류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상병현 의장은 "특별히 세종시에 많

은 관심을 갖고 방문해 주신 것에 감사하며, 시의회 차원에서 재외동포의 권익 신장과 도시 발전을 위한 국제교류에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유제현 유럽한인총연합회장은 "세종시가 대한민국의 행정수도로써 성장하길 바라며, 유럽 각국의 도시들과도 활발한 교류·협력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한인회 차원에서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세종 / 김정연 기자

(11.7*13.7)cm

“분원 아닌 국회 전부 세종으로”

세종시의회 ‘국회 전부 이전’ 결의안 채택

세종시의회는 15일 제78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김형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정치·행정 효율화를 위한 국회 전부 이전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결의안에는 입법부와 행정부 이원화에 따른 비효율을 해소하고, 세종시가 국가 균형발전을 선도하는 행정수도로 거듭날 수 있도록 국회의사당 전부 이전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번 결의안 채택에 따라 세종시의회는 “국회분원 설치시 예산 낭비와 비효율적인 정치·행정 이원화 논란이 지속될 것”이라며 “국회 분원이 아닌 전부 이전을 요구한다”는 입장을 공식 발표했다.

또 결의안에서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은 여의도 국회의사당의 1.9배

에 달하는 면적에 1조4263억원이 투입되는 대형 사업”이라며 “미국 워싱턴 D.C. 캐나다 오타와, 호주 캔버라 등 해외 주요 행정수도를 살펴봐도 정치와 행정 이원화 사례는 전무하다”고 강조했다.

세종시의회 전 의원은 ▲국회 전부 이전을 전제로 ‘국회 세종의사당’ 기본계획 수립용역’ 추진 ▲정부예산에 ‘국회 전부 이전 건립 비용’ 추가 반영 ▲개원을 비롯한 세종시의 행정수도 법적 토대 마련을 위한 노력을 촉구했다.

세종시의회는 ‘정치·행정 효율화를 위한 국회 전부 이전 촉구 결의안’을 국회의장과 국무총리, 행안부장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등에 제출했다.

세종=김공태 기자
(11.7·12.2cm)

[충북일보] 22. 09. 16.

충북일보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
조치원중·해밀초 현장 방문

NEWS

[충북일보] 22. 08. 08.

충청매일

2022년 08월 31일
08면 (지역)



세종시의회 산전위, 현장 점검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이순열)는 시민의 목소리를 현장에서 듣고 주요 현안에 대해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매일 ‘찾아가는 현

[충청매일] 22. 08. 31.

忠清日報

2022년 08월 16일
13면 (지역)

세종시의회, 조례실효성 제고
148건 2차 입법평가위원회의

세종시의회는 지난 11일 조례 입법평가 연구용역 결과 심의를 위해 2차 입법평가 위원회의를 했다고 밝혔다.

조례 입법평가는 현재 시행 중인 조례의 입법목적 실현성 등을 평가해 조례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세종시에서는 올해 처음 시행됐다.

이번 입법평가 대상조례는 제·개정 후 3년 이상 경과된 조례 148건(세종시 조례

[충북일보] 22. 08. 16.

충청투데이

세종시의원들, 지역 발전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 냈다

김효숙 미래전략본부장 방청생 정립
김충현 상하기관 혁신·위원회 장비
김현록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설치
유인호 전기차 보조금 확대 제안
김동빈 개발·연구의 주민지원 확대

세종시의회 의원들이 15일 제78회 임시회 1차 본회의 자리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지역발전을 위한 다양한 목소리를 쏟아냈다.

김효숙 의원(나성동)은 세종시 조직개편으로 신설된 ‘미래전략본

미래를 이끌 전략과 계획수립이 가능한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세 가지 문제를 언급했다. 각 실국별 주요 업무가 미래전략본부로 이관되면서 직무 연관성과 조직 균형감 상실, 직원 사기 저하는 물론, 상당수 사업이 타 부서와 협업해야 하는 구조여서 자칫 조직 내 육상육을 형성할 수 있다는 것. 또한 기획조정실이 엄연히 존재하는 상황에서 역할 중복의 우려마저 있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김충현 의원은(조치원읍)은 “세종시 상하기관 혁신을 통한 경영 효

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위원회 장비 방관으로 조례에 근거한 위원회의 경우 원칙적으로 폐지 또는 통합 운영하고 위원 수를 최소화하며, 법령에 따라 설치되었지만 회의 개최 절차가 없는 위원회의 경우 비상설화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에 법령 개신 건의를 제안했다.

김현록 의원(세종동)은 “장애인 구강 건강권 보장을 위한 권역별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설치”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장애인에게는 비장애인에 비해 구강 관리가 쉽지 않고

충청투데이

세종시의회 상임위원회 운영 내실화 나선다

상행원 의장 “의원 및 전문위원 역량 강화 다양한 지원”
유인호 의회운영위원장 “의원 간 소통 강화해 협치 강화”
임채성·이순열·이소화·안신일 위원장도 최선 약속

제4대 세종시의회 상임위원회 운영 내실화에 적극 나선다.

상행원 의장은 3일 언론 브리핑을 통해 “지난 5월 우리 의회 자원에서 의원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심사하기 위한 ‘전문위원

강화하는 한편, 상호보완하고 균형있는 위원회를 만들겠다”며 “시민에게 유익한 정책이라면 정파를 떠나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협업하겠다”고 강조했다.

임 위원장은 “다양한 연구활동과 의원 개인적 역량 강화를 통해 시민들의 복리후생을 위한 정책을 개발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또한 시민에게 직·간접적으로 권력이

[충청투데이] 상단: 22. 09. 16. 하단: 22. 08. 04.



[충북일보] 22. 09. 28.

충청투데이

세종시의회 행감 돌입

2022년 09월 28일
13면 (지역)

상임위원 현장 방문 시작
산전위, 도시재생사업 3개소 등 방문
행복위, 마을기록문화관 시설 점검
교안위, 장영실고 학사 현황 파악

세종시의회 각 상임위원회가 26일 현장 방문을 시작으로 2022년 행정사무감사에 돌입했다.

세종시의회 의원들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세종 시민의 삶을 업그레이드 할 다양한 대안 마련에 혼신의 힘을 쏟을 계획이다.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26일 현장 방문을 시작으로 10월 4일까지 6일간 2022년 행정사무감사

을기록문화관(연동면)과 세종문화예술회관(조치원읍), 세종장애인복지회(조치원읍), 종촌종합복지센터(종촌동)를 방문하는 순서로 진행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들은 연동면에 위치한 마을기록문화관에서 주민자치 기록물의 수집과 관리, 공유와 활용 등에 대한 설명과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고 전시실 및 휴게공간 등의 시설 현황을 점검했다.

임채성 위원장은 “현장방문을 통해 시민들의 주민자치, 문화예술, 복지행정 등을 제공하는 주요 시설을 직접 확인 및 점검하고 문제점이 있으면 집행부에 개선을 요구하겠다”며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평소 불편하고 부족한 부분 등이 시

세종시의회 제79회 정례회 일정 안내

2022년 11월

30	31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1	2	3

제79회 정례회(35일간)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시정 및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 11.14.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및 청취

2023년도 본예산 및 2022년도 조절추경 예산안 심의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처리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 11.25

2022년 12월

27	28	29	30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2023년도 본예산안 의결 및 조례안 기타 안건 처리: 12.15

회기운영 본회의

※ 기본일정은 의정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세종시의회 운영 미디어 채널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시민들과 원활한 소통을 위해 온라인 미디어 채널을 운영 중입니다. 홈페이지와 유튜브, 페이스북을 통해 본회의와 상임위원회 회의가 생중계되고 있으며, 유튜브에서는 각종 홍보영상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시민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홈페이지



<https://council.sejong.go.kr/>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councilsejong>



유튜브



<https://www.youtube.com/c/세종특별자치시의회>



16 독자 투고 안내 99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소식지 <세종의회소식>에서는 시민 여러분의 원고를 기다립니다.
이웃과 함께 나누고 싶은 따뜻한 이야기나 감동적인 사연, 시의회 방청 및 방문을 통해 느낀 점,
<세종의회소식>이 진열된 사진과 함께 소식지를 읽은 소감, 의회에 바라는 글 등을 보내주시면
소중히 하겠습니다.

※ 증명사진 및 관련 사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보내주세요. 채택된 글에 대해서는 소정의 고료를 드립니다.
원고분량: 200자 원고지 10내 내외



보내실 곳

우편 (우)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세종특별자치시 의회사무처 2층 의정담당관 소식지 담당자 앞

전화 044-300-7248 팩스 044-300-7219 이메일 havnpark@korea.kr



인터넷 방송

QR코드를 통해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만나보세요!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인터넷방송>을 볼 수 있습니다.

인터넷방송 보기 counciltv.sejong.go.kr



세종시의회소식
세종시의회 10년
시민의 미래, 세종의 미래

발행처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사무처(홍보기획담당)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전화 044)300-7248
홈페이지 <http://council.sejong.go.kr>

